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10. 21.(수)~**10. 22.**(목) 10:00 ~ 17:30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목차 Contents

▶ 교육개요 ····· 5

Day 10. 21.(수)

01.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기본소득의 의미 ····· 11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02. 사회연대경제의 재발견 ····· 51
윤봉란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3.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트렌드 ····· 93
김진석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04. 사회연대경제 협업 성공사례 분석 ····· 115
정지영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Day 10. 21.(수)

05.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 133
라서현 대표 (주식회사 라인교육연구소)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교육개요

- **과 정 명 :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 교육목적 :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활성화하는 정책·사업 기획 역량강화, 지역 현안 등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가능한 협력모델 도출
- 참여대상 : 농촌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 교육인원 : 30명(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지역 대상 및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 선발)
- **교육일정 : 10. 21.(수) ~ 10. 22.(목) / 1박 2일**
- 교육장소 :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 주　　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전북연구원)
- 협력기관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 추진방법 : 집합교육(강의 및 워크숍)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출석시간 기준)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30명	10. 21.(수) ~ 10. 22.(목)	1박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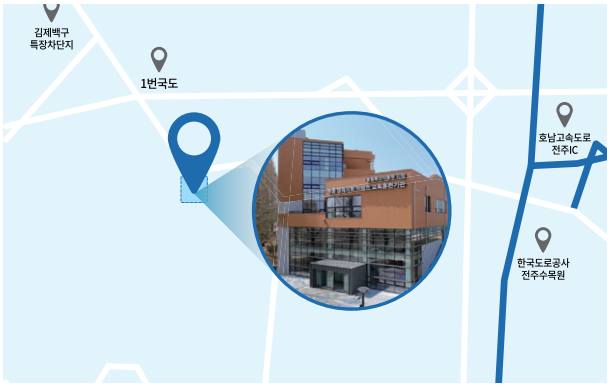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농업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북연구원(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하고(25.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준공한(25.3.) 전문교육시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

교육내용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
10.21 (수) 7h	10:00~10:10	10'	• [교육안내]	박정훈 전담교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10:10~12:00	110'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기본소득의 의미]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13:00~15:00	120'	• [사회연대경제의 재발견] -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사회연대경제 주요 운영사례	윤봉란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15:00~16:30	90'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트렌드] -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김진석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16:30~18:00	90'	• [사회연대경제 협업 성공사례 분석] - 기본소득.지역화폐를 활용한 운영모델 등	정지영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10.22 (목) 6h	10:00~12:00	120'	•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1 : 지역 생활 수요.소비흐름 진단 및 사업기회 발굴] - 지역 생활수요 및 서비스 공백 진단 - 사회연대경제 기반 사업기회 발굴 및 핵심의제 선정	라서현 대표 (주식회사 라인교육연구소)
	13:00~15:00	120'	•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2 :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협력모델 구체화]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아이디어 구체과 - 참여주체별 역할 및 협력모델 설계 (5인1팀 구성)	
	15:00~17:00	120'	• [부서 간 칸막이 넘기 : 민관 협업구조 및 실행체계 설계] - 협업 장애요인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 민관 역할분담 및 실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17:00~17:10	10'	• [종합 정리]	박정훈 전담교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참고 : 교육시설 안내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영상리 572-1) / 063-770-6000





층별안내	
지하 1층	• 전기실, 기계실
1층	• 101호 사무실, 102호 사무실, 103호 사무실, 교육생 휴게공간(카페테리아)
2층	• 201 대회의실, 202 소회의실, 203 강의실, 204 강의실, 205 강의실, 206 강의실, 207 물품보관실, 208 강의실
3층	• 301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사무실, 302 강사대기실, 303 사무실, 옥상정원
4층	숙박공간(401~409호), 다용도실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기본소득의 의미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2026. 10.21.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미와 지역사회 대응과제

Jthink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원회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위원

순 서

1. 농촌사회현실, 진단과 과제
2. 농촌기본소득, 사업개요
3. 농촌기본소득, 변화와 성과
4. 농촌기본소득, 주요사례
5. 농촌기본소득, 대응과제
6.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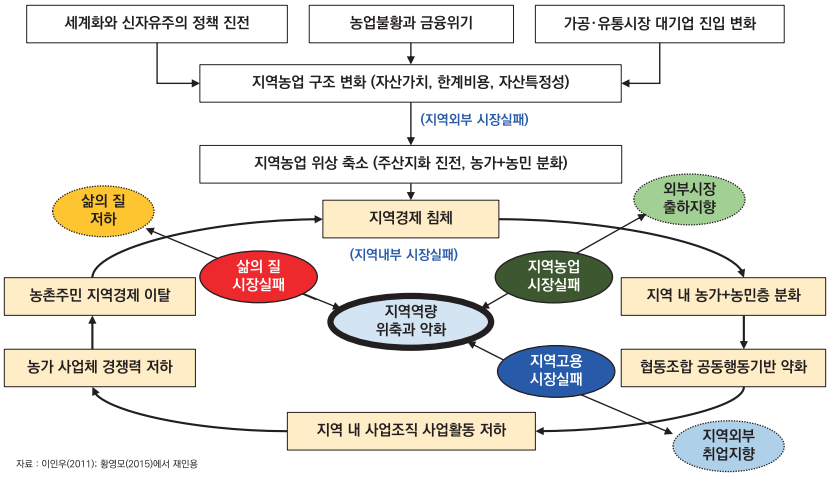
이 자료는 황영모(2026), ‘전북자치도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기초과제, 미발간(11월발간 예정)에서 작성하였음

1

농촌사회 현실, 진단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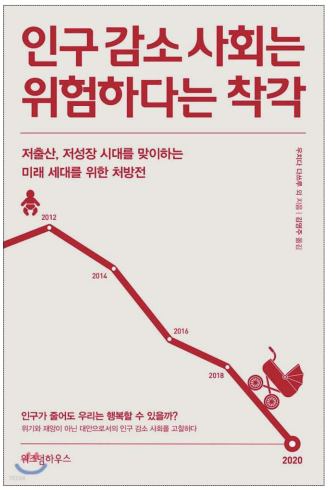


1. 농촌지역 사회위기의 구조



자료 : 이인우(2011); 황영모(2015)에서 재인용

2. '축소사회', 과연 '위험'한가?



* 저자 : 우치다 다쓰루 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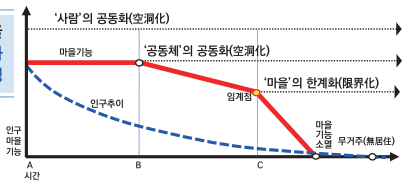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화하는' 방법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
태평양 전쟁 지도부와 똑같은 사고방식
최악의 사태를 외면하는 현실
후퇴할 때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는 무엇인가

대응 ↔ 적응

1.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호모사피엔스 역사로 보는 인구동태와 생존전략
2. 두뇌자본주의가 온다-저출생보다 심각한 인공지능시대의 문제
3. 인구감소 실상과 미래 희망-간단한 통계로 '공기'의 지배에서 탈출할수 있다
4.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 시대-무연의 세계에 유연의 장소 만들자
5. 축소사회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유럽 사례로 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
6. 건축이 도시와 지방 살릴 수 있다- 따뜻하고 번잡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7.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문화 통한 사회포섭 권유
8. 도시와 지방, 먹거리로 연결되다-'관계인구'를 창출한 공동체 혁명
9. 인구 예측 그래프의 덫-저출생을 둘러싼 여론 배경에 존재하는 '경영자 시선'
10. 뜨거운 근대는 끝났다-'사양의 일본'을 위한 현명한 안전보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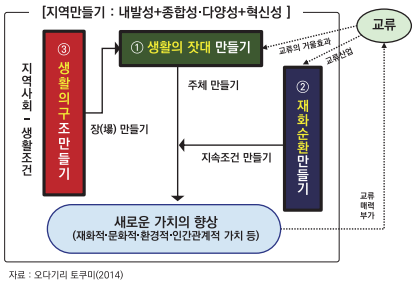
3. '농촌사회'가 살아남는 조건

농촌마을 기능악화 진행과정



지역만들기 기본구조 작동방식





자료 : 오다기리 토쿠미(2014)

● **지역만들기 '중심축', 생활의 구조 만들기**

① '생활의 잣대' 만들기 : '사람+리더+긍지' 공동화(空洞化) 심화 → 지역학(지역만들기), 도농융합상생, 긍지의 재건
② '생활의 구조' 만들기 : 공동(公同) 생활·노동·영농 위기 삶의질 악화 → 지역연계 커뮤니티, 물리적 생활 조건
③ '경제적 순환' 만들기 : 기업 합리화·철수, 공공사업의 감축 불안정 → 지역자원 활용 경제구조+주민소득을 보장하는 지역경제

● **지원정책 방향, '사람과 공동체'로 전환**

① (지원내용) 보조금(補助金) → 교부금(交付金)으로
② (지원대상) 재정지원(補助金) → 사람지원(補助人)으로
③ (지원주체) 중앙(中央)정부 → 지방정부+새로운 공공(公共)

2

농촌기본소득, 사업개요



1.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목적

시범사업 추진배경

- 지역경제의 침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 농촌지역 활력 저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 마련이 시급
  * 과소화(인구 3천명 이하) 읍·면 : ('00) 458개(전체 읍면의 32%) → ('25) 731개(52%)
  * 고령화율(통계청) : ('00) 14.6%(읍 9.5%, 면 18%) → ('24) 26.6%(읍 20.1%, 면 34.1%)

시범사업 추진목적

- 농촌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1)주민 삶의 질 향상, (2)지역경제 활성화, (3)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시범사업 추진방향

- 대상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 활력 증진 ← 정부·지자체가 지역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 병행
- 대상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정책효과 모니터링, 본 사업 방향 검토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 8 Jthink 전북연구원

2.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내용

재원과 지급대상

- 재원분담 :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 지급대상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지급절차와 사용기한

- 지급절차 :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읍·면 위원회, 매월 20일경) → 지급(군, 매월말)
- 지급시기 :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2일간) (매월 신청자의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익월 지급)
- 사용기한 :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

3. 농촌기본소득, 사용처

기본소득 사용처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 '지역사랑상품권법' 7조2항 및 관련 지침(행안부)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시 등록 제한(하나로마트 등)
- 지역공동체가 직접 운영 생활협동조합과 로컬푸드직매장은 매출액 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처 허용 가능
- 단, 사용처 부족한 면 지역 하나로마트가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지역 상생활동(이동장터 등), 사회적 기부 등을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농협 주유소·농자재판매장은 면 지역 내 다른 주유소나 농자재판매장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한도 내 허용 가능
- 지역 내 자본 순환이 거의 없는 주유소, 편의점은 사용한도 설정
- 지원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

구분	읍과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	읍과 면을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
읍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 합산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군비 추가분이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면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읍 내 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 합산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군비 추가분이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군비 추가분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6.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3.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형

일반형

- 해당 지자체 예산만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는 유형,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관내 소비 증진을 목적
- 특히 지역내 공동체돌봄(사회서비스) 인프라나 사회적경제 체계와 결합하여 소득 안정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험
- 순창군(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청양군(다-볼돔 사회서비스를 해온 지역), 남해군(청년유입 기반을 갖춰온 지역) 등이 해당

지역재원창출형

- 지역 공유자원 활용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유형(공유자원 수익 환원 유형)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재생에너지(햇빛·바람 연금)나 향토자원(카지노 배당금 등) 이익을 주민 협동조합이나 지자체 기금을 통해 전체 주민에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유형 → 외부 재원 의존도 낮추고 지속가능 자립형 모델 가능성 타진
- 신안군(햇빛바람연금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 실행), 영양군(대규모 풍력발전 기금 재원 활용), 정선군(강원랜드 투자 주식배당금 활용)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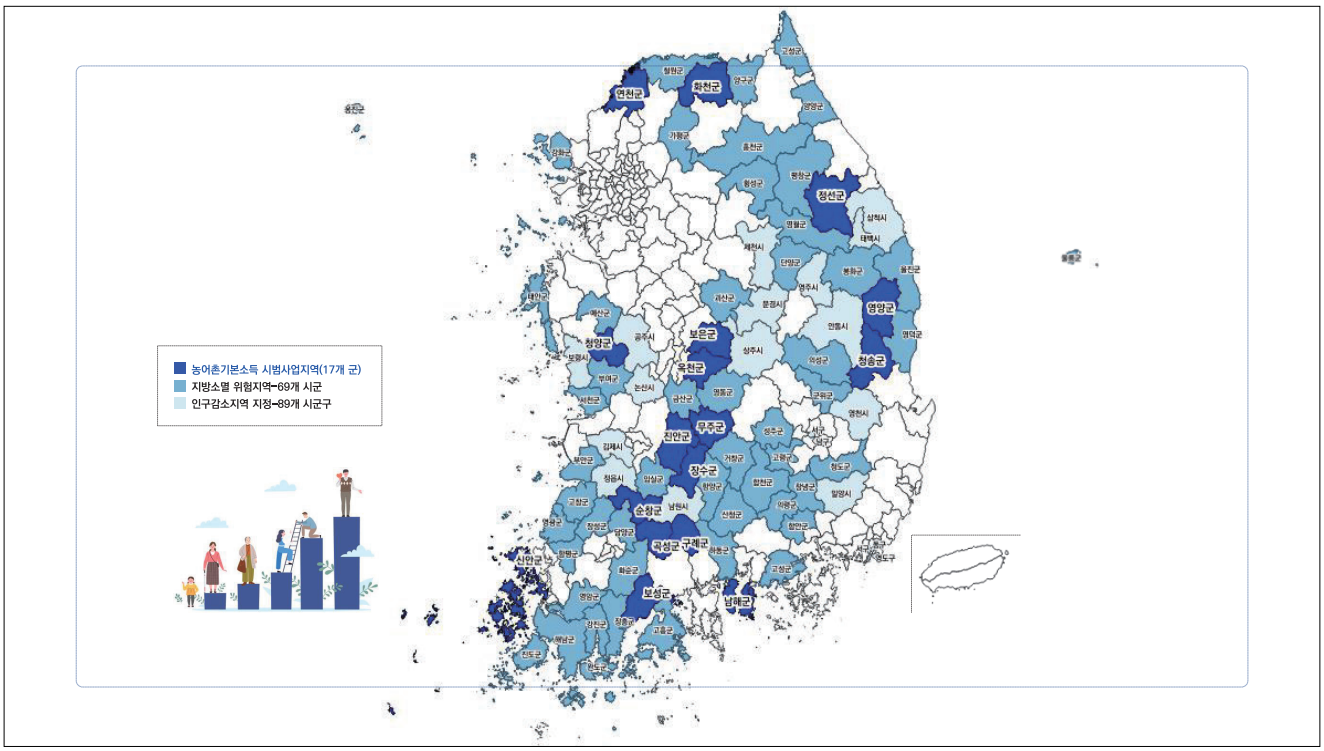
4.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지역	인구	지역별 주요 특성	선정
경기 연천	4.1 만명	· 농촌기본소득 최초 도입('22, 청산면) 등 경험과 연계 군 단위 확대 시 효과 면밀 분석 기대 ·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하,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	'25 10.20
충남 청양	2.9 만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다-돌봄' 사회서비스+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 기대 · 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내 소비 증진 운동 연계 순환경제 활성화 검증	'25 10.20
전북 순창	2.7 만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복지 확대, 정책연계로 인구유입 등 효과 선제적 증명 ·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지역(농가인구 42.5%, GRDP 농림어업 24.2%) 활력 제고 효과 검증	'25 10.20
경남 남해	3.9 만명	· 청년 유입기반 기 조성, 주민-소상공인-군 간 상호협력 체계, 기본사회 정책 연계 시너지 기대 · 수도권+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 정책효과 검증	'25 10.20
충북 옥천	4.9 만명	· 지역화폐 운영, 소비쿠폰 신청률·발행액 등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지역 ·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의 사업추진 역량을 토대로 기본소득의 지역사회 효과 검증	'25 12.2
전남 곡성	2.7 만명	· 기본소득 조례 제정, 기본소득 전담 행정조직 신설, 자체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완료 등 사업 착수 가능 · 이동마켓,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 활용 소비력 증대 특화모델 개발 계획	'25 12.2
전북 장수	2.0 만명	· 산악지역 소멸대응 효과 검증할 지역, 지역화폐 가맹률 91.9% 최고 수준 ·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등 소비 인프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특화모델 개발 계획	'25 12.2
충북 보은	3.1 만명	· 자체 추가재원 활용(+1만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순환 체계 기대 · 기본소득 접목으로 참여형공동체 운영 등 주민중심 공동체 회복효과 검증 · 액션그룹 기반 생활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모델+통합 추진 전략 등 제시	'26 6.10
전북 진안	2.4 만명	· 자체 기본소득 지급 군비 기 편성, 자체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 효과 검증 · 기본소득 활용 연대기금 조성, 창업지원, 재투자 등 4단계 선순환 모델 제시 · 산악지형+용담댐 규제 발전 제약, 농림업 중심 지역 기본소득 효과 검증	'26 6.10

4.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지역	인구	지역별 주요 특성	선정
전북 무주	2.2 만명	· 보전지역 비중 78.5% 상황에서 자체 기본소득 선제 시행('26, 연 8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등 지역 내 소비강화 및 순환경제 효과 검증 · 기본소득과 공유자원을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기대	'26 6.10
전남 구례	2.3 만명	· 기본소득과 연계한구례 3종 페이백(균형농특산물&면단위, 순환가맹점 간 B2B, 연대사회적경제 업종) 모델 운영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효과 검증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용한 연계 강화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검증	'26 6.10
전남 보성	3.6 만명	· 예산절감 및 자체기금 등을 활용한 자체 추가재원 활용 모델(+5만원) 제시 · 읍 집중 방지 위한 생활권별(A/B/C) 차등 캐시백 도입 등, 소비쏠림 완화 검증 · 지역사회서비스(주거,생활,건강,생활편의 등) 활성화 효과 검증 및 농촌재생 모델 제시	'26 6.10
경북 청송	2.4 만명	· 기본소득+지역화폐(캐시백, 구매 할인 등) 시너지 모델 제시, 지역 내 선순환 밸류체인 구축, 무료버스, 생활돌봄 플랫폼 사회서비스 활성화 효과 검증 · 초대형 산불 생활기반 피해, 정주여건 등 연계한 기본소득 도입 효과 검증	'26 6.10
전남 신안	3.9 만명	·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공유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모델 검증 · 주민협동조합-군 합의, 특정 주민 귀속 햇빛·바람 연금을 전체 주민 공유 · 천여개 섬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	'25 10.20
경북 영양	1.5 만명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MW) 조성,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지리적 폐쇄성 높고 인구 적은(1.5만명) 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25 10.20
강원 정선	3.3 만명	· 관광·서비스업 의존도 높은 고원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 강원랜드 투자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25 10.20
강원 화천	2.3 만명	· 산천어축제+지역자산 공유화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 접경지역+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로 발전 제약,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 · 기본소득 활용 민관협력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지역문제 해결형 방안 제시	'26 6.10

*주 : 인구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해당 지자체 사업계획에서 작성



3

농촌기본소득, 변화와 성과

2. 농촌기본소득, 일궈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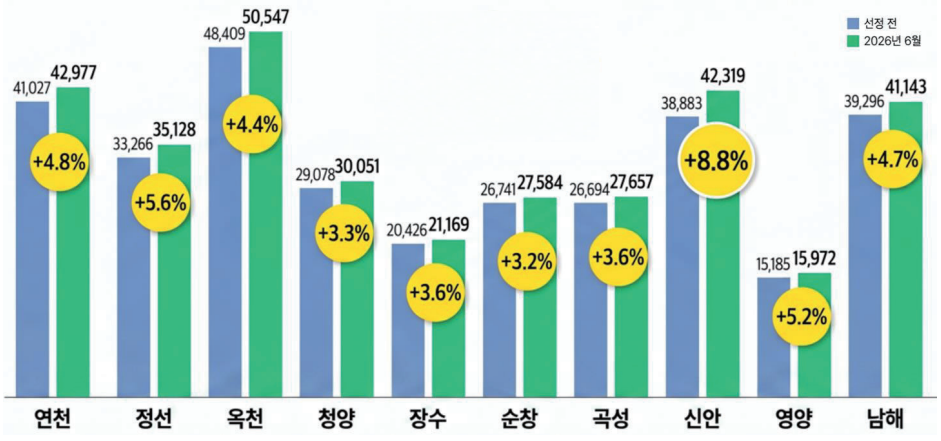
‘사람·인구’의 흐름·이동이 ‘반전’되다

- 10개 시범사업 지역 인구가 사업 선정 전월 대비 4.9% 증가(신안 8.8%, 정선 5.6%, 영양 5.2%, 연천 4.8%, 남해 4.7%, 옥천 4.4%, 장수 3.6%, 곡성 3.6%, 청양 3.3%, 순창 3.2%)
- 만성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안정감 확보와 유입 증가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인구 반등'의 계기로 작용 전망

〈〈시범사업 10개 군의 인구변화 흐름〉〉

지역		선정 전월	26년 6월	인구증가	증가율	지역		선정 전월	26년 6월	인구증가	증가율
경기	연천군	41,027명	42,977명	1,950명	4.8%	경남	남해군	39,296명	41,143명	1,847명	4.7%
강원	정선군	33,266명	35,128명	1,862명	5.6%	전북	순창군	26,741명	27,584명	843명	3.2%
충북	옥천군	48,409명	50,547명	2,138명	4.4%		장수군	20,426명	21,169명	743명	3.6%
충남	청양군	29,078명	30,051명	973명	3.3%	전남	신안군	38,883명	42,319명	4,436명	8.8%
경북	영양군	15,185명	15,972명	787명	5.2%		곡성군	26,694명	27,657명	963명	3.6%
전체	10개군	319,005명	334,547명	15,542명	4.9%						

주 : 선정시점('25.10.-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 '25.12.-옥천군·장수군·곡성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6.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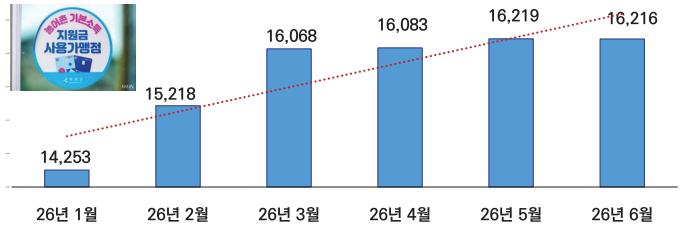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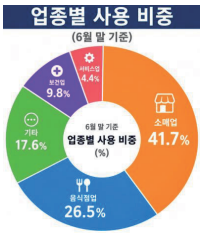
주 : 선정시점('25.10.-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 '25.12.-옥천군·장수군·곡성군)
자료 : 국가데이터처 및 각 지자체자료, 농민신문(2026.7.31.)기사에서 인용

‘골목상권’을 깨워 ‘경제활동’을 살리다

-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지급 이전 대비 13.8%(1,963개소) 증가, 슈퍼·구판장·생필품 가게 등 사라졌던 면 단위 가게들이 영업을 재개하거나 창업
- ‘면 단위 가맹점 우선 사용’이라는 ‘의도된 불편’은 읍내로 쏠리던 지역사회 소비를 면 단위 상권에 묶어 두면서 지역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

〈〈시범사업 10개 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 흐름〉〉





‘생활필요’가 ‘사회서비스’로 이어지다

- 개별 주민들의 구매력 증가는 시장과 공공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 주민 자치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생필품·돌봄 등 필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진화
- 기존 상점 품목 확장, 면 지역 소규모 창업(정육점·옷가게·슈퍼·생활돌봄조직 등), 이동장터·팝업장터·구판장 등 주민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작은 시장’을 형성

‘관계’가 늘어 ‘공동체’가 북적 거리다

- 작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일상 생활의 소소한 자유(텀블러 구매, 아이 새 옷 사주기), 받기만 하던 위치에서 ‘대접하고 선물하는 주체’로 관계 변화, 정기적 소득으로 삶의 계획성 확보
- ‘필요’를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필요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현실), 개인의 소비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약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도록 돕는 원칙으로 나타남
- 시장이 없어서 흩어졌던 농촌의 수요를 자발적으로 메우고 장터를 열며 상품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과 상인, 가족과 지역조직의 구체적인 ‘손’이었음

3. 농촌기본소득, 지원사업 의미

'개인'을 넘어 '공간' 전체 대상의 보편적 정책 실험

- 소득·자산·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보편 지급하는 공간 단위 보편적 기본소득,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 실험

소비처 제한과 지역화폐로 '지역순환경제' 작동 강제

- 지역화폐 지급과 생활권(면) 사용 제한, 외부 유출을 막고 구판장·정육점·미용실·로컬푸드·이동슈퍼 등 지역 내 1차 소비(B2C)와 2차 내부 거래(B2B)로 순환 촉진

기본소득을 매개로 '생활 필요 서비스' 연결과 확장

- 지역주민이 생활 상 필요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하여 사업·활동하는 대응전략으로 확산, 생활돌봄·이동·먹거리·주거·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매개로 연결

'농어촌·농촌주민'을 변두리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 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지역지킴이)의 지속가능한 정주 안전 매트'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고 귀촌 창업 등을 끌어내는 '사람·소득 중심' 질적 대응 전략으로 위치

4

농촌기본소득, 주요사례



1. 시범사업 지역 주요 활성화 사례

옥천군

동이면 석화마을협동조합 공동슈퍼 운영

- 면 지역 내 생필품 구매처 부족 문제 해소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협동조합이 공동슈퍼 운영 추진
- 석화마을협동조합이 공동슈퍼 개소하여 휴지, 라면, 세제,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 판매, 주민 주문 물품을 사전에 접수하여 공동식사일(토요일)에 맞춰 제공
- 단순 판매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교류하는 공동체 공간 역할 수행, 향후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이동형 슈퍼 운영 검토 중
- 기본소득 매출액 467만 원(26.3.14.~6.26.), 마을 및 인근 주민 생필품 구매 접근성 향상, 공동체 활동과 소비 활동이 결합된 마을형 소비모델 구축





옥천군

청성면 주민협동조합 신설 및 팝업장터 운영

- 군내 8개 면 중 면적은 가장 넓으나 인구는 적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음, 주민자치가 기본소득 실행 취지+목적이 같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청성면의 과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
- 청성팝업장터 5.14. 시작(지역 내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 냉동식품 등 판매, 월 2회 장터 운영)
- 청성팝업장터 기본소득 매출액 345만 원(26.5.14.~6.26.), 주민 주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평가회를 통한 발전방향 의견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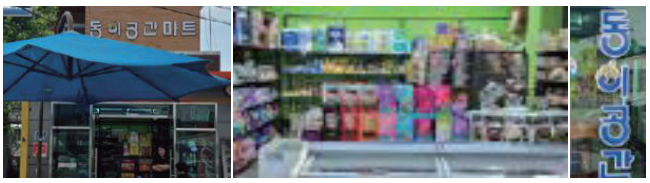




옥천군

동이면 생활형 마트 창업

- 작은 면 지역 특성상 기존 운영 오토바이 수리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 확대 가능성을 보고 생활형 마트 운영을 추가로 추진
- 기존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출 다변화를 위해 생활형 마트를 추가 개업, 오토바이 수리와 생활용품 구매가 가능한 복합 생활편의 공간으로 운영
- 기본소득 매출액 6,722만 원(26.3.27.~6.26.), 기존 수리업 외 신규 수익구조 확보, 면 지역 생활밀착형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옥천군

군북면 편의점·마트(소매점) 리뉴얼

- 기존 편의점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편의 중심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리뉴얼 추진
- 편의점 업종을 일반 소매점으로 변경, 주민 요청 물품 주민 및 배달서비스 운영, 고령 주민 중심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기본소득 매출액 1,208만 원(26.4.18.~6.26.), 사용 가능 품목 확대, 주민 생활밀착형 소비 서비스 제공



곡성군

골목상권 활력, 면단위 서비스 제공

- 폐업 빈 상가에 다시 가게가 문을 열다, 신규 창업 46개소, 기본소득 가맹점 신규 등록 17.8% 증가
- 마을로 찾아가는 효도 장터 : 면단위 이동 만물상(생필품 판매), 필요한 물품을 마을회관으로 배송
- 희망복지기동서비스+이동점빵 : 마을순회 복지서비스+생활서비스 통합운영(월~수-빨래방,목-복지기동서비스)
- 중앙사회서비스원 주관 복합사회서비스 운영 실증사업 '산들봄 프로젝트' 선정 : 고령과 취약 어르신 대상 공공마실+필요생활서비스 제공, 면단위 마을 가맹점 조성, 기본소득으로 돌봄+생활 서비스 구독, 사회연대경제 조직 서비스 제공 담당





연천군

생활 밀착업종 신규 창업 확대와 지원

- 생활 밀착업종 신규 창업 : 청산면 바벨러브(헬스PT), 백학면 한결헤어(미용실), 노인일자리 연계 연천 시니어팜
- 행복배달 소통마차(이동장터) : 식품과 생필품 싣고 마을 순회 판매, 복지 연계(건강,심리,위기가구 확인), 주민필요 물품 사전 접수 구매 배송
- 체감 UP 창업모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맞춤형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실습 중심 창업 보육 과정



순창군

유등사회적협동조합 '순창곳간'

- 군내 인구 최저 유등면(1,016명), 기초생활거점공간 활용, '26.3.9.개업, 일 매출액 3백만원, 복흥면2호점 개점
- 돼지+쇠고기+오리고기 판매, 로고쏭+마을로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 지역사회 환원사업(주민문화복지, 지역학교 살리기 등) 기여, 식육식당과 미용실까지 확장 준비



순창군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팝업 이동장터+장바구니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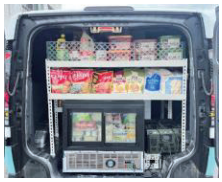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역량을 토대로 농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면 단위 사용처 부족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사업+활동조직 결성(조합원 24명)
- 2월부터 매주 금요일 장터 : 온라인 장바구니마켓 선주문, 매주 주민 수요 조사, 3월~6월 매출액 2,300만원
- 유정란, 순창콩두부, 수제 소시지, 양배추, 무농약토마토 / 지역 내 가공식품 포함 매주 품목이 다양
- 매월 풍구장터를 통해 순창군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연합의 장터를 개최
- 아날로그적 운영구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 발견 및 해결, 지치지 않게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 관건



순창군

식품사막화 해소,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마트

- 60 세 이상 48.9%, 면 지역 내 외곽 마을 식품 접근성 취약, PV5 활용 식품사막화 해소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
- 기아차(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순창군+행안부(복지·돌봄 연계 및 기반 조성),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 통합 생활서비스 플랫폼 : 순창군지역자활센터+지역마트(순창참좋은두부-콩두부, 초록농부-쪽파,마늘,시금치, 순창딸기농장-메론,딸기, 행복사랑-반찬 서비스, 백옥세차-세차서비스, 순창올크린-청소소독, 두레건축-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협력)


순창군

'순창상회' AI 로컬버트

- AI 버튼 로컬푸드 '순창상회' 런칭, 생필품을 집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자동 주문 후 기본소득카드로 결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간 협동조합 구성
- 고쳐줘 순창 홈즈(빈집수리 및 저주환경 개선), 든든해요 순창 돌봄(고령층 돌봄 서비스 및 왕진번스 운영), 함께 키운 순창살림(지역 활동가 및 청년 창업조직 육성)


AI 버튼 시스템(가정용)

2026년
30가구 시범사업
시범사업
면단위 시범지역 선정
마을과의 커뮤니티케어 협의
버튼 배포 및 부착
커뮤니티케어

순창군 기본소득사업 가맹점 연계
협동조합운영
순창상회 협동조합 운영
순창군 기본소득가맹점 등록
기본소득 카드 결제 운영
사회적 연대경제

2027년
데이터베이스+AI분석
3개월 데이터 축적
3개월간 주문데이터 수집
지역별,연령별, 주문상품별 통계 분석
AI 주문수량 예측 프로그램 안정화
지속가능성

확대 운영
3포스트, 확대
순창군 관내 3지역 구분
지역별 보관, 배송 시스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연계
지역비지니스모델

순창군

상생협력과 실행조직 육성

• 중간지원조직,농촌신활력플러스,사회연대경제조직,지역농협 등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 도모



장수군

행복싸롱 이동장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통 탑자(이동장터)+찾아가는 문화싸롱(콘텐츠) 식품사막화 대응 및 소비처 확대와 생활 서비스 연계

• AX 전환기술개발(R&D) 사업 대상지로 농촌 식품사막 해소 위한 자동공급+배송연계 먹거리 서비스 사업 추진



장수군

사계절 이로운 장터 Red-Food 직구마켓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단 운영, 지역 생산 농특산품 판매 직매장 조성 운영,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 연계 위탁 운영(상설 직거래 매장, 플리마켓, 레드푸드 특화행사 등)



장수군

기본소득 넘어 기본사회로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장수형 산촌 햇빛소득마을, 청년 창업 더하기 지원, 장수산업 사회연대경제활성화, 반할 주택 건립' 등 추진



2. 사업계획 내 사례 기준과 영역

자료성격, 비교단위, 해석원칙

- 자료성격 : 10개 군의 공모계획서에 담긴 대응·실행계획 검토
- 비교단위 : 사업명보다 해결하려는 공백과 돈·서비스의 흐름
- 해석원칙 : 계획·목표·추정치와 실제 집행 성과를 구분

영역	주요 문제	대응 수단
지역경제	외부 조달과 소비 쏠림	결제 관리, B2B 거래망, 로컬푸드
사회서비스	이동 제약과 공급 공백	복합 이동망, 생활돌봄, 실행조직
지역공동체	실행역량·신뢰·공동재원 부족	주민자치, 갈등조정, 공유부 기금

3. 소비 집중과 유출 대응

정선군: 소비 촉진과 가맹점 재사용 결합

- 95% 현금 → 가맹점 환전 시 현금 지급 몫, 5% 포인트 → 지역에서 다시 쓰도록 유도하는 재사용 몫
- 함께 제시한 지원 : 수수료 보전 0.15%, 가산 캐시백 0.25% 결합 계획 → 재사용 장치가 작동하려면 지역 안의 조달처가 필요하다

신안군: 가맹점의 다음 지출을 설계

- 주민의 소비 : 공공배달앱 먹깨비 연계, 로코노미 포인트 3~5% 환원 구상
- 가맹점의 재사용 : 다른 가맹점 결제에 재사용하면 월 상한 내 1% 캐시백
- 상권의 기반 : 전통시장 특화와 민간 주도 창업을 함께 연계

연천군: 로컬푸드 직거래의 병목 해소

- 문제 : 지역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영수증·세금계산서 문제가 거래를 막음
- 조직과 진단 : 지역농협의 중간물류·정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기획생산
- 소비와 연결 : 이용업체 인증, 지역 쌀밥집, 직매장·임시 가맹점 연계

정선군: 소비 촉진과 가맹점 재사용 결합

- 95% 현금 → 가맹점 환전 시 현금 지급 몫, 5% 포인트 → 지역에서 다시 쓰도록 유도하는 재사용 몫
- 함께 제시한 지원 : 수수료 보전 0.15%, 가산 캐시백 0.25% 결합 계획 → 재사용 장치가 작동하려면 지역 안의 조달처가 필요하다

신안군: 가맹점의 다음 지출을 설계

- 주민의 소비 : 공공배달앱 먹깨비 연계, 로코노미 포인트 3~5% 환원 구상
- 가맹점의 재사용 : 다른 가맹점 결제에 재사용하면 월 상한 내 1% 캐시백
- 상권의 기반 : 전통시장 특화와 민간 주도 창업을 함께 연계

연천군: 로컬푸드 직거래의 병목 해소

- 문제 : 지역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영수증·세금계산서 문제가 거래를 막음
- 조직과 진단 : 지역농협의 중간물류·정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기획생산
- 소비와 연결 : 이용업체 인증, 지역 쌀밥집, 직매장·임시 가맹점 연계

빈틈 업종을 채우는 창업과 이동마켓

- 연천군 : 미용실·정육점 등 필수업종 창업 지원과 행복배달 소통마차
- 장수군 : 소비처가 부족한 5개 면 우선 지원, 청년 이동 행복마켓
- 남해군·옥천군·곡성군 : 취약업종 가맹 등록 확대와 공실 활용 청년 창업 연계

유통 경로를 넓히는 계획

- 영양군 : 온심마켓 추가 할인·농산물 순회 수집·면 단위 배달 → 생산자의 출하와 오지 주민의 구매 접근
- 곡성군 : 토란·멜론·가루쌀 가공과 곡성몰 연계 → 지역 생산·가공품의 온·오프라인 소비

4. 사회서비스 확대 확충 대응

이동권이 소비의 출발점

- 연천군/순창군: 교통약자 차량,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등 이동수단 보완
- 신안군 : 어복버스·어복장터를 통한 의료·생활·행정과 순회 판매 결합
- 청양군·곡성군 : 주민 심부름꾼과 활력마켓 등 생활편의 서비스의 현장 전달

식사·집수리·세탁이 체감도를 높인다

- 청양군: 마을돌봄 파트너, 경로당 한 끼 밥상·꾸러미 공공급식 확대
- 순창군 : 집수리 프렌즈 등 주거환경 개선과 일상 편의 서비스
- 장수군 : 자활 집수리 사업단 확대, 이동 빨래방과 정기배송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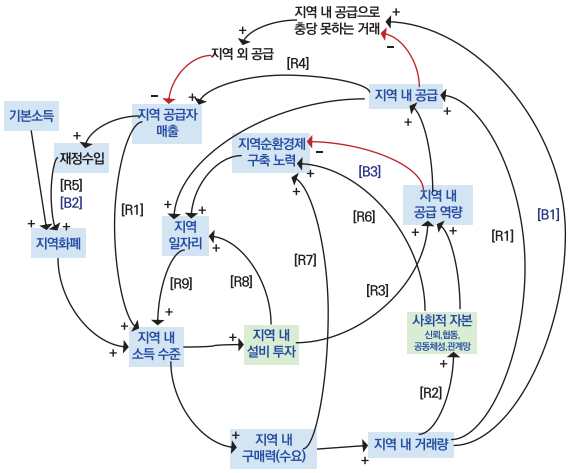
연천군: 로컬푸드 직거래의 병목 해소

- 문제 : 지역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영수증·세금계산서 문제가 거래를 막음
- 조직과 진단 : 지역농협의 중간물류·정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기획생산
- 소비와 연결 : 이용업체 인증, 지역 쌀밥집, 직매장·임시 가맹점 연계

5. 공유부 기금과 에너지 수익의 환류

방식	지역사례	지역으로 돌리는 경로
공공·유휴자산 활용	연천 평화 햇살 마을연금	전력 판매 수익과 지역화폐 배당
공동체 설비 지원	청양 햇빛발전소, 장수 햇빛소득마을	마을 공동기금과 공동복지
주민 동의·출자와 매칭	순창 모두의 햇빛 공유부 펀드	청년창업·돌봄 등 재투자
공동체 운영기금	신안 기금 출연 구상	복지·문화·돌봄의 공동재원

6. 기본소득 지역순환경제 인과 구조



자료 : 최인수(2014)를 일부 수정: 강남훈(2021),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만남,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의 가능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에서 재수정

기본소득 → 지역 소득수준 → 지역 구매력(수요) → 지역 거래량 증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승수 효과 LM3(Local Multiplier 3)〉〉

- Round 1 (최초 투입) : 농촌기본소득으로 지역에 지급된 총액(재원 투입)
- Round 2 (1차 지출) : 기본소득 받은 주민 지역 가맹점·소상공인에게 지출 금액
- Round 3 (2차 지출-지역 재지출) : 주민 지출로 매출을 올린 지역 기업·가맹점이 지역 내 고용 급여, 지역업체 계약(용역/상품 구매), 지역 내 임대료 등으로 재 지출

* LM3 :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개발한 지역경제 측정 도구, 돈이 지역 경제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3단계(3 Rounds)에 걸쳐 순환하는 과정을 측정하여 승수 효과를 산출

선순환 강화 고리(Reinforcing Loops: R1~R9)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의 소득+수요+투자+공급+사회적자본+재정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며 성장 모멘텀을 스스로 강화해 나가는 경제적 양(+)의 피드백 메커니즘

균형·제약 순환고리(Balancing Loops: B1~B3) → 시스템 내 음(-)의 피드백 작용으로 급격한 확장을 억제하거나 병목 현상 및 한계 요인을 조절하는 기제

7. 기본소득 지역순환경제 과제

순환의 깊이 (소비의 지역화 vs 생산·조달의 지역화)

- 소비 중심적 순환 : 기본소득으로 관내 시장에 돈 쓰게 강제하면 1차 순환 목적 달성했다는 시각(초기분석 용이)
- 생산·조달 중심적 순환 : 기본소득의 실질적 승수효과는 가맹점주가 지역 고용과 지역 내 원자재 조달을 해야 함
- 농촌경제구조 상 제조업+도소매 가치사슬 취약, 1차매출은 원자재 조달과정에서 외부 유출 많은 구조 판단 필요
- 정책초기 단편적 경기부양 효과(매출)에 착시 지양, Round 3 단계 가치사슬+B2B 결제망 고도화 방안이 관건

순환의 주체 (시장적 자율 유통 vs 사회연대경제 중심 사회적 조절)

- 시장·행정 주도적 순환 : 지자체가 유효기간+인센티브(캐시백) 정교 기획, 법정 가맹점 관리 행정 인프라 중심 순환
- 신뢰와 규범(사회적 자본) 기반 사회적 조절이 개입되지 않으면 외부 충격과 내부 갈등 상황에서 쉽게 붕괴 우려
-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내발적 순환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 민주적으로 조직된 주민 주체(사회연대경제+공동체)가 생산과 소비를 기획해야 한다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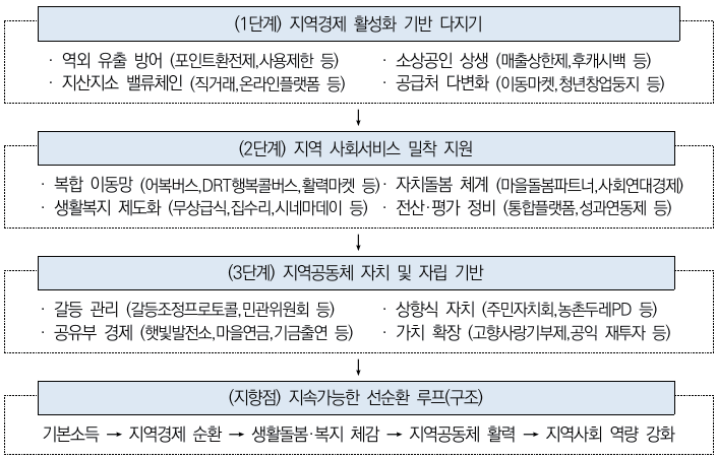
순환의 범위 (재정·공간 정책 vs 복지·부문 정책 관계)

- 공간 정책 우선 : 특정 지역 전체 보편적 재정 투입해 내수 유효수요 궤도를 인위적으로 형성이 우선이라는 시각
- 부문 정책 보완 : 농촌 구조적 생활수요 부족(의료,돌봄,교육,교통 등 기초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 사회연대경제·공동체 조직 등이 생활서비스 거점을 만드는 정책 결합 동반이 필수적, 순환 개념에 현금(지역화폐) 유통과 필수 사회서비스 내재화까지 포함 현실적(옥천군 안남면 사례-기본소득 공간 정책+사회서비스 결합될 때 효과 커짐 확인)
- 소득지원이 서비스 인프라 대체가 어려우므로 수요에 따른 공급력 강화, 커뮤니티케어, 공공서비스 강화 등 검토

지속가능성 (정부 보조금 의존 vs 공동체 자생력)

- 의존의 딜레마 : 농촌지역 순환 주체(사회연대경제·공동체 조직), 재정지원 일몰 후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갖을까
- 기본소득 의미 : 기본소득(지역화폐 예산)이 지역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촉진 수단인가, 다른 형태의 공공의존 방식을 고착화 할 것인가 순환체계 자립성 위해 주민자치 역량+사회적 자본 중심의 투자와 활동 등이 강조
- 순환체계가 외부재원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할 수 있는가(동역학적 쟁점), 주민자치 역량+사회적자본 투자 활동 강조

8. 주요사례 검토에서 찾는 공통 구조



5

농촌기본소득, 대응과제



1. 대응전제, 지역화폐·지역사회·지역주도

지역화폐의 '경제적 수단'

- 자본의 역외 유출 제한하고 읍면 생활권 내에 소비와 재지출이 순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기술적 방어선 구축

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

- 군 및 읍·면 단위 명확한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생활필요 서비스와 상권 유지에 직접 작용하도록 설계

'주민주도'의 전략적 과제

- 행정 주도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주민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스스로 필요를 사업화하는 내발적 자치 역량 확보

2. 경제적·사회적 순환의 3대 대응 방향

1단계: 진입 및 유출 차단

- 계층별·업종별 사용처 필터링을 통해 외부 유통망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상권에 고정

2단계: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 경제주체 간 직거래망과 B2B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한 필수 생활서비스 직접 공급 확대

3단계: 재투자 및 자산화

- 상권 활성화 성과와 이익을 지역상생기금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공유부 펀드를 통해 지역사회 자산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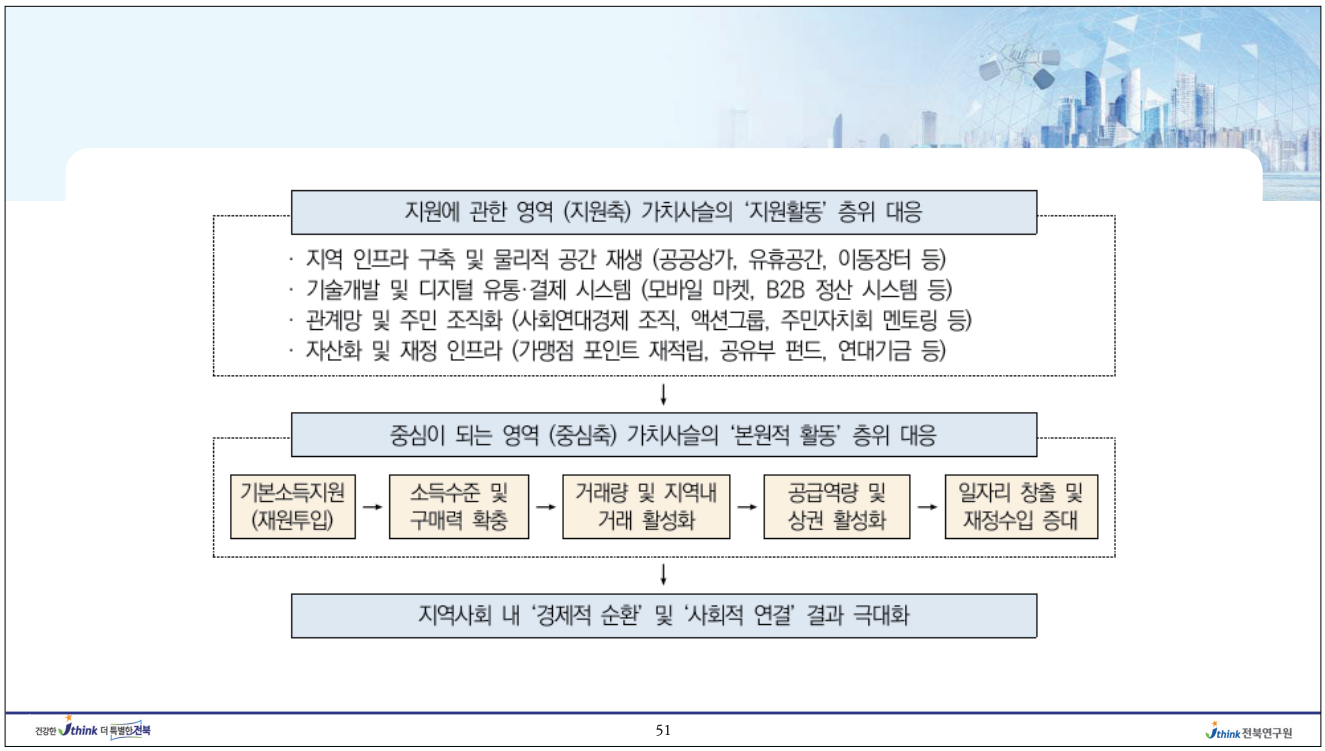
3. 가치사슬 이론 기반 구조

중심축 (본원적 활동)

- 기본소득 지원 → 가처분 소득 확충 → 지역 내 거래량 활성화 → 공급역량과 상권 활성화 → 일자리 창출과 재정 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가치 창출의 동맥

지원축 (지원활동)

- 물리적 인프라(유휴공간·이동장터), 디지털 기술(모바일 플랫폼), 인적 관계망(액션그룹·주민자치회), 자산화 제도(공유부 펀드)로 중심축을 탄탄하게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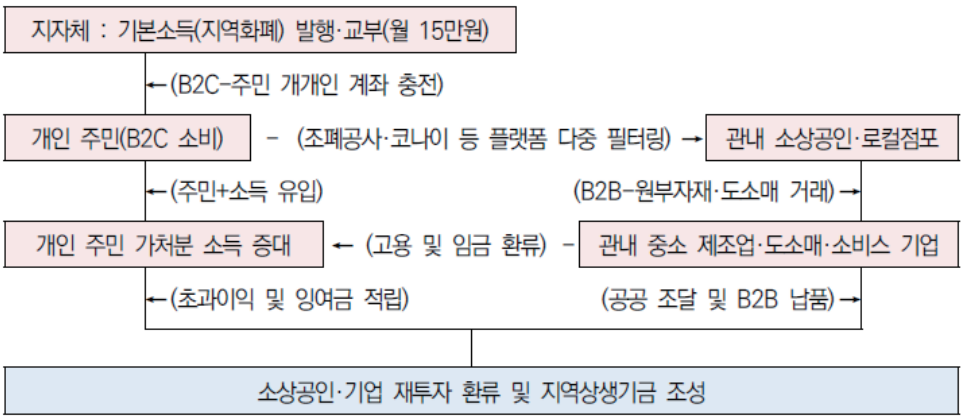
4. 순환루프의 구조: ① 경제적 순환루프

실생활 소비에서 B2B 조달로

- 주민 개인의 가계 소비(B2C)가 면 단위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고, 상점들이 다시 관내 도소매업 및 제조업과 원부자재 계약(B2B)을 맺어 자금이 내부에서 반복 회전

고용 창출 및 재투자 환류

- 가치사슬 확대로 신규 고용과 임금 소득이 늘어나며, 초과 이익 및 잉여금이 지역상생기금과 소상공인 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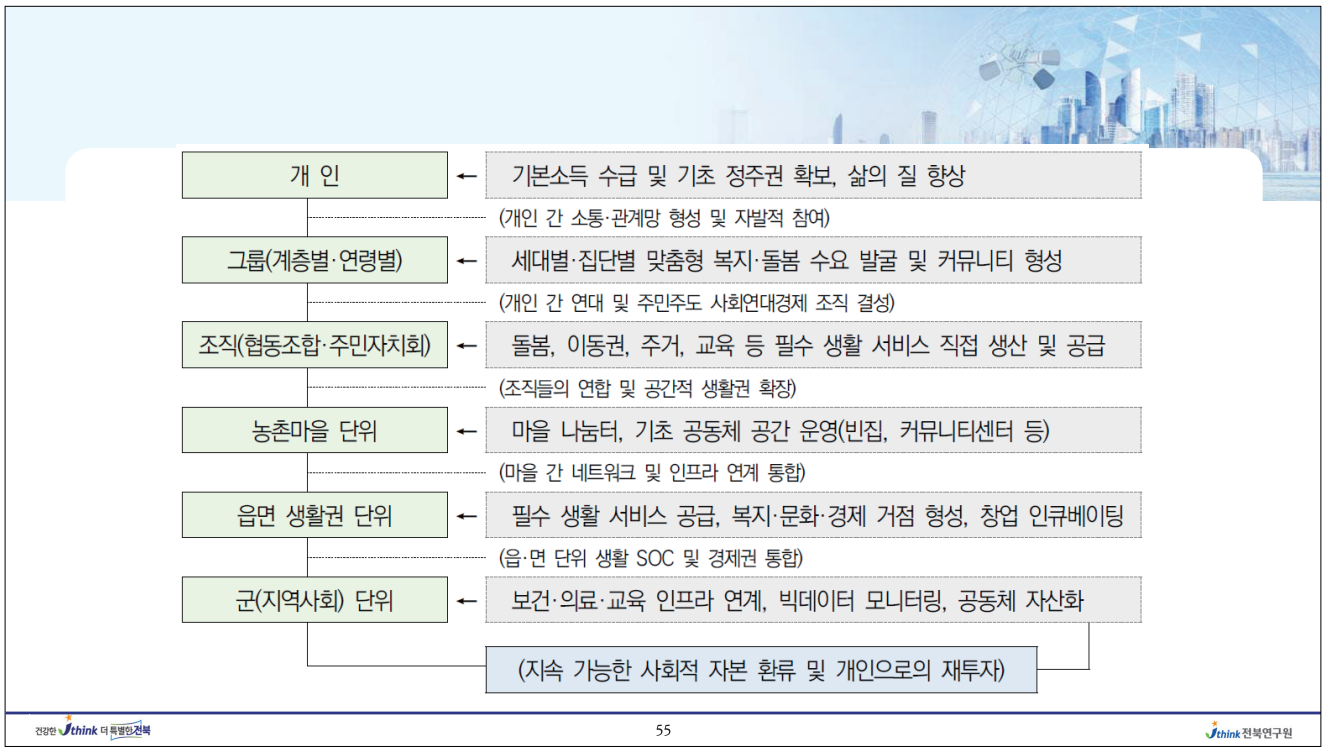
5. 순환루프의 구조: ② 사회적 순환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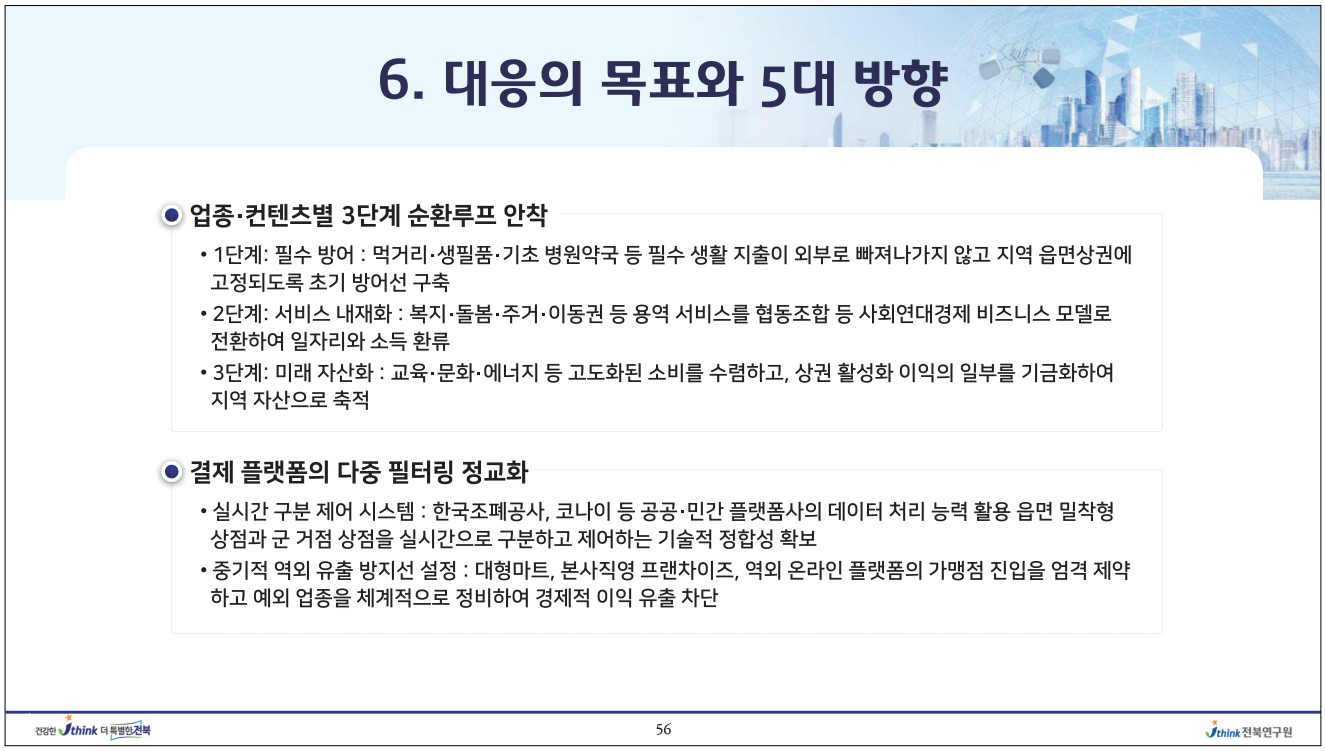
자발적 조직화와 서비스 공급

- 기본소득으로 일상에 여유를 얻은 주민들이 액션그룹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결성하여 이동권, 돌봄, 주거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

상호 호혜성과 자치 생태계

-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와 제공자 간 호혜성을 높여, 신뢰 자본과 자치 역량이 다중 위계(개인·마을·읍면·군)를 통해 영구히 순환


개 인
기본소득 수급 및 기초 정주권 확보, 삶의 질 향상
(개인 간 소통·관계망 형성 및 자발적 참여)
그룹(계층별·연령별)
세대별·집단별 맞춤형 복지·돌봄 수요 발굴 및 커뮤니티 형성
(개인 간 연대 및 주민주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결성)
조직(협동조합·주민자치회)
돌봄, 이동권, 주거, 교육 등 필수 생활 서비스 직접 생산 및 공급
(조직들의 연합 및 공간적 생활권 확장)
농촌마을 단위
마을 나눔터, 기초 공동체 공간 운영(빈집, 커뮤니티센터 등)
(마을 간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연계 통합)
읍면 생활권 단위
필수 생활 서비스 공급, 복지·문화·경제 거점 형성, 창업 인큐베이팅
(읍·면 단위 생활 SOC 및 경제권 통합)
군(지역사회) 단위
보건·의료·교육 인프라 연계, 빅데이터 모니터링, 공동체 자산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자본 환류 및 개인으로의 재투자)
55


6. 대응의 목표와 5대 방향
업종·컨텐츠별 3단계 순환루프 안착
• 1단계: 필수 방어 : 먹거리·생필품·기초 병원약국 등 필수 생활 지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읍면상권에 고정되도록 초기 방어선 구축
• 2단계: 서비스 내재화 : 복지·돌봄·주거·이동권 등 용역 서비스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일자리와 소득 환류
• 3단계: 미래 자산화 : 교육·문화·에너지 등 고도화된 소비를 수렴하고, 상권 활성화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지역 자산으로 축적
결제 플랫폼의 다중 필터링 정교화
• 실시간 구분 제어 시스템 : 한국조폐공사, 코나이 등 공공·민간 플랫폼사의 데이터 처리 능력 활용 읍면 밀착형 상점과 군 거점 상점을 실시간으로 구분하고 제어하는 기술적 정합성 확보
• 중기적 역외 유출 방지선 설정 : 대형마트, 본사직영 프랜차이즈, 역외 온라인 플랫폼의 가맹점 진입을 엄격 제약하고 예외 업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경제적 이익 유출 차단
56

지역 내 B2C-B2B 밸류체인 확장

- 내생적 밸류체인 연계 (B2C → B2B) : 개인 소비(B2C)가 소상공인의 도소매·원부자재 구매 및 지역 건설·시공업체와의 계약(B2B)으로 확장되도록 유도하여 파급효과 극대화
- 농촌특화 자원의 사업화 : 영농부산물 및 유휴공간 등 미활용 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 수준의 제조·가공업을 발굴 육성하여 부가가치 유출 최소화

다중 위계(개인·마을·읍면·군) 역할 분담

- 개인·마을 단위 : 실시간 구분 제어 시스템 : 귀촌인과 원주민 간 융화 도모, 소규모 나눔·돌봄, 빈집 활용 임시거주 공간 마련으로 기초 정주 여건 안정화
- 읍면 생활권 단위 :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형 마을택시 등 이동권 보장 및 창업 인큐베이팅
- 군 지역사회 단위 : 광역 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역공동체의 자산화 기금 운영 총괄

데이터 거버넌스와 이익 환류 체계

- 결제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 지역화폐 결제 빅데이터 분석 통해 자금의 정체 구간과 누수 포인트를 상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피드백 루프 가동
- 상생기금 조성 통한 초과이익 환류 : 매출이 늘어난 상권·상인회와 주민자치회 간 소통을 통해 초과 이익의 일부 자발적·제도적으로 환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7. 대응전략 전략 체계

(중심축) 순환경제 가치창출 및 서비스 공급	(지원축) 기술·인프라·주체 영역 뒷받침
〈전략 1〉 자금누수 방어 및 유통체계 · 다중 레이어 디지털 바우처(쿼터제) · 면 영세가맹점 후캐시백 및 B2B 도소매 · 자산지소 온·오프라인 밸류체인 연계	〈전략 4〉 이동 인프라 및 디지털 혁신 · 취약지 이동형 플랫폼(특장차) 공급 · 스마트결제 및 농촌 스마트물류센터 · 소상공인 마진율 방어 및 접근성 제고
〈전략 2. 사회연대경제 복지·돌봄 · 주민 출자 조직 자립형 복지 서비스 · 경로당 밀키트 및 집수리 전담 조직 · 소득의 직접적 환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5〉 생활 SOC 연계 정주 여건 · 빈집·유휴시설 복합 문화·복지 전환 · 청년 정착형 소규모 공공임대 주거 · 귀촌·창업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전략 3〉 공유부 에너지·자원순환 · 영농부산물 및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 로컬 특화 제조·가공 비즈니스 모델 · 미래 자산화 기금 조성 및 재투자	〈전략 6〉 거버넌스 및 오픈데이터 · 민관 갈등관리 및 현장 활동가(PD) · 결제 빅데이터 오픈형 대시보드 환류 · 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 제도적 안전판
(목표) 소비 고정→서비스 내재화→지역 자산화	(목표) 물리적 연결→정주기반→데이터·제도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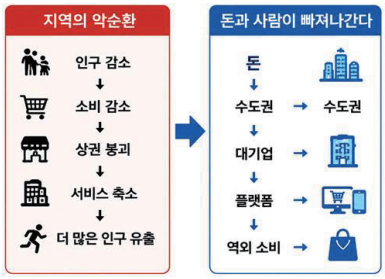
'경제적 순환'과 '사회적 자치역량'의 상호 관계를 통해 농어촌기본사회를 지향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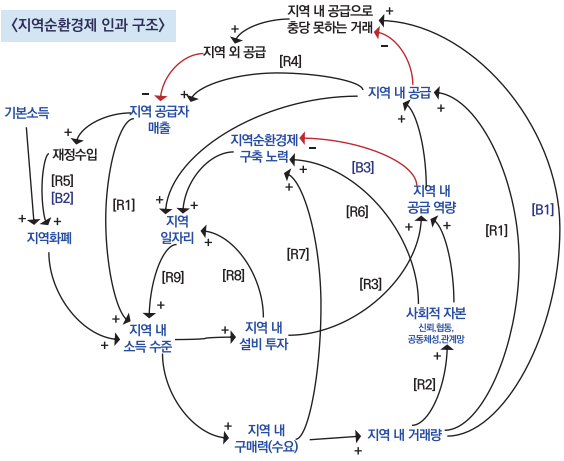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1. 지역사회, 왜 어려운가?



〈지역순환경제 인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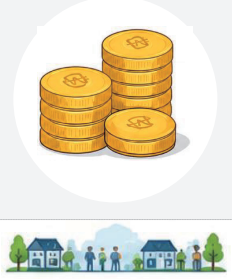


자료 : 최인수(2014)를 일부 수정: 강남훈(2021),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만남,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의 가능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에서 재수정

2. 지역사회, 무엇을 바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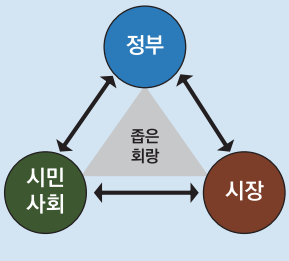
〈〈기존 정책 관행〉〉

얼마를 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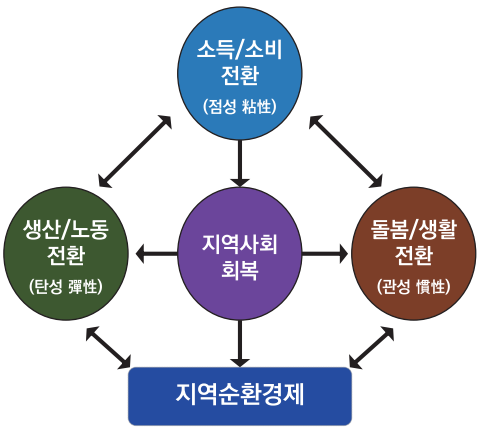
〈〈기본사회 방향〉〉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3축의 '균형'과 '방향'이 관건

3. 지역사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기본사회 → 지역사회 흐름을 바꾸는 전략

돈은 지역 안에서 돌고

사람은 지역에 머물고

서비스가 유지되는 사회

→ 점성(지역화폐) : 이윤 중심 시장의 외부 유출 속도를 늦추고 유동성을 내부에 묶어두는 경제적 마찰력

→ 탄성(주민자치) : 외부경제 충격과 정권교체 시 체계가 파괴되지 않고 원래 균형을 만드는 제도적 복원력

→ 관성(기본서비스 인프라) : 한 번 구축되면 외부변수 상관없이 스스로 힘과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안정성

→ 지역경제의 순환 체계 만들기



"돈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

➔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 기르기



외부 충격
(경기침체, 재정삭감 등)

지역사회
다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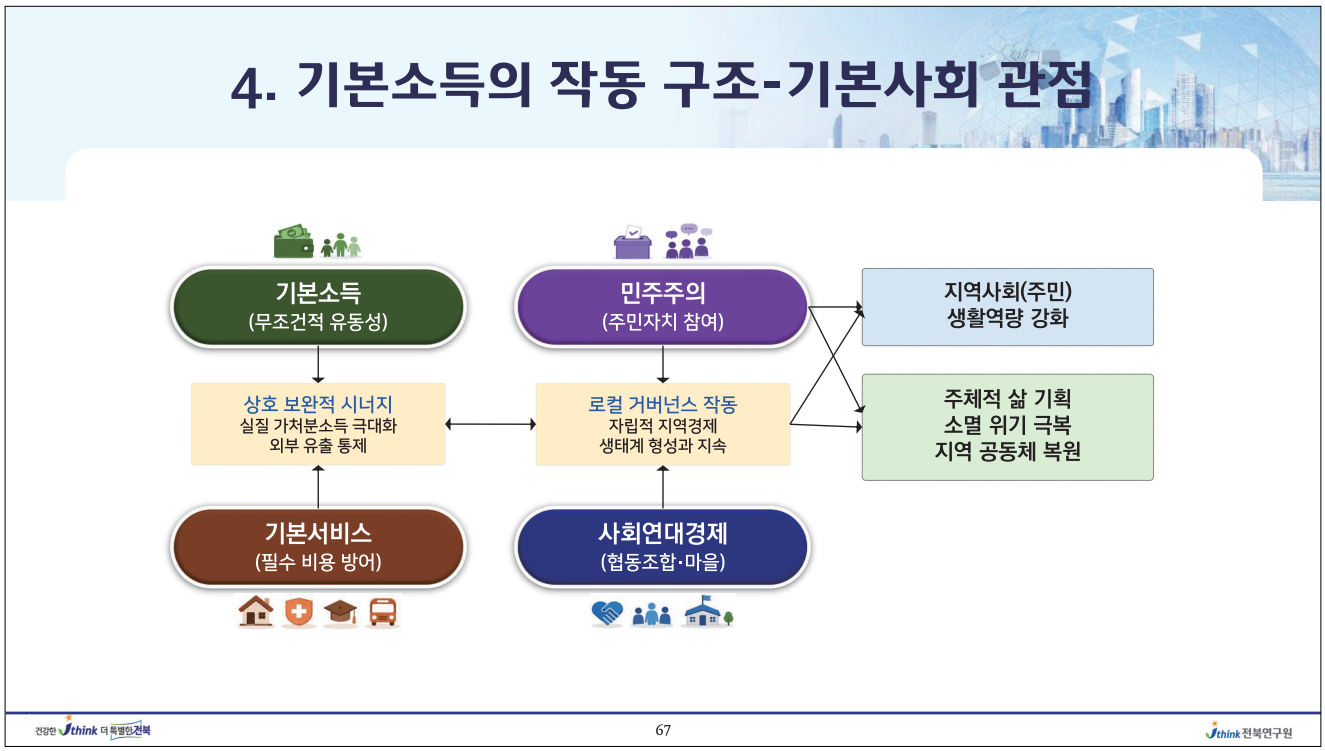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 연합
주민자치, 일자리
지역 생산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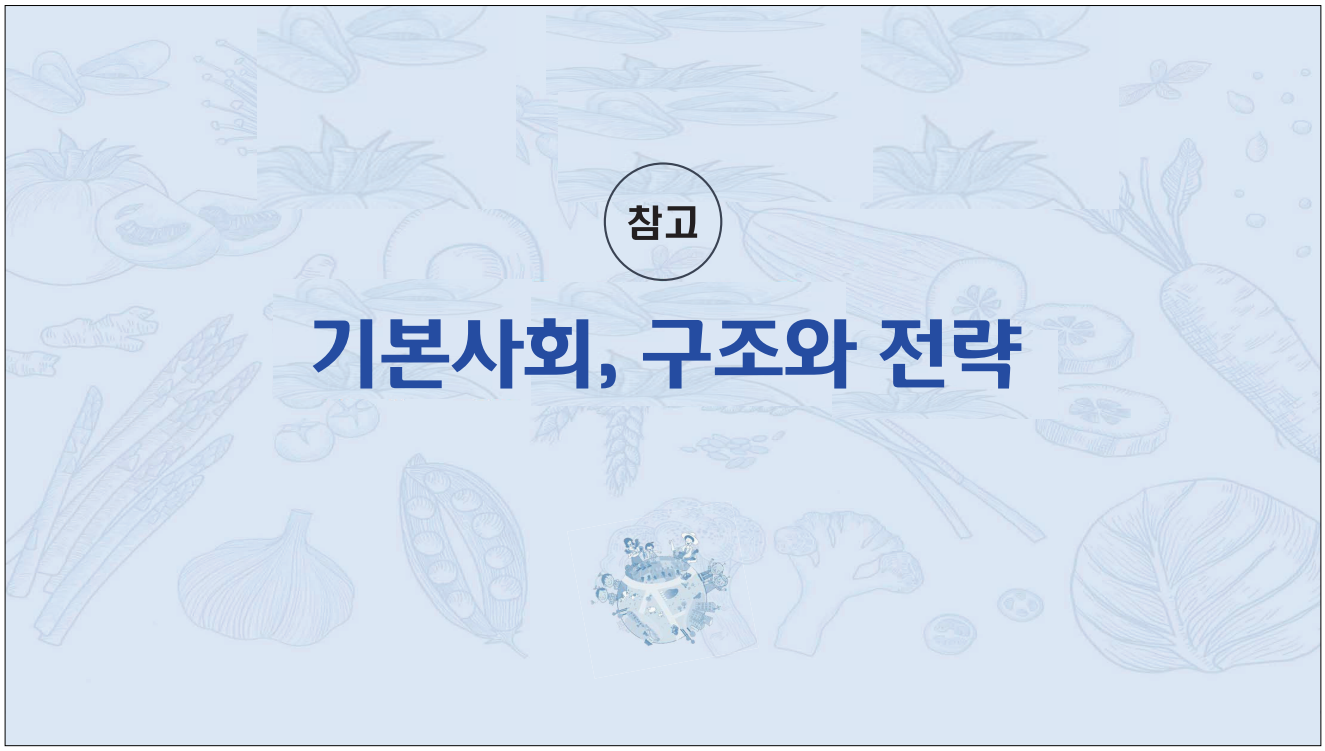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 흔들리지 않는 생활기반 만들기



"기본서비스 인프라, 충격과 위기에 현상을 유지하는 힘"


4. 기본소득의 작동 구조-기본사회 관점
기본소득
(무조건적 유동성)
민주주의
(주민자치 참여)
지역사회(주민)
생활역량 강화
상호 보완적 시너지
실질 가처분소득 극대화
외부 유출 통제
로컬 거버넌스 작동
자립적 지역경제
생태계 형성과 지속
주체적 삶 기획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공동체 복원
기본서비스
(필수 비용 방어)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마을)
67


참고
기본사회, 구조와 전략

1. 국가비전으로 기본사회 위치

기본적 삶의 보장으로 혁신과 도약의 기초가 되는 사회

-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삶의 전반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 기본적 삶 : 최저 수준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decent) 수준의 삶
-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 '25.7.3.)
-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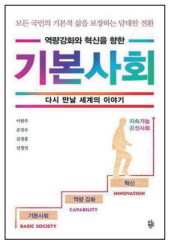
2. 기본사회, 구조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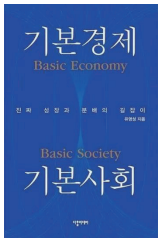




➔ (비전) 모든 국민의 참여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 민주사회 구축과 대한민국 진짜성장 기초 다짐
➔ (정책) 지역실정 맞는 다양+구체 정책으로 작동
➔ (제도) 생애주기 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참여민주주의, 사회연대경제 제도(방식+수단)
➔ (가치) 공정정의, 민주주의, 역량향상, 지속가능성
➔ (기초) 모든 국민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해 기회를 균등히 하고 역량을 최고로 발휘 헌법 정신 기반

구분	이한주 외『기본사회』	유영성『기본경제 기본사회』
성격 지향	규범적·헌법적 국가 비전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제도적·경제적 시스템 설계 (어떤 경제구조와 수단으로 구현할 것인가)
핵심 개념	기본권, 기회균등, 시민역량, 참여	기본경제, 신뢰, 연대, 상호의존, 사회적경제
접근 방식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	물질적 기반(기본경제)과 관계적 기반(기본사회)의 결합
정책 구현	정책 방향과 기본권 보장 중심	6대 실행축(기본소득·자산·금융·서비스·사회적경제·지역화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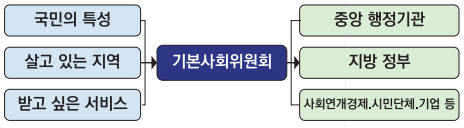
3. 기본사회 기본법과 위원회

기본사회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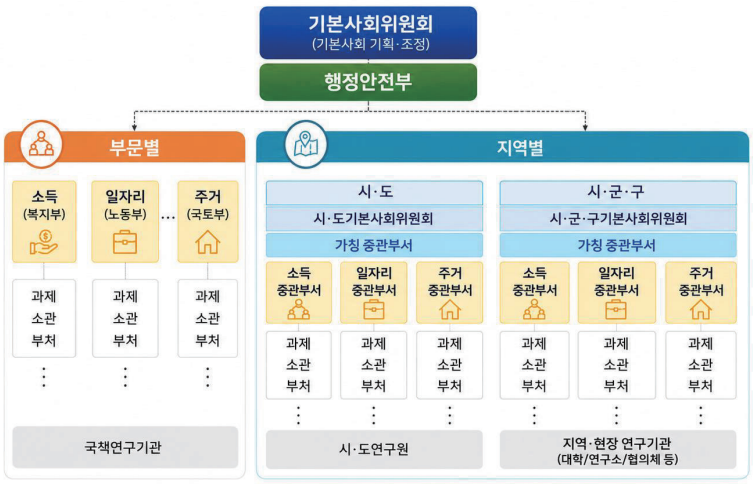
-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26.1.6.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26.1.23. 최혁진·김우영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 법률 국회 발의
- 2026년 상반기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완료, 하반기 시행령 등을 마련한 이후 2027년부터 시행 계획 준비 중

기본사회위원회

-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후 추진을 신속한 위원회 출범 위해 설치근거(대통령령) 마련 후 기본법 제정으로 변경
-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위원장 대통령,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 및 위원, 3개 분과위(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13개 전문위 및 3개 특별위 구성
- 위원회 운영 방침 : 기준 마련, 지표 개발, 과제 추진, 성과 관리, 실행방향 등 마련 (7월말-방향, 12월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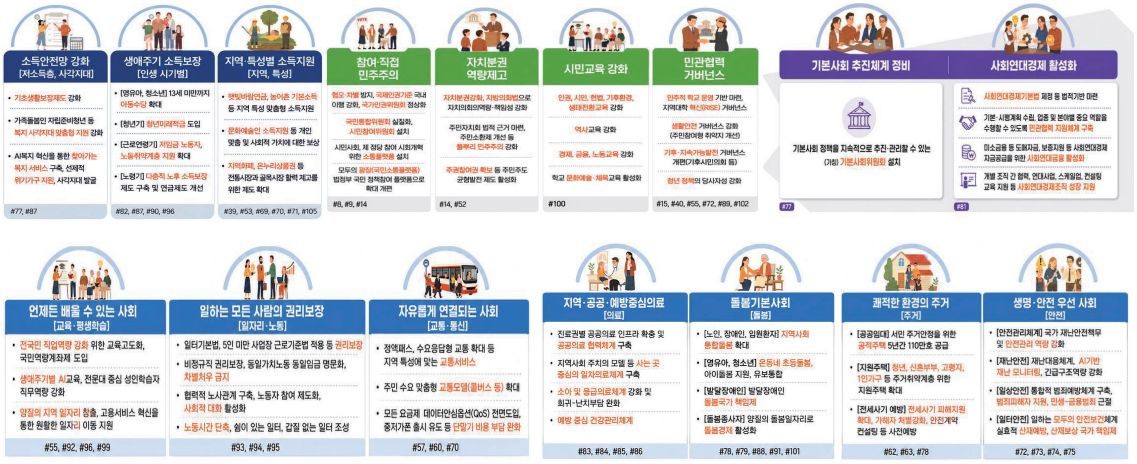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



1	소득	복지부·국가보훈부
2	일자리	노동부·기획재정부
3	주거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4	보건의료	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5	돌봄	복지부·돌봄정책과
6	먹거리	농식품부·농촌정책국
7	여가/문화	문화부·문화정책과
8	교육	교육부·기획조정실
9	교통	국토부·교통정책총괄과
10	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환경	기후부·기후대응총괄과
12	에너지	기후부·기후에너지정책실
13	안전	행안부·안전정책실
14	금융	금융위·금융정책과
15	조세/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16	AI/기술	과기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17	사회연대경제	행안부·사회연대경제과

<<국정과제 내 기본사회 중점과제>>




<<기본사회, 지향점과 이미지>>
기본사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사회
1 새로운 사회계약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
2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실현
•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
• 국가의 실질적 보장 의무
3 사람·자연·미래의 공존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사회
• 세대 간 정의와 미래세대 배려
4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환경·현재·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5 생애주기 기본보장
• 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누구나 이용
• 주거·교육·돌봄·보건의료·교통 등 생활 전반 보장
6 다양성과 공정성
• 차별 없는 사회
• 기회의 평등
• 사회통합 실현
7 혁신하는 사회
• 사회실험과 사회혁신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AI·기술을 활용한 발전
75


감사합니다
hymlsm@jthink.kr

사회연대경제의 재발견

윤봉란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연대경제의 재발견

-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사회연대경제 주요 운영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윤 봉 란
010-3613-4285 / bryoon67@hanmail.net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소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연대경제 플랫폼"

소셜 미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사회연대경제 지원조직

주민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다집니다.

주요 연혁

2011 ~ 2014	2015 ~ 2020	2021 ~ 2026+
기반 구축기	성장 확산기	사회연대 고도화
물리적 기반 구축 및 창업지원기관 지정·운영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 지원기관	사회연대경제 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지역생태계 구축

핵심 사업영역과 역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창업보육:** 전문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성장지원:** 조직운영역량강화, 사회적금융연계, 정책지원연계
- **투명성 /정체성 제고:** 사회적가치 체계화 및 사회적임팩트 고도화, 경영공시, 민주적운영,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 & 통합돌봄
- **제공주체 육성 :** 사회서비스 조직설립운영지원
- **운영실증:** 복합사회서비스모델, 중장년통합돌봄모델
- **통합돌봄:** 지역생태계 구축, 컨소시엄모델 실증

지역연대 및 네트워킹
- **모델발굴:** 햇빛조합, 의료복지사협, 학교협동조합, 돌봄및사회서비스 등 모델확산
- **업종네트워크:** 자치구 연대조직, 사업연대조직 구축
- **마을조합:** 주민참여형 조직 설립 , 역량 강화 교육

FOCUS AREA

주민주도, 마을공동체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 주체육성

- ✓ 주민자치 연계법인 설립 지원
- ✓ 마을공동체 기반 기업 설립 지원
- ✓ 사회연대경제 사업연대(컨소시엄) 설립

대한민국 농촌지역 6대 핵심 문제 및 현황

정부 자료 진단

1. 인구 감소·초고령화

25.7% (농가 49.8%)

읍·면 고령인구 비율 지속 상승, 농가 가구원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KOSIS 인구총조사 · 농림어업조사

2. 후계 인력 부족

68.7세 경영주 평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심화, 청년 농업인 비중은 1% 미만 수준으로 정체.

KOSIS 농림어업조사

3. 경영 부담·부채 증가

4,771만원 평균 부채

농가소득(5,466만원) 상승폭 대비 최근 5년간 농가부채가 30% 이상 가파르게 증가.

KOSIS 농가경제조사

4.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

22.4분 의료 소요시간

병·의원 이용 시 평균 소요시간이 도시 대비 현저히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악화.

농식품부 복지실태조사

5. 지역 소멸 위험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농촌 지자체에 집중되어 소멸 위험지수 지속 심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6. 농촌 빈집 및 정주여건

8.4만호 방치 빈집

방치된 농촌 빈집이 3년 새 약 30% 급증했으나 실제 수리·활용 실적은 1%대에 불과.

농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농촌지역 문제 파악을 위한 정부 공식 통계 수치 종합

KOSIS /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 핵심 정책 분석 보고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부 정책 분야별 요약

인구감소·고령화, 생활서비스, 농가소득, 주거환경 4대 분야 종합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2024년 공식 가이드 기준

1. 추진 배경

농촌지역이 직면한 한계 및 정책 추진 필요성

현황 및 배경

인구 위기 심화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한 농촌 지역 활력 저하.

농가 소득 불안정

기후변화 및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 변동성과 영농 지속성 위기.

생활 인프라 부족

교통·의료·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으로 정주 여건 악화.

2. 주요 정책 현황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확충 정책

인구·소득·복지

정책명	주무부처	주요 내용
농촌공간계획 및 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유해시설 이전·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2024년 3월 관련 법률 시행)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지자체 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통합 개선사업 추진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거점	농림축산식품부	읍·면 중심지 문화·복지 기반 확충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권 보장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으로 주거 여건 개선

인구 유입, 소득 지원 및 복지 정책

정책명	주무부처	주요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농지·자금 연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도모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교육·상담 제공 및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융자 연계
공익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소득 보전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연계 돌봄·고용 등 주민 주도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공백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농촌지역 문제 해결 주요 정책

Slide 3

3. 종합 평가

정부 정책의 5대 핵심 추진 방향

정책 평가

1. 정주환경 개선

농촌공간 정비 및 주택 개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2. 인구 유입 지원

청년농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력 제고

3. 농가 소득 안정

공익직불금 및 영농 초기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전망 구축

4. 생활서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및 농촌 돌봄 지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

5.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추진

4. 시사점 및 과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제언

개별 사업 간 통합 및 연계

부처별·사업별 단편적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별 인구구조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적 정책 연계 체계 구축 필요.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확보

단순 하드웨어(시설) 조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운영 프로그램 확보 및 배후마을 주민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 제고 필수.

농촌지역 문제 해결 주요 정책

Slide 5

POLICY FIELD 01 & 02

공간 재구조화 & 생활 인프라 연계 확충

정주 여건 혁신

주제 1. 체계적 공간 정비 및 재구조화

농촌공간계획 및 정비사업 농식품부

기능별 계획 관리 및 주거지 인근 유해시설 이전·정비 (2024.3 법률 시행).

농촌협약 제도 농식품부

중앙-지자체 협약 체결로 생활권 맞춤형 사업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

주제 2. 거점 중심 생활서비스 및 교통 전달망

농촌중심지 및 기초거점 조성 농식품부

읍·면 거점에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전달 연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농식품부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행 지원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개선.

농촌지역 문제 해결 주요 정부 정책

Slide 2 / 5

POLICY FIELD 03 & 04

청년·귀농 유입 & 농가 소득 안전망

인구 및 소득

주제 3. 인구 유입 및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초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농지·자금·교육 패키지 연계로 정착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맞춤형 정보·교육 제공 및 창업·주택구입 자금 융자로 유입 촉진.

주제 4. 농가 소득 보전 및 공익 기능 증진

공익직불제 운영 농식품부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환경보전·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농촌지역 문제 해결 주요 정부 정책

Slide 3 / 5

POLICY FIELD 05 & 06

지역 돌봄 강화 & 주거 개선·지방소멸 대응

복지 및 주거

주제 5. 취약계층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 농식품부

농업 연계 돌봄·교육·고용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주민 주도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령자·장애인 돌봄 공백 최소화.

주제 6. 주거환경 개선 및 지방소멸 대응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식품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 자금 저리 융자로 인정적 주택 환경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투자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생활인구 확대.

SUMMARY & IMPLICATIONS

종합 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핵심 요약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단순한 농업 생산성 증대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거·공간 정비 + 청년 유입 + 소득 안전망 + 돌봄·교통 확충 + 지방소멸 대응]**이 어우러진 종합적 정주 생태계 조성으로 발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통합 정책 연계

개별 사업의 파편화 방지 및 지자체 단위 지역 맞춤형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

시설 건립 이후 배후마을 주민까지 체감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농촌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현장 진단

줄어드는 주민·사라지는 마을… “소득 보장 없인 소멸 못 막는다”

한국농정신문 (창간특집)
2025.07.06 | 장수지 기자

농촌 현장 소멸 실태

- **인구 급감:** 경남 창녕 등 지방 농촌 마을의 고령화 가속 및 주민 수 급감.
- **공공·생활 인프라 붕괴:** 대중교통·의료·상업시설 축소로 기본적인 정주여건 악화.
- **청년층 이탈:** 청년·신규 영농 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마을 공동체 존립 위기.

소멸의 근본 원인

- **농가 소득 불안정:** 폭등하는 생산비 대비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악화.
- **단순 정주여건 개선 한계:** 소득 보장 없는 시설 투자는 인구 유입 효과 미비.
- **안전망 부재:** 기후위기 및 재해 빈발에 대한 실질적 소득 보전 대책 부족.

핵심 대안 및 과제

- **농가 소득 보장:**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기본 생계 및 소득 안전망 구축 시급.
-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정주 인구 유지 및 지역 활력 제고.
- **국가 책임 강화:**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실질적 지원 법제화.

기사 제목: [창간특집] 줄어드는 주민·사라지는 마을…“소득 보장 없인 소멸 못 막아”

원문 URL: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76

국가 정책 평가 & 과제

지방소멸대응책, 지역위기를 멈출 수 있을까?

한국농정신문
2025.07.06 | 김수나 기자

1차 기본계획의 한계

- **토건 중심 대책:** 대규모 주거단지·건물 신축 등 외형적 성과에 편중.
- **주민 욕구 단절:** 원주민의 삶 터전 유지보다 이주·개발에 집중하는 한계.
- **농업 지속성 소외:** 농촌 본연의 농업 활성화 방안 부재.

생활인구 정책의 우려

- **단기 체류 중심:** 단순 체류인구 확대 중심의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 가열.
- **재정 부담 가중:** 정주 기반 없는 과도한 시설 투자로 유지관리비 증가.
- **지속성 미흡:** 체류 인구를 정주 및 소득으로 연결할 세밀한 설계 미비.

대안 및 정책 전환

- **사람 중심 투자:** 건축·시설 확보보다 실제 운영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집중.
- **자율적 실천 보호:**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등 주민 주도 자율 실천 제도적 수용.
- **필요 충족 지표:** 성장률이 아닌 농촌 주민 필요 충족 비율을 재정 기준으로 도입.

기사 제목: [창간특집] 지방소멸대응책, 지역위기를 멈출 수 있을까

원문 URL: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74

한국농정신문 창간특집 종합

농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방향

한국농정신문
2025.07.06 기획 심층 요약

토건 탈피 & 밀착 복지

- **시설 위주 한계:** 보여주기식 대형 건물보다 소규모 정주 프로그램 우선.
- **원주민 중심:**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
- **필요 중심 정책:** 세금 투입 효율성 대신 주민 필요 충족 지표 반영.

주민 자율 연대 보장

- **협동조합 육성:**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적극 지원.
- **마을 돌봄 체계:** 아동·노인·청년을 포괄하는 자발적 관계망 보호.
- **제도적 수용:** 농촌의 작은 실천 사례를 법과 정책 수준으로 승화.

소득 보장 & 농업 연계

- **소득안정망:** 소농·귀농 청년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장 대책 시급.
- **농업-지역 일체화:** 농업 활성화 없는 농촌 소멸 대책의 한계 극복.
- **공동체 일자리:** 지역 일자리를 통한 정주 인구의 선순환 구조 확립.

기획 주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속 농촌의 자구책과 국가의 과제

출처: 한국농정신문 (ikpnews.net)

KREI 농정포커스 제238호 핵심 요약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정책의 2대 핵심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정민주·서지민 (2026. 8. 4.)

1.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 강화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복합 플랫폼 전환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돌봄·식료품·세탁** 등 생활서비스 공급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

범부처 협력 체계 제안 (역할 분담)

부처	주요 역할 및 연계 방향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무장애 설계 및 시설 관리
보건복지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계 의료·돌봄체계 구축
농식품부	농촌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지역 단위 연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보건소, 복지기관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계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입주자 및 지역 고령자 전반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농촌 특성 반영 차별화된 공급체계 마련

공모 사업 평가지표 개선
도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대체 교통수단 확보, 사업 필요성, 주거취약도, 복지자원 연계성** 등 농촌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표 보완.

농촌형 고령자복지주택 모델 개발
낮은 지가와 저밀도 장점을 활용해 **저층형·세대통합형·확장된 전용면적** 모델을 도입하여 긴급 대피, 이동 편의, 커뮤니티 강화 도모.

주거비 구조 검토 & 지자체 역량 강화
도시 대비 높은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료·관리비 구조를 개편하고, '**통합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지자체의 기획·운영 역량 지원.

보고서명: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정책의 개선 과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촌 현장 사례 분석

농어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 (충북 옥천군 사례)

한국농정신문
2026.08.23 | 강선일 기자

면 지역 현실과 문제

- **사용처 부족:**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아도 인프라가 미비한 면 지역엔 상점이 없음.
- **지역 양극화:** 읍 지역 대비 면 지역 편의시설 소멸 가속화.
- **순환 구조 미비:** 기본소득이 생활 편익 및 지역 순환경제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주민 주도 자구책

- **거점형 슈퍼:** 안남면 '아는 공간 덕분'에서 생필품 및 지역 농산물 유통.
- **마을 구판장:** 석화리 '오다가다 쉼터' 설립, 수익금은 공동식사에 재투자.
- **향수이동장터:** 옥천사경넷·자활센터 주도로 오지 마을 찾아가는 장터 운영.

제도적 개선 과제

- **결제 구역 완화:** 읍 소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면 지역 결제 허용 요청.
- **로컬푸드 이용 제한:** 전체 농산물이 모이는 읍내 직매장에서 면민 결제 불가한 모순 개선 필요.
- **민관 협력 강화:** 농촌 돌봄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민관 연대 모색.

기사 제목: 농어촌기본소득 월 15만원, 사회연대경제와 연결지어야 '보배'

원문 URL: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252

주민 주도 마을 돌봄

아동과 노인을 잇는 춘천 사북면 별빛마을 돌봄 체계

한국농정신문
2025.07.06 | 권순창 기자

방과후 돌봄 & 산골유학

- **공부방 개설:** 하굣길 안전사고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솔다원나눔터 조성.
- **농가 홈스테이:** 기숙사 없는 100% 농가 유학으로 마을 활력·소득 증대.
- **학교 유지:** 폐교 위기 초등학교에 40여 명 아이들이 다니는 마을로 재생.

'우리마을 119' 노인 돌봄

- **세대 공감:** 아이와 고령층 연계 활동 중 노인 가구 생활고 직시.
- **생활 밀착 지원:** 누전·보일러 수리, 차량 지원, 반찬 배달 등 전방위 지원.
- **돌봄 영역 확장:** 아동 협동조합이 마을 전체의 복지 안전망으로 진화.

농촌 미래 모델 제시

- **청년 정착 모색:** 막막한 귀촌 청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지속성 확보.
- **농촌다움 유지:** 도시형 기본 생활 환경을 주민 스스로 구축.
- **주간 선순환:** 따뜻한 주민 자발성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시골의 미래.

기사 제목: [창간특집] 아동 그리고 노인...주민들 따뜻한 마음이 만든 마을 돌봄 체계

원문 URL: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73

주민자치 선도 모델

홍성 장곡면, 작은 농촌마을의 요란한 주민자치

한국농정신문
2025.07.06 | 권순창 기자

청년농장 & 사회적농업

- **젊은협업농장:** 청년 농사 경험 및 농촌 정착 자원 구축.
- **행복농장 확장:** 도산리 중심으로 사회적농업 성행, 지역 역동성 형성.
- **공동체 기반:** 리더 및 원주민의 열의가 전 마을 발전 의지로 확산.

장곡면 2030 발전계획

- **연구소-주민 공조:**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주도로 모든 마을 토론 조직.
- **소통의 체질화:** 선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의 과제를 공동 인식.
- **실질적 과제 해결:** 공동 빨래방, 영농폐기물 수거, 주민 연극단 운영.

협동조합 기반 돌봄

- **함께하는장곡:** 사회적농업을 바탕으로 면 전체 돌봄 및 마을 활동 지원.
- **연결망의 힘:** 개별 마을 활동을 끈끈한 네트워크로 연계.
- **주민 중심 희망:** 필요에 의해 스스로 가꾸는 과정 자체가 소멸 대안.

기사 제목: [창간특집] 홍성 장곡면, 작은 농촌마을의 '요란한' 움직임

원문 URL: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71

[제54회 국무회의 참고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1)

근거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1. 추진배경 및 현황

- **고령화 심화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
  농촌 고령화율 26.6%(전국 19.5%)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나, 인구 감소로 상업·의료 인프라 유지 곤란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중:**
  - **서비스 공동체 (40개소):**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 제공
  - **사회적 농장 (133개소):** 농업활동 연계 취약계층 돌봄 제공

KREI 조사: 인구 3천명 이하 시 병·의원, 2천명 이하 시 식당·세탁소 유지 곤란

2. 핵심 방향 및 주체 육성

비전: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농촌의 취약한 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 기반 마련

- **지원 개소수 단계적 확대:**
  - 서비스 공동체: ('25) 40개소 → ('26) 60개소
  - 사회적 농장: ('25) 133개소 → ('26) 160개소
- **서비스 협약 체결:**
  정부-조직 간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시설 지원과 안정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추진목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완성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 삶의 질 제고

농촌 사회연대경제 1단계

[제54회 국무회의 참고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2)

지역경제 연계 & 현장 우수사례

방안 01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을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로 등록**하여 지역 내 선순환 구조 창출

방안 02
생활 SOC & 빈집·민박
농촌 복합문화센터 등 SOC 관리 주체 참여 확대 및 **빈집정비·농촌민박사업** 법인·협동조합 허용

방안 03
이동장터 확대·다양화
운영주체(지역농협, 사연경조직) 및 운영방식(트럭형 정기순회, 키오스크 주문배송) 다각화

방안 04
식생활 돌봄 지원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하여 어르신 공동밥상 등 식생활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주요 우수 사례

[생활서비스] 진안군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어르신 공동밥상(6개 마을, 주1회 총 1,950명), 주거환경개선(100명 방충망 개선 등), 여가·문화 교실 운영

[SOC 시설 운영] 당진시 면천면
주민 필요 복지시설(목욕탕, 도서관)을 수립 후, 면천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력바라지 복지회관' 위탁 운영

SOC 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수: ('~'23) 누적 6개 → ('25.11) 23개로 확대

지역재생 & 맞춤형 복지 연계

농촌 정책 & 지역경제 리포트

농어촌기본소득 - 사회연대경제 연계 활성화

한국농정신문
2026.09.18 | 강선일 기자

연계 필요성

- **실질 사용처 확보:** 면 단위 농촌 지역 내 기본소득 소비 기반 마련 필요.
- **사회적 가치 실현:** 시장경제가 외면한 돌봄 및 일상생활 서비스 공백 해소.
- **지속가능 생태계:** 주민 구매력 향상을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선순환 구조로 연결.

정부 주요 대책

-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 통해 개소당 **5,000만 원** 지원.
- **협력모델 시범운영:** 무주·진안·곡성·거제·함양 등 5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 **컨설팅 및 인센티브:** 공급 주체 교육 지원 및 우수 지자체 포상**(최대 5,000만 원)**.

현장 우수 사례

- **충남 청양군 모델:** '주민 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주민 맞춤 돌봄:** 독거노인 대상 전등 교체, 장보기, 무거운 가구 이동 지원.
- **상생 효과 창출:** 생활불편 해소와 기본소득 사용처 역할을 동시에 수행.

기사 제목: 기본소득-사회연대경제 연결로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해야

원문: 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484

글로벌 농촌 소멸 대응 비교

해외 농촌 소멸·돌봄 대응 사회연대경제 핵심 정책 및 사례

JP 일본 (Japan)
마을 만들기 & 자율적 생활 돌봄

정부 핵심 정책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과소지역 주민 주도 지자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 지역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생활 인프라 지원.

대표적 혁신 사례
- **카미야마초(神山町) 그린바레:** NPO 중심 빈집 리모델링 및 예술·청년 이주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석화마을협동조합 구판장:** 고령 마을 주민 공동출자 슈퍼 및 이동 배달 서비스 운영.

> **공식 출처:**
> • 국토연구원 (일본의 농어촌 빈집 정책)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감소 대응 연구)

FR 프랑스 (France)
시민참여형 농지보전 & 도농연대

정부 핵심 정책
- **사회연대경제기본법(ESS):** SSE 전용 금융펀드 및 지역 공공구매 법적 지원.
- **지역시민펀드 연계:** 청년농 정착 및 유기농 생태계 확성을 위한 공공 지원.

대표적 혁신 사례
- **Terre de Liens (터 드 리앙):** 시민 펀드로 농지 매입 후 청년·소농에게 장기 저리 임대.
- **AMAP (지역농업유지협회):** 소비자와 농가가 자발적 계약으로 생산 위험 및 소득 공유.

> **공식 출처:**
> • 대산농촌재단 (프랑스 도농연대·협동조합)
> • 한국사회혁신금융 (프랑스 SSE 연대금융)

IT 이탈리아 (Italy)
사회적 협동조합 & 돌봄 농업

정부 핵심 정책
- **사회적 협동조합법(Law 381/1991):** A형(복지·돌봄) 및 B형(취업) 공공위탁 보장.
- **사회적 농업법(Law 141/2015):** 농업 생산과 장애인·고령자 의료돌봄의 법적 결합.

대표적 혁신 사례
- **카디아이(CADIAI) 컨소시엄:**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맞춤 돌봄망 구축.
- **농촌 사회적 농장:** 치매 노인 주간보호 및 원예치료 연계 농업활동 수행.

> **공식 출처:**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유럽의 사회적 농업과 이탈리아 사례 연구)

주요 주제: 글로벌 농촌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SSE) 비교

정책적 시사점 & 적용 방안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농촌 사회연대경제 정책 시사점

한국형 모델 구축
3대 핵심 전환 방향

1.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공공 위탁 & 주민 자율성 보장

해외 시사점
- 이탈리아·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독점하지 않고 주민 조직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서비스 위탁.
- 재정 지원은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최우선 보장.

국내 적용 과제
- **농촌 사회서비스 위탁 제도화:** 면 단위 마을 주민조직 및 협동조합에 돌봄 사업 우선 위탁.
- 중간지원조직 체계 강화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참고 정책:
농식품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2. 농업-돌봄 융복합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정착

해외 시사점
- 이탈리아는 농업 생산활동 자체가 복지·치유·고용 서비스로 법적 인정받음.
- 농가 소득 창출과 복지 비용 절감의 일석이조 효과.

국내 적용 과제
- **사회적 농업 수가 연계:** 복지부 통합돌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바우처와 사회적 농장 연계.
- 고령 농민의 일자리와 건강케어 동시 달성.

참고 정책:
KREI 한국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3. 지역순환경제 구축
기본소득 & 시민자본 연계

해외 시사점
- 프랑스 Terre de Liens처럼 시민 펀드 및 자본을 지역 자산(농지·건물)에 투자.
-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국내 적용 과제
- **농어촌기본소득 연계:** 지급된 기본소득을 면 단위 사회연대경제 구판장·이동장터에서 소비 유도.
- 지역 자산화 펀드 조성을 통한 청년농 정착 지원.

참고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요 주제: 해외 사회연대경제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농촌 정책 제언

사례 분석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기반

일본 소도시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 혁신 사례

아와지섬의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
인구소멸 · 고령화 · 일상생활 문제 극복 솔루션

영역별 핵심 사례 Overview

아와지섬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3대 핵심 지방소멸 대응 테마

주제 01

인구소멸 대응

청년 유입 촉진 및 관계인구 창출을 통한 인구 과소화 극복

출처: 도서 1장~2장

주제 02

고령화 대응

시니어 세대의 자립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역할 부여

출처: 도서 3장

주제 03

일상생활문제 해결

쇼핑·식사·돌봄 등 붕괴되는 생활 인프라의 마을 단위 자원화

출처: 도서 4장~5장

01. 인구소멸 극복 사례 (1/2)

'하타라보지마' 청년 일자리 창출 인큐베이팅

자원의 재발굴과 크리에이터 결합

외부 청년 디자이너 및 창작자를 섬으로 유입하여 지역 특산품과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유휴 공간의 일터화

인구 감소로 방치된 빈집과 폐교를 리노베이션하여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및 공방으로 전환

주요 성과

단순 인구 유치가 아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제시하여 2030 이주 청년층 지속 유입

출처: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p.34-58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01. 인구소멸 극복 사례 (2/2)

키타사카 양계장: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

스토리텔링 브랜드

평범한 양계장을 체험형 관광 자원 및 디저트 브랜드로 전환하여 브랜드 가치 창출

지역 청년 고용

양계 서비스 및 계란 푸딩 가공·판매를 통한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관광 관계인구 증대

섬 외곽 방문객 증대로 소멸 위기 마을에 지속적인 교류 인구 유입 효과

출처: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사례편 (키타사카 양계장 프로젝트)

02. 고령화 대응 사례 (1/2)

시니어 지혜를 자원화하는 마을 수공예·농업



평생 현역 일자리

고령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인 소규모 맞춤형 수작업 일자리 제공

전통 기술과 가공품 전수

시니어가 보유한 농업 노하우와 수공예 기술을 상품화하여 수익 창출

사회적 고립 방지

매일 모여 일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여 보건 및 돌봄 비용 감소 효과

출처: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고령자 직업 창출 사례

02. 고령화 대응 사례 (2/2)

세대 융합형 케어 & 워크 커뮤니티

돌봄 대상에서 주체로

시니어가 마을의 '수혜자'가 아닌,
젊은 세대를 돕는 '조력자' 역할 수행

육아 및 마을 살림 지원

이주 청년 가구의 육아를 돕고
마을 공동 식당 운영에 시니어 적극 참여

03. 일상생활문제 해결 (1/2)

생활 약자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마켓 & 서비스

01

쇼핑 난민 문제 해소

소매점이 사라진 마을에 이동식 마켓 및 공동 구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필품 접근성 개선

02

마을 공유 이동 수단

대중교통 축소에 대응한 마을 자율 운행 셔틀 및 주민 상호간 승차 공유 체계 도입

03

생활 밀착형 안부 확인

배달 및 이동 서비스 과정에서 독거노인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네트워크 구축

출처: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디자인

03. 일상생활문제 해결 (2/2)

5가지 컬러 통합

지역 순환형 경제 체계 모델 요약

인구소멸 대응	청년 이주 촉진 + 유휴 자원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응	시니어 보유 지혜 상품화 + 평생 현역 커뮤니티 조성
지역 자원 고도화	1차 산업 브랜딩 + 6차 산업화를 통한 가치 증대
생활 문제 해결	이동·쇼핑·돌봄 서비스의 마을 단위 공동체화
핵심 시사점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일자리 디자인

'지금 살아있다'는 경험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일자리와 커뮤니티로 풀어낸 아와지섬의 도전 사례

출처: 도서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종합 결론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연구 요약

농촌 읍면의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 설립·운영 및 발전방향

총론(구자인 소장) 및 전국 7개 대표 현장 사례 분석

농촌자치 | 사회적경제 | 지역주도 재생

PART 1. 총론 (구자인 소장)

농촌 읍면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의 필요성

설립 배경

행정 중심 사업의 한계

하의상달식 시설 공급 한계.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주체 부재 문제 심화.

민간 거버넌스 공백

개별 마을 단위를 넘어선 읍·면 단위 통합 민간 책임주체 형성 필수.

비영리 연대의 필요성

영리 목적 탈피. 주민 복지 및 공공서비스 직접 전달 체계 구축.

읍면 네트워크 법인의 핵심 발전 방향

주민 자치성 확보

주민 참여 기반 자율적 의사결정. 행정 위탁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성 확립.

재정 및 경영 자립

자체 수익 사업 및 연대 기금 조성. 안정적 상근 인력 운용 기반 마련.

지역 생활권 생태계

돌봄·교육·문화 융합 서비스 제공. 읍면 중심지 거점 활성화 완성.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2

사례 1 | 전남 영광군 묘량면 (권혁범)

사단법인 여민동락공동체 개요

노인복지·주민복지

주요 활동 분야

농촌 노인복지센터 운영, 이동점빵, 모싯잎송편 생산 등 주민 주도 자립 모델 구축.

법인 성격 및 철학

'복지·삶·일터'가 하나 되는 농촌 공동체 복원. 주민 자치형 사단법인 표방.

주요 추진 성과

농촌형 돌봄 체계

소외 어르신 대상 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립.

여민동락 이동점빵

교통약자 주민을 위한 생필품 직접 공급망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가공을 통한 지속가능 소득 창출.

향후 시사점

세대 교체 및 주체 육성

초기 활동가 중심 구조에서 지역 청년 및 주민 주도 경영 체계로 전환 과제.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지자체 정책 사업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및 안정적 보조·위탁 모델 정립.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4

사례 2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홍승미)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개요

마을돌봄·공동체

설립 목적 및 성격

송악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 돌봄, 교육, 문화 활동을 도모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거점 공간 '해유'

주민 커뮤니티 공간 기반 동아리, 마을 돌봄, 마을 교육 네트워크 운영 중심지 역할.

핵심 사업 영역

마을 돌봄

방과후 돌봄 및 어린이·청소년 마을 배움터 조성.

주민 문화 예술

마을 동아리 지원 및 마을 축제·문화 행사 주최.

공공 공간 운영

송악마을공간 '해유' 관리 및 주민 공유 공간 제공

발전 방향

상근 인력 안정성

조합원 인건비 기반 확충을 통한 상근 활동가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읍면 단위 네트워크 확장

면내 다른 단체 및 행정과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마을 자치 통합 구조 마련.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7

사례 3 | 전북 군산시 나포면 (마승철)

사회적협동조합 나리포 개요

지역 자원·재생

설립 배경

나포면 주민들이 지역 침체를 극복하고 기초생활거점 및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

핵심 지향점

지역 특산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나포면 전용 사회적 경제 플랫폼 역할 연계.

주요 활동

거점 시설 운영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설 주민 주도 직영 관리

지역 특화 사업

나포면 특산 자원과 연계한 농촌 체험 및 소득 사업

마을 케어 네트워크

면내 소외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추진.

미래 과제

주민 참여 확대

조합원 범위를 면 전체 주민으로 넓혀 민주적 참여성과 지지 기반 확대.

비영리 모델 자립

공공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사업과 공익 사업의 균형 확보.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10

사례 4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박진숙)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마을 교육·돌봄

설립 취지

죽곡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 목적.

민·관·학 연대

죽곡초등학교, 주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농촌 교육 자치 모델.

핵심 실천 내용

마을 교육 과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규 교과 연계 마을 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틈새 돌봄

지역 학부모 및 주민 교사들이 주도하는 맞춤형 돌봄.

청소년 마을 자치

아이들이 마을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아리 활동.

향후 과제

교육-복지-청년 연계

아이 교육을 넘어 청년 유입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활동 범위 확장.

안정적 예산 기반

지자체 교육 재정 지원의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위탁 체계 수립.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13

사례 5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윤용병)

사단법인 한생명 개요

지역 공동체 역사

역사와 전통

남원시 산내면에서 오랜 기간 대안교육, 생명운동, 주민 복지를 일궈온 선도적 법인.

산내면 생태계의 중심

실상사 및 귀농·귀촌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산내면 지역 공동체의 버팀목 역할 수행.

사단법인 한생명 주요 실천 분야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인재 육성 기반 구축.

생명·환경 운동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지리산 생태 보전 활동.

산내 마을 네트워크

다양한 산내면 내 소협동조합들과의 연대 플랫폼.

한생명의 발전 방향 및 시사점

법인 재구조화

오랜 활동에 따른 세대 교체 및 법인 조직의 현대적·전문적 재편 필요.

지역 사회 자율 자치

외부 보조금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 비영리 네트워크의 선도적 모델 제시.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16

사례 6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최대영)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돌봄·마을공동체

설립 배경

사북면 산촌 지역의 교육 및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조성한 협동조합.

별빛 산골가공소 및 돌봄

방과후 아이 돌봄에서 출발하여 마을 경제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에 성공.

선순환 실천 사업

별빛 방과후 돌봄

농촌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산골 돌봄터 운영.

마을 가공 사업

농산물 가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 소득원 확보.

농촌 유학 프로그램

도시 아이들의 농촌 유학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미래 방향

사북면 전역으로 확대

특정 마을을 넘어 사북면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문화 거점 통합 운영.

청년 일자리 연계

농촌 유학 및 가공 사업과 연계한 젊은 활동가 정주 환경 조성.

마을학회 일소공도 『마을』 12호

Slide 19

사례 7 | 충남 당진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김경숙)

당진시 읍면 법인 설립 지원 사례 개요

행정 지원·제도화

지원의 목적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읍면 단위 법인 설립 및 역량 강화를 정책 지원.

제도적 육성 모델

주민 자발성에만 의지하지 않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법인화를 적극 조력.

법인 육성 지원 체계

법인 설립 컨설팅

정관 작성, 조합원 모집, 법인격 취득 맞춤 교육.

시드머니 지원

초기 법인 활동 및 시범 사업비 단계별 인큐베이팅.

중간지원 연계

신활력추진단과 읍면 법인 간의 밀착 협력 구도 체계화.

결론 및 시사점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

읍면 비영리 법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초기 행정의 제도적·재정적 조력이 필수적임.

지속가능한 자치 법인 모델

공공 사업이 끝난 후에도 법인이 독립적 네트워크로서 지속 운영되도록 민관 협약 필수.

KEYNOTE PRESENTATION | 김유숙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1. 농촌 돌봄의 환경 변화와 현장 진단

농촌 돌봄의 현실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가족 사적 책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2026.3.27. 특합지원법 시행)
- 선택적 서비스를 넘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본 권리**로 정립
- 당사자·주민이 필요한 돌봄을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과제

읍·면 지역 돌봄 불균형

- **수요-공급 격차:** 8개 면의 노인 인구 비율 평균 **53.3%** (읍 26.8%)
- **서비스 편중:** 요양·재가 시설의 69.4%, 바우처 기관의 92.3%가 '읍'에 집중
- 면 지역은 시장 공급이 작동하기 어려워 **생활권 공백** 심화

옥천 현장의 핵심 발견: 대체가 아닌 '연결'

- **흩어진 자원:** 전문 복지기관(사례관리)과 사회연대경제조직(식사·이동·잡수리·관계돌봄)의 역할 분담 필요
- **핵심 과제:** 새로운 기관 신설보다 **지역 내 미이용 자원과 주민 기반의 생활밀착형 돌봄을 연결·조직화**하는 실행체계 구축

KEYNOTE PRESENTATION | 김유숙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2.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및 맞춤형 돌봄 모델

실천 전략 및 모델

돌봄 조직자로서 사회연대경제의 4대 역할

① 근접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단위 근거리 돌봄

② 신뢰·참여
이용자-제공자가 함께 만드는 공동생산형 돌봄

③ 다기능 결합
먹거리·이동·주거·일자리 등 생활문제 연계

④ 지역 순환
서비스 수익과 일자리가 지역 돌봄 자원으로 재투입

유형 A

거점연계형

- **중심:** 옥천읍 거점·전문기관
- **내용:** 전문 서비스 및 방문·이동지원 분업 추진
- **재원:** 공공위탁 + 바우처 + 자체수익

유형 B

지역자원 순환형

- **중심:** 면 단위 주민·사경 조직
- **내용:** 면 내 공간·수익 자원을 돌봄과 직접 결합
- **재원:** 지역 수익 + 기존 사업 연계

유형 C

권역연계형

- **중심:** 군 차원 조정 + 권역 파트너
- **내용:** 인근 시·군 및 읍 자원의 순회·출장 지원
- **재원:** 군 지원 + 공동 수주 연계

KEYNOTE PRESENTATION | 김유숙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3. 실행을 위한 핵심 조건 및 단계별 로드맵

실행 과제 및 결론

모델 작동을 위한 4대 핵심 조건

1. 사람
공동인력풀 구축, 교육 및 지속가능한 돌봄일자리

2. 조직
개별 조직을 넘어선 공동수행 및 품질관리 체계

3. 연결
행정·전문기관·사경·면·마을 간 민관거버넌스 조정

4. 공공의 역할
기획·재정·공간·제도적 통합 지원 기반 제공

1단계 (2027~2029)

연결 및 시범 실험

- 공동수행체계 구성 및 면 단위 협력 채널 구축
- A/B/C 유형별 시범 사업 및 재원 연계 실험

2단계 (2030~2032)

확산 및 공적 진입

- 검증된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공적 체계 진입
- 면 단위 운영역량 강화 및 권역 연계 정착

3단계 (2033~2035)

정착 및 제도화

- 전 유형 운영 안정화 및 성과·품질관리 상시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및 지속가능 거버넌스 완성

3대 정부정책 통합 종

농촌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핵심 정책 가이드

지방소멸, 돌봄 공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기본법 제정,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4대 선도모델(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육성

[관계부처 합동]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S.M.I.L.E 5대 전략 기반 협동조합 체질 개선 및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화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생활/복지 사각지대 해소

비전: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서비스 실현 & 함께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가치: 참여 · 연대 · 혁신

PART 1 · 종합계획 핵심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 프레임워크

지역 주도 문제해결

주민·활동가가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맞춤형 공동체 형성.

통합돌봄·공공위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사회연대조직 위탁 확대.

자금 및 세제 지원

특례보증·정책자금 공급 확대 및 지방세 감면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핵심 가치: 참여 · 연대 · 혁신 기반의 사회적 자본 확충

2030 목표: GDP 7% 달성

농촌 현장 실천 과제

농촌지역 문제해결 4대 선도모델

01 돌봄 & 의료

통합돌봄 체계

의료사협과 연계한 재택의료 및 영양·주거 통합 서비스 제공.

02 기후 & 소득

햇빛소득마을

마을 조합 기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및 마을 기금으로 환원.

03 생활 서비스

농촌 서비스 공동체

이동장터, 생필품 배달, 빈집 리모델링 기반 마을호텔 운영.

04 자원 관리

SOC 시설 위탁

의성키움센터 등 공공 SOC 시설 운영 및 보육·문화 프로그램 위탁.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6-2028)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양극화·지방소멸 대응 주민 참여형 구조 축적. 의료·돌봄 등 생활 필수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연대경제 강조

UN·ILO 등 국제사회의 포용적 성장 수단 인정(UN 협동조합의 해). 국정과제 81번 연계,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

목표('30): 운영조합 2만개↑ | 취업자 20만명↑ | 취약계층 고용률 70%↑

S	M	I	L	E
Scale up	**Mutual**	**Identity**	**Local**	**Efficiency**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우선출자 한도 확대 지방세 감면 검토	연합회 기능 강화 거점실행조직 지정 상호금융 대출 확대	총회 소집/의안제안권 경영공시 내실화 투명성 및 정체성 강화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주거/친환경/돌봄 공급 현장 규제 완화	원격영상 총회 허용 변경신고 간소화 기관간 데이터 연계

Local : 지역사회 참여 확대

Ⅱ.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주거, 친환경, 문화·관광, 교육, 돌봄 분야 필수 영역 보완

주 거

특화임대주택 운영 확대

고령자·청년·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공특법 개정).

국토부/법개정

친환경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조성

연 500개 이상(5년 2,500개) 태양광 발전소 기반 에너지 자립 및 수익 주민 공유.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등

문화 · 관광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숙박·식음·체험 등 지속가능한 여행상품 개발 지원.

예: 강원 평창 와우미탄

문체부

교 육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동아리·사회연대경제 체험 교육 제공 및 우수사례 공모.

예: 전북 고산고 고순도순

교육부

돌 봄

통합 사회서비스 컨소시엄

돌봄·심리지원 다층적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모델 개발 지원.

예: 전남 섬섬 프로젝트

복지부

규제 완화: 빈집정비 및 농촌 민박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 포함 (소규모주택정비법, 도농교류법 개정)

농어촌 필수 서비스 보완

POLICY 01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

농촌 서비스 주체 육성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및 교육생 연 1,500명 양성을 통한 자립 기반 제고

전략 1 공동체 수: 173개 → 300개 ('28)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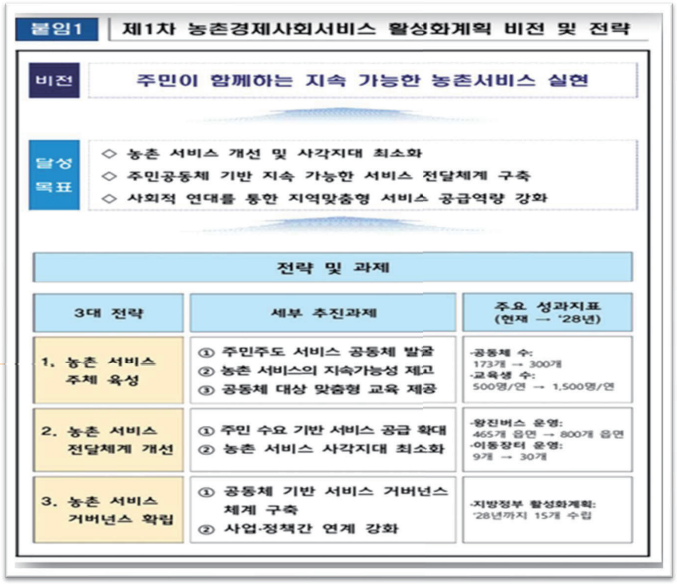
왕진버스(800개 읍면) 및 **이동장터**(30개) 확대를 통한 농촌 필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전략 2 왕진버스: 465개 → 800개 읍면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및 중앙-지방간 사업·정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3 지자체 계획: '28년까지 15개 수립



붙임1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비전 및 전략

비전: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서비스 실현

달성 목표
- ◇ 농촌 서비스 개선 및 사각지대 최소화
- ◇ 주민공동체 기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전략 및 과제

3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주요 성과지표 (현재 → '28년)
1. 농촌 서비스 주체 육성	①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② 농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공동체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	-공동체 수: 173개 → 300개 -교육생 수: 500명/연 → 1,500명/연
2.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①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 확대 ②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왕진버스 운영: 465개 읍면 → 800개 읍면 -이동장터 운영: 9개 → 30개
3.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① 공동체 기반 서비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사업-정책간 연계 강화	-지방정부 활성화계획: '28년까지 15개 수립

POLICY 03 · 범정부 종합대책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금융 공급 확대:**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은행권 대출 독려 및 특례보증 공급
- **공공구매 우대:** 지자체 민간위탁 우선고려, 입찰보증금(5%) 면제
- **지방세·재산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및 국유재산 대부료 요율(2.5→1%) 감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모델 발굴:**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및 공공서비스 혁신형 사업 지원
- **인재 양성:** 청년 일경험 제공(2,500명) 및 대학 연계 전문 인재 육성
- **민관 거버넌스:** 광역/기초단위 네트워크 및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지원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한 공통 법적 토대 및 추진체계 마련
- **통합 플랫폼:** 데이터 통합 관리, 실태조사 정례화 및 경영공시 의무화
- **지방정부 강화:** 전담조직 설치, 참고조례 배포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

ACTION PLAN FOR RURAL ACTIVISTS

농촌 현장 적용을 위한 4대 선도모델 및 실행 전략

01 통합돌봄
의료·요양·가사
의료사협 중심 방문진료, 식사, 가사 등 취약지 맞춤 패키지 공급

02 사회주택
주거+돌봄 결합
특화임대주택 운영 및 농촌 빈집정비/민박사업에 사회연대조직 참여

03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 및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마을조합 육성

04 농어촌 활력
생활서비스 공급
이동장터, 먹거리 공급, 공공 SOC 시설 운영위탁 및 어촌/산림 연계

📌 농촌 활동가 핵심 로드맵: 주민 공동체 조직화 → 공공 서비스 위탁 수주 → 정책금융/특례보증 확보 → 지속가능한 마을 자립 모델 완성

ACTION PLAN FOR ACTIVISTS

농촌 활동가를 위한 3단계 실천 가이드

STEP 01
거점조직 구축
마을 단위 협동조합 결성 및 햇빛소득마을·농촌서비스공동체 신규 지정 신청.

STEP 02
공공사업 연계
지자체 돌봄·환경 분야 민간위탁 및 SOC 관리 위탁사업 수주 레버리지 활용.

STEP 03
금융 및 지원 수혜
소진공 전용 트랙(200억) 및 신협·새마을금고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자립.

"지역사회의 문제는 현장 활동가의 연대와 정부 정책 제도의 결합으로 해결됩니다."

활동가 현장 활용 레버리지

공공정책 연계 및 금융 지원 제도

공공시장 판로 확보

- 지자체 민간위탁 우대: 돌봄·환경 분야 참가자격 우대 및 가점 부여.
- 입찰보증금 면제: 지방계약 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입찰보증금 5% 면제.
- 지역 자원 연계: 농어촌기본소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 지원.

금융 및 자산 인프라

- 상호금융 자금 공급: 새마을금고·신협 등 대출 확대 및 특례보증 공급.
- 국공유재산 감면: 국유재산 대부료 요율 감면(2.5%→1%) 및 수의계약 허용.
-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 활동가 멘토링 및 인건비 연계 지원 체계 확충.

💡 현장 팁: 지자체 조례 제·개정 시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위탁' 조항 신설을 적극 제안하세요.

2026 관계부처 합동 발표

Ⅰ. 추진배경 및 정책 추진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 저출생·고령화, 초고령사회 진입('24)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증대
- **정부·시장 한계 보완:** 사회자본 감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급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필요성 대두

3대 핵심 추진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정책금융·임팩트펀드 확대, 공공계약 수의계약·입찰보증금 면제, 국·공유재산 대부료 감면(2.5→1%)

전략 0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순환형 혁신모델 사업(85억), 청년 일경험(2,500명) 및 RISE 대학연계 인재양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통합플랫폼/통계 구축, 지자체 전담조직 강화 및 인센티브(100억) 지급

정책 목표 ('30년 → '35년): GDP·고용 비중 (6% → 10%), 선도기업 (1,000개 → 2,000개)

핵심 가치: 참여 · 연대 · 혁신

종합계획 세부 과제

Ⅱ. 주요 정책내용 및 4대 선도모델

선도모델 01
통합돌봄 체계
의료·요양·가사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 구성 및 취약지 서비스 패키지 공급

선도모델 02
사회주택 확산
특화임대주택 건설형(연 6,000호)·매입형(연 1,500호) 공급 확대 및 주민행복마을 주체 참여

선도모델 03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소득으로 환원 · '30년까지 3,000개소 조성 (금융·세제 지원)

선도모델 04
농어촌 활성화
농촌형 조직(300개) 육성, 이동장터·SOC위탁 및 빈집정비·농촌민박 사업참여 허용

금융 지원 강화

- 정책자금(소상공인/중소기업) 지속 공급 및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150억 확대
- 임팩트펀드(333억) 조성, 신보 보증한도 상향(사회적기업 7억, 마을기업 5억)
- 은행권 신규대출(3년간 4.3조) 독려 및 새마을금고 2,000억원 대출·출자

판로 및 우대제도

- 지자체 민간위탁 시 사연경 기업 우선고려 법적근거 마련 및 가이드 배포
- 입찰보증금(5%) 면제, 수의계약 요건 정비, 나라장터 내 '전용몰' 신설
- 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우대 및 대기업 ESG 연계 판로 지원

ACTIVIST INSIGHTS

Ⅲ.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를 위한 인사이트

정부 정책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현장 중심의 4대 핵심 전략 사업

INSIGHT 01

통합돌봄·위탁 진입

지자체 돌봄위탁 수주: 식사·가사·의료 결합 컨소시엄 구성 및 지자체 '통합지원회의' 직접 참여로 서비스 주체화

INSIGHT 02

햇빛소득마을 선점

에너지 자치 기반 마련: 마을조합(주민 70% 동의)을 결성하여 유휴부지 국·공유재산 대부(50% 감면) 및 금융 융자 활용

INSIGHT 03

지역 자산화 & 재생

빈집·SOC 시설 위탁: 법 개정으로 허용된 농촌 빈집정비 및 농촌민박사업 주체 참여, SOC 시설 위탁운영 가점 확보

INSIGHT 04

주민자치 연계법인

거버넌스 공식화: 주민자치회 연계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이동장터, 기본소득 사용처 등록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 **현장 활동가 핵심 로드맵** 주민 공동체 결성 →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화 → 지자체 서비스 위탁·지방소멸대응기금 수주 → 햇빛/돌봄 자립 모델 완성 실천과제 선점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추진전략]

범정부 정책 연계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용 방향

총괄 주무부처 지정 (2025.10.21)

1. 범정부 정책 연계 및 통합 컨트롤타워

- **법적 기반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분절된 부처별 정책의 연계·통합 및 국가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범정부 협의체 구축:** 중앙/지방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거버넌스 강화
- **핵심 분야 입체적 지원:** 교육·돌봄·농촌·문화·주택 등 9개 핵심 분야 부처별 정책 연계 및 패키지 지원(지방세·공용재산·우선구매)
- **통합 데이터 관리:** 사회연대경제 공통 통계 지표 개발 및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주무부처 역할: 기본법 제정, 정책 연계·조정, 2026년 총괄예산 118억 원 편성

2. 지역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활성화:** 전수조사를 통한 적합사무(청소, 돌봄, 주거, 일자리) 발굴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 혁신모델 신규 추진:**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 시 국비·지방비 총 170억 지원 (2026년 신규 85억)
- **지방정부 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활용, 전담부서 설치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 **스케일업 지원:** 경영 컨설팅(회계·법무·세ze) 및 민간 유통 채널 연계를 통한 지역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민간위탁 우수사례: 성남시(청소대행), 경기도(기숙사운영), 부천·안성(노인일자리/돌봄)

비전: 분절된 정책의 연계·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 · 사회안전망 강화

붙임1. 사회연대경제 연관 국정과제

국정과제 연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주요 국정 목표 및 세부 과제 요약



[일자리·경제]

- 과제 81 일자리 창출 및 질적 개선
- 과제 96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환경·에너지]

- 과제 39 재생에너지 및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지역]

- 과제 49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및 자립

[주거·복지]

- 과제 54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 과제 6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상생]

- 과제 63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 과제 68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과제 69 사회적 약자 복지 및 안전망
- 과제 70 국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활성화]

- 과제 78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경제
- 과제 89
- 과제 89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 과제 91 해양수산 활력 및 연안 활성화

붙임2. 사회연대경제 핵심주체 (5대 핵심 유형)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5대 핵심 조직 유형 및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근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법: 마을기업육성법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법: 협동조합 기본법	근거법: 벤처기업육성법
사회적 목적 조치와 영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 창출	탈수급 및 자활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자립 지원	상부상조 및 민주적 운영	혁신성 및 성장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퍼런스

농촌지역 사회연대경제 연계 지역돌봄 실천전략

안남·죽곡·청양·원주 사례로 보는 현장 실천과 정책 제안

현장 발표 요약 | 옥천 컨퍼런스

마당 1

옥천 안남면: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실천사례

발제자: 윤성희 (안남돌봄연대 돌봄반장)

주요 실천내용

- **초고령화 대응:** 65세 이상 54% 안남면 맞춤 돌봄망 구축
- **민간 연대체:** 6개 지역조직이 연대하여 안남돌봄연대 구성
- **생활 밀착 지원:** 집수리·반찬배달·이불빨래·예초 서비스 실행
- **돌봄반장 역할:** 현장 파악부터 회계·기획까지 총괄 수행

현장의 핵심 발견

"숫자마다 한 사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계획서에 없는 진짜 필요가 현장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66개소 전국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확산 (2026년 기준)

지속가능한 농촌돌봄을 위한 정책 제안

들여다보는 용기

돌봄반장에 가장 필요한 핵심 덕목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다주체 연대구조

주민·돌봄반장·사회연대경제·행정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4축 협력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관계의 복원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웃 간 사각지대를 살피고 공동체 관계망을 재건해야 합니다.

제안: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결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제도적 책임과 지원 아래 현장성 있는 돌봄반장 활동이 지속되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당 2

주민자치·먹거리 연계 농촌 돌봄 실천사례

발제자: 박진숙 (곡성 죽곡면) / 반재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곡성 죽곡면 (박진숙)

- ✓ **주민총회 결정:** 주민실태조사 기반 먹거리돌봄 의제 의결
- ✓ **사회적 농업:** 어르신이 농사선생님으로 참여하는 공유농장
- ✓ **통합 돌봄망:** 반찬나눔·공동체밥상·죽곡마을119 집수리 연계
- ✓ **선순환 체계:** 기본소득이 마을 안 돌봄과 일자리로 순환

청양군 (반재윤)

- ✓ **공공 먹거리:** 푸드플랜과 경로당 무상급식 통합 연계
- ✓ **3-Track 공급:** 대규모 식자재, 취약계층 반찬, 소규모 무상급식
- ✓ **주민참여 제조:**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 주민 직접 반찬 제조
- ✓ **원스톱 인프라:** 전처리·가공·분석 및 콜드체인 배송망 구축

먹거리 중심 면단위 통합돌봄 정책 제안

곡성 죽곡면 제안

- ✓ **생활자치 서야 지속:** 읍면 단위 자치 권한과 결정권 강화
- ✓ **자립재원 구축:** 햇빛소득·지역순환경제로 돌봄재원 마련
- ✓ **상호돌봄 전환:** 시혜적 지원을 벗어나 공동체적 상호돌봄 구조 정립

청양군 제안

- ✓ **공공 돌봄 개입:** 소규모 경로당(20인 미만) 대상 공공급식 필수 지정
- ✓ **다돌봄 협력 TF:** 행정-재단 간 틈새 없는 통합 실무체계 구축
- ✓ **기부금 연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스마트 재원 확보

마당 3

원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금융돌봄 기초 통합돌봄

발제자: 박준영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1층 · 입구	2층 · 대안금융	3층 · 자기경영	4층 · 공동체
통합돌봄 입구	**채무해결 & 공제**	**재무 & 인문학**	**공동체 & 관계망**
기초상담, 자기돌봄카드, 집중 사례관리	소액대출, 채무상담, 자산형성 공제사업	재무교육, 자조모임, 인문학교육, 건강관리	공동구매, 장터, 여행, 그림예방 프로그램

금융소외 극복: 대안금융과 채무해결을 돌봄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인의 삶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원주형 통합 모델.

금융돌봄 연계 다차원 네트워크 구축 제안

다차원 나선형 결합

돌봄은 단선적 단계가 아닌 다차원 구조입니다. 보건·의료·장기요양·주거·금융 자원이 방사상으로 다중 결합되어야 합니다.

금융안전망 강화

소액대출, 공제, 채무상담 등 기초 금융안전망이 작동할 때 의료·주거 등 다른 돌봄 서비스도 효용을 발휘합니다.

"국가와 시장을 넘어, 우리가 스스로 사회가 되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민간 돌봄 생태계 구축 제언

마당 4

마당 4: 농촌지역 사회연대경제 연계 종합 제언

4개 마당 실천사례 종합 분석 및 정책 과제

1. 현장성 강화

행정 구획을 넘어 실제 생활 불편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밀착형 현장 인력(돌봄반장) 상시 배치.

2. 자치 및 협력

주민총회를 통한 의제 의결과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등)의 실행력 통합 체계 구축.

3. 통합 서비스

먹거리, 집수리, 이동, 금융복지, 인문학을 결합한 융합형 면단위 통합돌봄 제공.

최종 제안: 농촌 돌봄은 단순 복지 수혜가 아닌 주민 간 상호돌봄이자 지역 자치의 완성입니다. 행정은 예산과 제도로 책임 있게 지원하고, 실행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범적 지원체계를 신설해야 합니다.

돌봄이 일상이 되는 농촌을 향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작은 용기가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돌봄의 시작입니다.

시대적 당위성

사회적 경제(사회연대경제)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핵심 이유

자본 중심 경제의 한계 극복과 사람 중심의 호혜·연대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 **이윤만을 좇는 자본 중심 경제가 초래한 양극화, 고용 불안,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고, 사람과 사회적 과제를 중심에 두는 호혜·연대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

REASON 01

1. 자본 중심 경제의 폐해 및 위기 극복

- **부의 불평등 심화:** 이윤 극대화 우선으로 부의 편중, 양극화 확대, 절대적 빈곤층 증가 초래
- **고용 불안 & 사회적 병리:** 만성적 실업과 해고 위협 지속, 무차별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병리 유발

REASON 02

2. 사람 & 사회적 문제 해결 중심 전환

- **공익 & 필요 충족:** 투자자 이윤 창출에서 벗어나 조합원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사람 중심 경제:** 무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인간 존엄성 회복, 지구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도모

REASON 03

3. 검증된 복지 모델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북유럽 선진 사례 검증:** 스웨덴, 덴마크 등 사회적 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높은 삶의 질 확인
- **대안적 경제 모델성:** 높은 사회적 안정성을 근거로 실증된 검증 모델 구축

REASON 04

4. 자발적 자립 & 포괄적 안전망 구축

- **민간 주도 실업 극복:** 외환위기 당시 자발적 자활 운동 사례처럼 위기 시 자립적 기반 형성
- **호혜적 연대:** 민간의 협력으로 자립적 삶의 기반 및 포괄적 사회 안전망 마련

법적 정의 및 조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상 개념 및 정의 (제2조, 제3조)

호혜협력과 연대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주체별 범위 규정

CONCEPT DEFINITION

사회연대경제 개념: 호혜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이익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

SCOPE 01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경제주체 및 개별법상 조직 포함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농협·수협·신협 | 새마을금고·생협

SCOPE 02

사회연대경제조직

기업을 포함하여 생태계를 지원·연계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
- 현장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연합체 및 **연합조직**
-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중개기관**
- 기타 민간 **지원단체** 등 포괄

PRINCIPLES

핵심 운영 원칙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준수해야 할 4대 지향 가치

- **자율·독립적 운영:** 민간 자율성 보장
- **민주적·투명한 지배구조:** 참여형 의사결정
- **사회적·지역사회 환원:** 발생 이익 재투자
- **상호부조:**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주요 개념 정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와 개념

사회적 목적 추구와 경제활동의 형태에 따른 4대 대표 유형

TYPE 01

1. 사회적기업

- **기본 개념:**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주요 역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유형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TYPE 02

2. 협동조합

- **기본 개념:**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 권익·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TYPE 03

3. 마을기업

- **기본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
- **주요 역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

4.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 및 자립**을 목표로 설립·운영하는 기업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함)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1항

국제기구 공식 정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의: ILO 공식 정의

ILO(국제노동기구) 제110회 총회 사회연대경제(SSE) 채택 (2022. 6. 20)

> **사회연대경제(SSE)의 정의:** 집단 또는 일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하며, 자산과 잉여금·이익 분배 시 자본보다 **자발적 협력, 상호 원조, 민주적 거버넌스, 자율성 및 사람 우선 원칙**에 기초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제110회 ILO 총회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현장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5대 핵심 특징

1.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
2. 의 사적 배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3. 적 참여의 거버넌스가 작동함
4. 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함
5. 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글로벌 정책 동향

사회적경제에 관한 국제적 지지: 유엔(UN) 결의안

국제연합(UN) 제77차 정기총회 회원국 만장일치 채택 (2023. 4. 18 뉴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3년 4월 18일, UN 제77차 정기총회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결의안 상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역할>

사회연대경제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원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자산을 비롯해 잉여금 및 이윤의 분배와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집단적 혹은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조직, 기타 단체를 포괄합니다.

포함하는 주요 기업 및 단체 유형:

협동조합 | 협회 | 공제조합 | 재단 | 사회적기업 | 자조단체 | 가치·원칙 부합 단체

주요특징

사회연대경제의 4대 주요 특징

신뢰, 민주성, 공익성, 지역혁신 중심의 경제적 특징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및 1인 1표 행사의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가치

공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등 우선 추구

지역사회 혁신

주민·조직·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구조 개발

핵심 요약: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 모델로서, 주민 참여와 민주적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합니다.

핵심 정체성

사회연대경제 정체성: 사회문제 및 조합원 문제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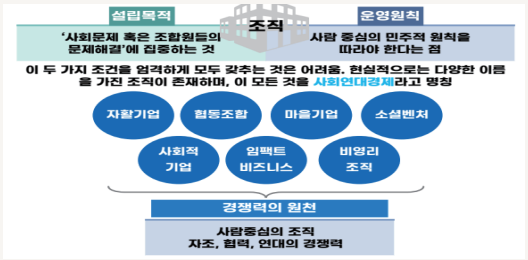
설립목적과 운영원칙의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경쟁력의 원천

핵심 원칙: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 문제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에 두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경제 조직

다양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엄격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적·실천적 주체들을 포괄합니다.

자활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 | 임팩트 비즈니스 | 비영리조직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원천

-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결속력
- **자조·협력·연대의 힘:** 개별 기업이 극복하기 힘든 시장의 한계를 연대 네트워크로 상쇄
- **사회적 신뢰 자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축적되는 차별화된 사회적 자본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혼자는 어려우니 함께 풀어가며(1원칙: 자발적/개방적조합원제도),
함께 경제적으로 책임지고(3원칙: 경제적참여),
민주적으로 결정하고(2원칙: 민주적 운영),
열심히 공부하며(5원칙: 교육훈련의 강조),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고(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7 원칙: 지 역사회의관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해결하자는 선언(4원칙: 자율과독립)임.

출처: 김종걸 (260126) 사회연대경제: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 (행정안전부 강의)

생존 전략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 주요 성공 사례

각자도생의 위험을 넘어 연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및 자립 기반 확보

협력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입니다

공동구매 (비용절감) | 공동브랜드 (시장파워) | 공동공간 (고정비 절감) | 공동금융 (리스크 분산) | 공동자산 (장기적 안정성) | 공동정책대응 (제도리스크 감소)

A.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금융기관, 공동R&D, 상호지원기금 운영. 고용규모 약 7만 명의 글로벌 제조기업군 형성.

B. 이탈리아 컨소시엄

약 250개 컨소시엄을 통해 공공입찰 시장 경쟁력 확보 (45만~50만 명 고용, 매출 약 17~22조 원).

C. 캐나다 퀘벡

조직 해산 시 자산의 생태계 귀속, 정책 공동설계 및 전용 금융기관 운영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D. 프랑스 상시 협력플랫폼

2014년 ESS법 기반으로 기업·협회·지자체·대학이 지역 단위에서 연결되는 상시 협력 클러스터.

핵심역할

사회연대경제의 3대 핵심 역할

공공서비스 보완과 지역 자립 생태계 구축을 수행하는 민간 실행 주체

1. 예방적 돌봄망

지역 기반 기초의료·통합돌봄·주거 서비스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재정의 미래 지출 완화.

2. 취약계층 자립 고용

복지 수혜자를 생산적 노동자로 전환하여 이전지출 절감과 세수 증대의 이중 효과 창출.

3. 지역 선순환 경제

지역 내 매출과 고용이 재투자되는 구조를 형성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지방재정 자립 기여.

역할 요약: 시장이 외면하고 정부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지역 현장 문제를 '주민 참여와 연대'로 해결하는 현장형 공공서비스 전달자.



개별 조직을 넘어, 연결된 지역 공급시스템으로

출처 : 유한나 교수(2026), 하반기 수요세미나 '참여·연대·혁신의 재설계'(한신대 경영학)

선순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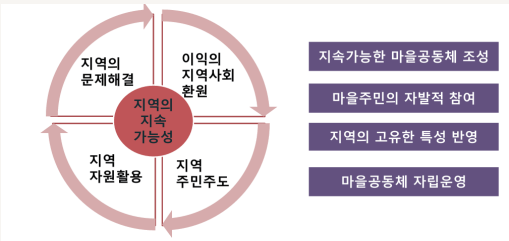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가 만들어가는 세상: 지역 지속가능성

삶의 터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어넣는 공동체의 생기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터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논하고 협력하며, 각자도생의 삶을 뛰어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합니다.

지역 선순환 4대 모멘텀

- **지역의 문제해결:** 주민 니즈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발생한 성과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재투자
- **지역 자원 활용:** 인적·물적 자산을 발굴하여 경제적 가치화
- **지역 주민 주도:** 수혜자에서 자발적 실행 주체로의 전환



지향하는 마을공동체 가치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이웃 간 관계망 복원
-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모델 설계
- **마을공동체 자립운영:** 보조금 의존을 벗어난 자생력 확보

실천 모델

마을 기반 관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근린생활공간 기반의 호혜성과 경영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

함께 만드는 일상 활동

함께모여 (마을카페) | 함께기르고 (공동육아) | 함께즐긴다 (마을축제) | 함께먹거리 (마을생협) | 함께소식나눔 (마을미디어) | 함께일하며 (마을기업)

주민 성과: 주민 역량강화 ➔ 삶의 질 향상 ➔ 주민의 자립적 의지 확보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자산

- **마을 자원:** 지역 내 보유한 인적, 물적, 문화적 자산
- **마을의 필요:** 주민들이 인상에서 실제 체감하는 복지·문화 요구
- **관계의 지속성:**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주민 관계망

지역문제 발견 ➔ 지역자원 활용(CB발굴) ➔ 사업 참여 ➔ 일자리 & 수익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정책 제언

농촌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3대 전환 과제

단순 공모사업·조직 지원을 넘어 주민 주도와 행정 책임의 협력 구조 구축

본질적 질문: 단순 법인격 확보나 공모사업보다 "주민 필요에서 출발하는가?", "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조직하는가?", "행정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PROPOSAL 01

읍·면 단위 생활 문제

출발점은 읍·면 단위여야 합니다. 마을은 너무 작고 시·군은 넓습니다. 주민 생활세계와 행정 책임이 만나는 읍·면에서 서비스 공백과 연대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PROPOSAL 02

조직 연결망 구축

개별 조직 지원을 넘어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부녀회, 자원봉사자, 복지기관 등이 정보와 자원을 나누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 자원은 돈이 아닌 관계"**입니다.

PROPOSAL 03

행정의 명확한 책임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자체는 제도·예산·장소를 제공하고 위탁·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여야 합니다.

컬럼 저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 [김정섭의 연구노트] 농촌 정책의 문법에 필요한 '사회연대경제'의 논리 (한국농어민신문 3784호, 2026.06.12 14면)

과제1,2

농촌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과제

주민 주도 네트워크 발굴과 민관협력 상설 추진체계 구축

과제 1: 네트워크 조직 발굴·육성

- **주민주도 민간 주체 형성:** 국가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실천전략과 민간 역량·네트워크 결합 필수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견·개선하도록 체계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촉진자(코디네이터):**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고 실천을 이끌어갈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과제 2: 민관협력체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강화:**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개발 및 지자체 전담조직-정책부서 간 내부 행정협의회 운영
- **전문지원조직 연계:** 거점기관·앵커조직 등 전문지원조직을 통해 민·관 접점 연결
- **상설 추진체계:** 민관 협력 및 민민 네트워크, 행정 협업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상설적 추진체계 마련

최종 지향점: 지역주민 삶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및 돌봄 생태계 구축'

과제 03

사회연대경제조직 역할 강화

공동체 가치 지향 + 연대 협력 + 공공성 확보

지역문제해결 실행주체 & 연대 확장

- **지역돌봄공동체 실현:** 연대와 협동 방식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
- **범지역적 연대 이끌기:** 마을단위를 넘어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자치조직, 사회복지법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대 형성

복합서비스 모델 & 사업 연합

- **복합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단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설행하는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
- **통합 서비스 제공:** 조직 간 연대협력을 통해 컨소시엄 및 사업연합 방식의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핵심 생태계 구축: 사람 + 민관협력체계 + 연대협력조직 + 다양한 서비스 개발

과제 04

돈 보다 '관계'와 '거버넌스'

주민이 문제를 발의하고 참여하는 생활 문제 해결의 방식 전환

공모사업 탈피 & 읍·면 중심

- **일회성 공모 지양:** 단발성 지원과 현장 피로감을 일으키는 공모 구조를 벗어나 지역 책임성 확보
- **읍·면 단위 생활 문제:** 농민과 주민 삶터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공백부터 점검 및 대안 마련

연결망 구축 & 행정 파트너십

- **연결망(네트워크) 구조:** 부녀회, 자원봉사자, 농협, 주민자치회 등이 정보와 역할을 나누는 관계망 조성
- **행정의 명확한 책임:** 민간 전가가 아닌 위탁·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 제공

유휴시설 극복 & 통합돌봄

- **지역 전환 지원:** 준공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자율 활용권 보장
- **농촌형 통합돌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농촌 현장에 밀착된 통합 모델 구축

방향성: 단순 개별 조직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힘'을 갖추도록 조력

과제 05

'주민·민간 주도성'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방안

민간 네트워크의 공공 공백 보완과 부처 칸막이를 넘는 현장 중심 거버넌스

공공의 공백 보완

- **주민 주도형 구조:** 공공 전달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촘촘한 빈틈을 마을 주민 조직과 민간 네트워크 연대로 보완
- **농촌 특성 반영:** 인구 밀도가 낮고 이동 거리가 먼 농어촌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적용형 정책 설계

패러다임 전환 제언

- **회복탄력성 확보:** 주민 스스로 지역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 **사람과 시스템 투자:** 단순 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농촌에 상주하는 '사람'과 주민 활동 '시스템'에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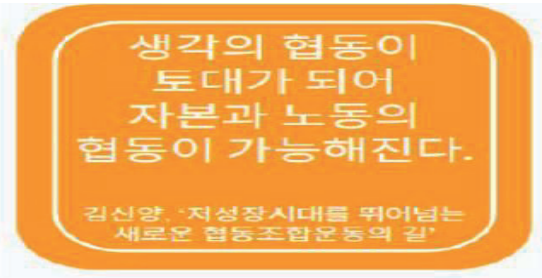
로컬 거버넌스 구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현장의 분절을 진단하고 연구·사례조사 기반의 융합형 거버넌스 로드맵 마련
- **부처 협력 모델:**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가 현장에서 융합되는 전향적 모델 개발

최종 목표: 면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법인에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주체 중심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변화는 우리가 열망하는 간절함에 비례한다.
지역사회는 우리의 열망과 의지만큼, 딱 그만큼만 변화하고 발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윤 봉 란
010-3613-4285 / bryoon67@hanmail.net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트렌드

김진석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 주요 정책계획과 부처별 추진과제, 현장의 준비 방향 -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2025. 12.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사람을 지키는 일자리
포용적 고용과 사회서비스
지역을 살리는 경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순환
함께 만드는 혁신
민관협력과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적가치 확산과 제도 기반


목차
2027 사회연대경제 정책 인포그래픽 시리즈
1부
중앙부처 4대 정책자료로 읽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01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
02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6~2028) | 기획재정부
03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고용노동부
04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2부
2027년 사회연대경제 예산과 현장의 준비
예산은 어디로 향하고, 현장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05 사회연대경제 예산 요구 현황과 정책 방향 | 주요 중앙부처
06 2027년 협동조합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 주요 사업과 지원 방향
07 2027년 협동조합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실행과제와 점검사항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돌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공동체
주거
안정된 삶을 위한 지역기반 주거모델
에너지
지속가능한 깨끗한 미래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살리는 새로운 기회


2/8
Ⅰ. 추진배경 | 왜 사회연대경제가 필요한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의 한계가 부각되고,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인구·사회구조 변화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동으로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은 초고령사회 전입('24) (고령인구 20% 이상)
•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 (116.5만명 '24 → 334만명 '5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
2 지역소멸 위기 심화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가 붕괴될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24)
•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3 사회적 자본 감소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4 기후·환경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 요구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 ~'30)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
5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고용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사회연대경제는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3/8

Ⅱ. 현황 및 문제점 | 성장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사회연대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사회문제 해결 역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은 아직 부족합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양적 성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일자리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직 수 (단위: 개) — **35,493개** '24년



고용인원 (단위: 명) — **362,266명** '24년



※ 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026.6.30.), Ⅱ.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기준)

2 주요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

❶ 공공서비스 공급의 부족

돌봄·주거·에너지 등 생활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기존 공급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24) (고령인구 20% 이상)
- 장기요양 수요 급증 (116.5만명 '24 → 334만명 '50)
- 1 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

→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필요



❷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협력의 부족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내 일자리와 서비스 공급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 거주('24)
-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
-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일자리·서비스 공급 기반 약화

→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필요

❸ 제도·인프라의 미비와 성장의 한계

자금 조달, 공공시장 접근, 성장지원, 법·제도·통계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 미흡
- 자금 조달 및 투자 인프라 부족
- 공공시장 접근성 및 판로 한계
- 통계·성과관리 체계 비비

→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3 그 밖의 구조적 문제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재난 등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강화 (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 ~'30)

→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필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구조 변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로 고용 안정성 저하
-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 지역 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 청년 실업,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 간 고용 불균형 심화
- 청년 실업률 6.1% (전체 2.8%), 여성 고용률 63% (남성 76.5%)

→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필요



→ 조직의 양적 성장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역량과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4/8

Ⅲ. 목표 및 정책방향 |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

3대 정책목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합니다.

1 공공서비스 확대

돌봄·주거·에너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2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3 지방소멸 대응

지역의 활력 회복과 균형발전



주요 정량목표 사회연대경제의 규모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 사회연대경제는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정부는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 IV. 3대 전략과 15개 중점과제

기업의 성장, 지역의 협력,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3대 전략과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협업 중심 → 성장·투자 | 5개 중점과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판로·제도를 지원합니다.

1. **융합형 동 자금 공급 확대** — 정책금융, 임팩트투자 등 다양한 자금공급 확대
2.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3. **공공계약 우대 확대** — 공공조달·위탁사업에서 사회적가치 반영 확대
4. **세제·금융규제·지원 확대** — 세제 혜택, 규제 개선, 각종 지원제도 정비
5. **수출·ODA 참여 확대** —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기업 중심 → 지역 협력체계 | 5개 중점과제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6. **혁신모델 발굴** — 지역 특화모델과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확산
7.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
8.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 청년 교육·훈련·현장 경험 등 인재 양성 지원
9.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연대 확대
10. **대국민 인식·교육 확대**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홍보 강화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흩어져 있는 지원 → 통합 관리기반 | 5개 중점과제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11. **「기본법」 제정** — 사회연대경제 발전의 법적 기반 마련
12.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13.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마련
14. **통합 플랫폼 구축** — 정보·서비스·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15. **통합 통계관리** — 정확한 정책기반을 위한 통합 통계체계 구축



기본가치

- **참여** — 다양한 주체의 참여
- **연대** — 함께 성장하는 협력
- **혁신** — 사회문제 해결 중심

6/8 V. 4대 분야별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을 창출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국민의 삶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분야별 모델을 확산합니다.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주요 추진과제

-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 복합서비스 컨소시엄 구성
- 취약지 돌봄 공급 확대
- 인력 지원·교육 확대
- 공공지원인갑인대 연계

기대효과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주거
주거와 돌봄·교육·의료를 결합한 지역 주거모델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의 돌봄, 교육, 일자리와 연계된 통합 주거모델을 확산합니다.



주요 추진과제

- 특화임대주택 참여
- 운영지원센터 구축
- 임차인 보호
- 공공지원인갑인대 연계
- 주거 관련 사회서비스 결합

기대효과

- 주거 불안 해소
- 지역 기반 생활서비스 연계
-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 모델 확산

에너지
지속가능한 깨끗한 미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갑니다.



주요 추진과제

- 햇빛소득마을 확대
- 바람소득마을 추진
- 공공·유휴부지 활용
- 금융·유통·투자 연계
- 설비투자 금융지원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에너지 자립 강화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 지역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지역소득을 연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 농촌 돌봄·먹거리 사업 확대
- 지역자원 기반 사업 발굴
- 농촌 SOC 운영 참여
- 생태서비스 공동체 조성
- 어촌·산림 등 분야 확산

기대효과

- 농어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역자원 기반 일자리와 소득 창출
-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방향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협력모델을 확산**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7/8

Ⅵ.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1

핵심 4개 부처의 역할과 주요 추진과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협동조합, 일자리, 기업성장 정책을 연계하고, 법·제도·금융·조달·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 혁신과 범정부 기반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주요 추진과제

1. 사회연대금융 전달·중개기관 지원
2. 마을기업 성장지원
3. 지역 혁신모델 발굴·확산
4. 민관협력체계 구축
5. 통합 플랫폼 구축·기본법 연계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 지역문제 해결형 모델 확산
- 중앙-지자체-민간의 협력 기반 강화



지역 기반과 협력 거버넌스 강화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성장 지원

"협동조합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확산합니다."

주요 추진과제

1. 공제사업 활생화
2.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3. 협동조합 협력모델 발굴
4. 연합회 교육·조직화 지원
5. 제도개선 지원

기대효과

-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영역량 강화
- 협동조합 간 연대와 공동사업 확대
- 협동조합 지원 제도 기반 고도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과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합니다."

주요 추진과제

1.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3.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지원
4. 소셜벤더 판로지원
5. 사회성과 연계사업 확대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성 제고
-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의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투자·스케일업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의 혁신과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과제

1. 초기창업패키지 확대
2. 임팩트펀드·TIPS 지원
3. 소셜벤처 보증 지원
4. 성장 고도화 프로그램
5. 수출·판로 확대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 민간투자 유치와 스케일업 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 지원

8/8

Ⅶ.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2

연계 부처의 정책과제와 2027년 추진방향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영역을 일상 생활분야로 확장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갑니다.

1 연계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

돌봄·농어촌·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기반 통합돌봄으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요 추진과제

-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확대
- 복합서비스 연계
- 취약지 공급 기반 확대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발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생활서비스 확충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소득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

- 농촌형 조직 육성
- 생활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 농촌 SOC 운영 참여 확대
- 빈집·민박 사업 연계
- 먹거리·지역자원 기반 사업 발굴
- 산림·여촌 분야로 확산



국토교통부

주거모델과 참여 확대

안정된 주거와 지역의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주거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

- 특화임대주택 참여 확대
- 주거 관련 재무모델 개발
- 운영지원센터 구축
- 사업자 기준 정비
- 주거와 돌봄·교육 등 생활서비스 연계모델 확산
- 지역 주택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 모델 지원



2 2027년 추진방향 (예정)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2027년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1 금융·성장지원 사업 확대

-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
- 임팩트투자 연계 강화
-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확대
- 공공조달·판로 연계 강화



2 분야별 선도모델 본격 추진

-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선도모델 확산
- 지역 맞춤형 혁신사례 발굴·지원
- 부처 간 연계사업 확대



3 통합 관리기반 구축 (통계·플랫폼)

-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통합 통계관리 체계 마련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정비
- 관계부처 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주민과 연계한 협력사업 강화

- 지역 네트워크와 공동사업 확대
- 주민참여형 모델 발굴
-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교육·홍보 확대



기대효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활력 회복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강화

참고자료 9/9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참고자료 2를 중심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 중 국민의 일상과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정부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발췌·재구성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나 예산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등)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제를 확충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발췌)	추진시기	담당부처
1 지역 돌봄·복지·의료 민관협의체 구성	'26년~	복지부
2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근거 마련	'26년~	복지부
3 통합돌봄 컨소시엄 모델 개발	'26년~	복지부
4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 확충	'26년~	복지부
5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년~	복지부
6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매뉴얼 개발 및 확산	'26년~	복지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사회적경제의 참여 기반 강화

주거 (국토교통부 등)

안정된 주거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주거모델을 확산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발췌)	추진시기	담당부처
1 특화임대주택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	'26년~	국토부
2 공공지원 민간임대 재무모델 개발 및 안전장치 마련	'26년~	국토부
3 임대보증보험 등 제도개선 검토	'26년~	국토부
4 주거 운영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26년~	국토부
5 주거와 돌봄·교육 등 생활서비스 연계모델 확산	'26년~	국토부
6 지역 주택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 모델 지원	'26년~	국토부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지역 기반 주거모델 확산

농어촌·지역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생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주요 정책과제(발췌)	추진시기	담당부처
1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육성	'26년~	농식품부
2 농촌형 조직 육성 및 서비스 협약 확대	'26년~	농식품부
3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농촌 생활서비스 지원	'26년~	농식품부
4 농촌 SOC 운영 참여 확대	'26년~	농식품부
5 어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26년~	해수부
6 어촌 신활력사업 참여 확대	'26년~	해수부
7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6년~	산림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와
지역 소득 기반 확충

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합니다.

주요 정책과제(발췌)	추진시기	담당부처
1 햇빛소득마을 본사업 추진	'26년~	기후부
2 바람소득마을 확산	'27년~	기후부
3 e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	'26년~	기후부
4 공공·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26년~	기후부
5 금융·유통·투자 연계 지원	'26년~	기후부
6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26년~	기후부
7 탄소중립 지역모델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26년~	기후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확대 범위 전체 20개 부처 146개 과제 중 국민 생활과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발췌하였습니다.

추진시기 '26년~ : 2026년부터 추진(계획) '27년~ : 2027년부터 추진(계획)

출처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026.6.30.) 참고 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42~48쪽.

관계부처 합동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6 ~ 2028)

2026. 4. 6.

사람이 모여 지역을 바꾸는 협동의 힘



비전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

- S Scale up 경쟁력 강화
- M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 I Identity 정체성 강화
- L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 E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Ⅰ. 추진배경 | Ⅱ. 현황 및 문제점

02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협동조합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1 추진배경 | 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 사회문제
- 지역 중심의 혁신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요구 증가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참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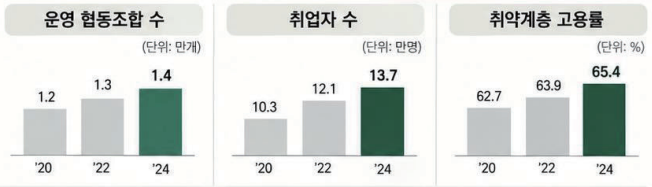


그간 정책의 성과와 한계

- 협동조합 수와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
- 지역과 분야를 넘어 다양한 활동이 확산
- 그러나 성장기반, 자금조달, 협력체계, 운영역량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존재



2 현황 | 협동조합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협동조합 수와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취약계층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자료: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 p.3 ('26년 기준)

3 주요 문제점 |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가?

성장기반의 취약
- 많은 조합이 소규모, 초기단계
- 안정적 수익모델 부족
- 자금조달의 어려움

협력·연대의 미흡
- 연합회 기능 제한적
- 조합 간 협력사업 부족
- 공공·민간과의 연계 미흡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의 과제
- 조합원 참여·권익 강화 필요
- 경영공시 등 투명성 제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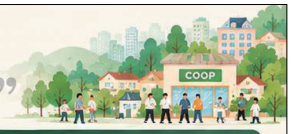
지역사회 참여의 제약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
- 시장진입·현장 규제 존재
- 농여촌 등 지역 기반 활동 확대 필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Ⅲ.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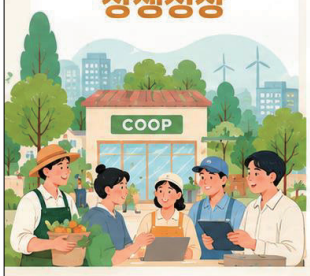
03 비전과 목표 | S.M.I.L.E 5대 전략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비전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정책목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2026년	2028년	2030년
운영 협동조합 수 (단위: 만개)	1.4	1.8	2.0 이상
취업자 수 (단위: 만명)	13.7	17	20 이상
취약계층 고용률 (단위: %)	65.4	68	70 이상

※ 자료: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 p.6 ('26년 기준, 2030년 목표 표함)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M.I.L.E 5대 전략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5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S Scale up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듭니다.

M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사업과 공제 등 협력 기반을 확대합니다.

I Identity **정체성 강화**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L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지역문제 해결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E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설립·운영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람이 모여 협동하고,
지역을 바꾸는 **협동조합의 힘**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Ⅳ. 세부 추진과제 ①

04 S · M 전략 | 경쟁력 강화와 협력·연대 강화

"개별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연대를 강화합니다."



S Scale up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듭니다.

1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진입–도약–고도화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화·판로·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업종·지역 특성별 맞춤 지원
- 기술개발, 판로, 디지털 전환 등
- 성장가능 조합 발굴 및 집중지원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우선출자 한도 확대와 신협의 출자 허용 등을 추진하여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반을 넓힙니다.



주요내용
- 우선출자 한도 확대
- 신용협동조합의 출자 허용 추진
- 다양한 사회연대금융 연계 지원

3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개선

지정요건,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요내용
-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개선
- 세제지원 확대 검토
-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

기대효과

-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
- 안정적인 수익모델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M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기반을 확대합니다.

1 연합회의 조합 육성 기능 강화

연합회의 교육·컨설팅·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별 조합의 역량을 높이고, 조합 간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조합 육성·교육·컨설팅 강화
- 업종·지역 연합회 지원 확대
- 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공제사업 활성화

조합 간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주요내용
- 조제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 운영 지이드라인 마련
- 연합회 중심 공제사업 추진 지원

3 거점실행조직 지정 및 공동사업 확대

지역별 거점실행조직을 지정하여 공공서비스 공동기획, 공동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 거점실행조직 지정·운영
- 공공서비스 공동기획 및 공급
-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지원

4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체계 강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판로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 사회연대조직 간 연계 플랫폼 구축
- 금융·판로·기술개발 연계 지원
- 공동프로젝트 및 협력사업 발굴

기대효과

- 조합 간 협력과 연대의 실질적 확대
-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사회연대조직 간 시너지 창출

Ⅳ. 세부 추진과제 ②

05 I · L 전략 | 정체성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답하고,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 Identity 정체성 강화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1 조합원의 참여권 강화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 부여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을 확립합니다.



주요내용
-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추진
- 의안제안권 확대
- 사전통지된 안건의 의결 원칙화

2 경영공시 제도 내실화

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공시 운영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경영공시 대상 사전안내
-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 위반 시 제재 강화

3 신뢰기반 확립

협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조합원 권익 보호체계 강화
-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보급
-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L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1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돌봄, 주거, 친환경, 관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돌봄·보건·건강 서비스 확대
- 주거·주택관리 서비스 확대
- 친환경·에너지 전환 분야 참여
- 관광·문화·생활서비스 확대

2 지역 현안 해결 참여

빈집 정비, 농촌 빈집 활용,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빈집 정비 및 농촌 빈집활용 민박 등 참여
-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연계
- 지역자산 활용 공동사업 지원

3 전문인력 연계 지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보건 분야 인력 지원 등 지역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연계 인력 지원
-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협력
-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 고도화

4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의 생활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의 활동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농어촌 생활복지 서비스 공급
-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참여

기대효과

- 민주적 운영으로 신뢰받는 협동조합
- 투명한 경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
-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지역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드는 협동의 힘

06 Ⅳ. 세부 추진과제 ③ | Ⅴ. 향후 추진계획

E 전략 | 운영 효율성 제고와 향후 추진계획

"협동조합이 더 쉽게 운영되고, 정책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E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설립·운영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1 설립·운영 편의 제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와 운영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주요내용
- 원격영상총회 허용
-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 확대

2 정책지원 거버넌스 강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주요내용
- 협동조합시·도협의회 정례화
-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
-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 지역 거버넌스 협력 확대

3 정책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컨설팅, 가이드라인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통계 고도화
- 회계·재무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컨설팅 체계 개선
-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확산

Ⅴ 향후 추진계획

법령 개정, 연구·검토,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 과제별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합니다.

법령 개정 추진 과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예시)
-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 부여 (협동조합 기본법)
- 우선출자 한도 확대 및 신협 출자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 원격영상총회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세제 관련 제도개선 (관련 법령)

연구·검토 과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예시)
- 협동조합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 공시 제도 개선 및 위반 제재 강화
-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 등 참여모델 검토

시범사업 추진 과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주요 과제(예시)
- 거점실행조직 지정·운영
-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기획 모델
-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공동사업 시범사업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협동조합 참여모델

단계적 확대 과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예시)
-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공유
- 전문인력 연계 지원 확대
-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정책지원 인프라 및 거버넌스 확대

추진일정(개요) 2026 ~ 2028

2026년
-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일부 시행
- 시범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연구 착수

2027년
- 주요 제도 시행 및 사업 확대
- 거버넌스 및 데이터 연계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8년
- 성과 점검 및 제도 보완
- 전국 확산 및 정착 지원
- 다음 계획 수립 기반 마련

기대효과

- 협동조합 운영 편의성 향상
- 정책지원의 효율성 제고
- 현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



07 Ⅲ 참고자료

S.M.I.L.E 5대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총괄

"협동조합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S Scale up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듭니다.



1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진입·도약·고도화 단계별 지원
- 사업화·판로·기술개발 등 지원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우선출자 한도 확대, 신협 출자 허용 추진
- 다양한 사회연대금융 연계 지원

3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개선
- 지정요건, 세제 등 제도개선 검토
-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4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활성화
- 특화형 모델 발굴·집중 지원
-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제고

M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기반을 확대합니다.



1 연합회의 조합 육성 기능 강화
- 컨설팅·교육·관리 기능 강화
- 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 공제사업 활성화
- 공제사업 모델 제발 및 확산
-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3 거점실행조직 지정 및 공동사업 확대
- 거점실행조직 지정·운영
- 공공서비스 공동기획 및 공급

4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체계 강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동과의 연계
- 금융·판로 등 공동프로젝트 추진

I Identity 정체성 강화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1 조합원 참여권 강화
-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추진
- 사전통지 안건 의결 원칙화

2 경영공시 제도 내실화
- 경영공시 대상 사전안내
-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위반제재 강화

3 신뢰기반 확립
- 조합원 권익 보호체계 강화
- 운리경영 가이드라인 보급

4 우수사례 확산
- 민주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 홍보·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

L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1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돌봄·보건·건강, 주거, 친환경, 관광 등
- 다양한 시·분야 서비스 공급 확대

2 지역 현안 해결 참여
- 빈집 정비, 농촌 빈집 활용, 지역 관광 등
- 지역 현안 해결 공동사업 지원

3 전문인력 연계 지원
-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연계 인력 지원
- 의료·보건 분야 인력 지원

4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 생활복지 서비스 공급
-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E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설립·운영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1 설립·운영 편의 제고
- 원격영상총회 허용
-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전자적 의사결정 확대

2 정책지원 거버넌스 강화
- 시·도협의회 정례화
-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 확대

3 정책지원 인프라 확충
- 실태조사 및 통계 고도화
- 회계·재무 가이드라인 마련

4 단계적 제도 개선
- 현장 기반의 지속적 제도개선
-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공유

추진일정 (개요)

2026년
-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일부 시행
- 시범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연구 착수

2027년
- 주요 제도 시행 및 사업 확대
- 거버넌스 및 데이터 연계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8년
- 성과 점검 및 제도 보완
- 전국 확산 및 정책 지원
- 다음 계획 수립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장
- 협력과 연대로 더 큰 시너지
-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확대
- 현장 중심의 운영 효율화


고용노동부
2025. 12.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생태계 회복 및 지원 복원·혁신 중심으로 -
사람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내일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지역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연대와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중앙·지방정부·민간기관의 협업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법·제도 정비와 신뢰 회복
고용노동부


02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2/8
Ⅰ.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입니다.
추진 배경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1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복합 사회문제 해결 기여
누적 인증·유지기업 수 ('07~'24)
누적 인증
누적 유지
4,966개 (누적 인증)
3,726개 (누적 유지)
연간 인증·유지기업 수 ('07~'24)
연간 인증
연간 유지
※ '22년을 정점으로 '23년부터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및 인증유지 기업 수가 감소하며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2 양적 성장 이후 증가세 약화
3 기존 지원구조의 한계
기존 지원구조의 주요 한계
인건비 중심 직접지원
정부 의존성 심화 장기 고용효과 제한
개별기업 단위 지원 지역 확산 한계
4 예산 축소와 지역 기반 생태계 약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추이 (억원)
2,042억원
830억원
284억원
약 86% 감소 ('23년 대비)
'23년
'24년
'25년
민간지원기관 변화
민간지원기관 (41개소)
'24년 전면 폐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생태계 회복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


03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3/8
Ⅱ. 목표와 추진과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정책 목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기반 구축
추진 전략
가치 중심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사람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
협력 중심
지역과 현장의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를 확산
혁신 중심
민관이 함께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혁신
지속 가능성
법·제도 정비와 인식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생태계를 조성
4대 추진과제
(10개 세부과제)
1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세부과제 2개
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초기창업·인증전환·재도전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 교육·멘토링·컨설팅 등 진입 기반 마련
1-2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제고 유도
• 사회적가치 평가체계(SVI) 내실화
• 평가 결과의 지원사업 연계 확대
2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사회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
세부과제 3개
2-1 지역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 지자체, 지역기업, 시민사회 등 협력
•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 발굴·확산
2-2 지역 내 사회성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 사회성과의 측정·화폐가치 연계
• 지역 기여 인센티브 모델 도입
2-3 지역·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
•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운영
•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체계 구축
3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민간의 협업을 확대
세부과제 3개
3-1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 성장지원센터의 권역별 기능 재편 (6개 통합센터 + 13개 일반센터)
• 지역 거점 기반 맞춤형 지원 운영
3-2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경영·판로·자금 등 연계 지원
• 전문 서비스(법률·노무·지식재산 등) 제공
3-3 공공·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확대
• 민간기업·금융기관의 협력 및 ESG 연계 강화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지원
세부과제 2개
4-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당사자 법정단체 신설 및 협의체 구축 추진
•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추진 (5년 → 3년)
4-2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
•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 및 인력 양성
• 정책·사례 연구 및 정보 제공 강화
• 인증 출입 인정제도 도입 검토
추진 기반
(중앙·지방정부·사회적기업·민간기관 협력 강화)
중앙정부 정책 수립 법·제도 정비
지방정부 지역 정책 실행 지역 협력 강화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실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민간기관 전문지원 자원 연계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04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4/8
Ⅲ. 세부 추진과제 ①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1)
추진 방향
창업부터 성장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합니다.
1 창업 · 발굴 단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초기 성장 기반 마련
1-1 창업지원 개편
초기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 제공
초기창업형
예비 창업자의 초기 창업 지원
인증전환형
기존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재도전형
· 재도전 기업의 재기 지원
1-2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예비 창업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수립
시제품 개발 지원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지원
2 육성 · 고용창출 단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안정적 기업 운영 지원
2-1 인건비 지원 개편 및 복원
취약계층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복원합니다.
취약계층 고용지원
• 취약계층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지원
지원요건 개선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
지속고용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안정적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2-2 경영 안정화 지원
초기 운영과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운영자금 지원
• 시설비·운영자금 지원 확대
경영컨설팅
• 경영진단, 세무·회계, 경영개선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
• 법률·노무·지식재산 등 전문 서비스 연계
3 성장 · 자립 단계
시장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3-1 판로 확대 지원
공공구매 확대, 민간시장 진출,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공공구매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활용 확대
민간시장 진출
• 유통채널 연계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지원
3-2 자금지원 및 성장지원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금과 스케일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설비·운영자금
•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 판로·기술·R&D 등 스케일업 지원
연계지원 강화
• 타 부처 정책·서업과 연계 지원
기대 효과
(정책 방향)
초기 창업 진입 장벽 완화
• 다양한 유형의 창업 지원으로 진입 기반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확대
• 안정적 고용 유지와 사회서비스 공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판로·자금 등 총합 지원을 통한 기업 자립 역량 강화
사회적가치의 지속적 확산
•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 촉진

05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5/8

Ⅲ. 세부 추진과제 ❶ |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2)

추진 방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성과 제고를 유도합니다.

1 사회적기업 사회성과 평가(SVI)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성과 제고를 유도합니다.

평가 관점 (3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정도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와 지역경제 기여 등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혁신, 이해관계자 참여 등
5개 지표	4개 지표	5개 지표

평가 지표 총 3개 관점 14개 지표로 구성

사회적 성과 5개 지표 + 경제적 성과 4개 지표 + 혁신 성과 5개 지표

평가 등급 총 5개 등급으로 기업의 사회성과 수준을 판단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평가 결과의 정책 연계 강화

사회성과 평가 결과를 인건비, 경영, 판로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인건비 지원 연계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수준 차등화(인센티브 강화) • 사회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경영지원 연계	• 경영컨설팅, 시설비 등 경영지원 사업과 평가 연계 • 사회성과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판로지원 연계	• 공공구매, 민간시장 진출 등 판로지원 사업과 평가 연계 • 사회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사회성과 평가 활용 확대(예시)



3 평가체계 개선 및 현장 지원

평가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을 지원합니다.

평가 체계 개선	• 평가 지표의 현실성 제고 • 현장 의견을 반영한 평가 절차 개선
교육·컨설팅 지원	• 평가 대응 교육 제공 •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회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사례 발굴 •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원

SVI가 만드는 변화(예시)

-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성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사회적 신뢰 제고



"SVI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평가체계입니다."

기대 효과 (정책 방향)

- 사회적가치 창출 및 성과 관리 강화
-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연계성 제고
- 우수기업 인센티브 및 민간참여 확대
- 사회적가치의 지속적 확산 및 사회적 신뢰 제고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고용노동부

06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6/8

Ⅲ. 세부 추진과제 ❷ |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지역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합니다.

1 지역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역주민·시민사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모델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26년 시작 분야)



노동통합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지원
- 지역 일자리 연계 모델 발굴



통합돌봄

-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복지·주거 등 연계 모델
-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협력 주체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역주민·시민사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 정책 연계)	(서비스 제공)	(수요·참여)	(자원 연계)	(협력·투자)

2 지역 내 사회성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지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측정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지역사회 기여 인센티브

-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측정 결과를 반영
-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 방안 마련

우수 모델 발굴 및 보상

-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협력모델 발굴
- 우수 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포상 지원
- 지역 내 확산을 위한 후속지원

기대 효과

지역 문제 해결 촉진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

3 지역·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체제를 구축합니다.

지역 협력적 논의기구

- 지자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논의
-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의 지속적 반영

소통 채널 확대

-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운영
- 지역별 특화 이슈에 대한 논의기구 운영
-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공유·점검 체계 마련



지역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사회

기대 효과 (정책 방향)

-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 해결 확대
- 지역 내 사회성과 확산 및 인센티브 기반 마련
- 지역·현장·다주체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우수 모델의 발굴·확산으로 전국적 영향력 확대

고용노동부

07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7/8

Ⅲ. 세부 추진과제 ❸ |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추진 방향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민간지원기관, 중앙·지방정부,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1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가까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장지원센터 권역별 기능 재편

기존 19개 성장지원센터

- **6개 통합센터 (권역 거점)**
  - 권역별 정책지원 기능 강화
  - 특화사업 기획·연계
  - 지역 생태계 조성 지원
- **13개 일반센터 (지역 기반)**
  -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 기초 컨설팅·교육
  - 지역 네트워크 연계
  - 현장 수요 발굴

지역 거점 기반 지원체계 운영

-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현장 수요 반영 사업 설계
- 지자체·지역기관 연계 추진

2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지원기관 지정·운영

- **권역별 민간지원기관 (17개)**
  - 권역별 창업·경영지원
  - 현장 밀착형 컨설팅
  - 지역 네트워크 연계
- **특화 민간지원기관 (3개)**
  - 분야별 전문 지원
  - 혁신모델 발굴·확산
  - 전문 인력 양성

3 공공·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확대합니다.

공공기관 협력 강화
- 공공구매 확대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

민간기업 협력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CSR) 연계
- ESG 협력 및 투자 연계
- 사업협력, 판로·시장 연계

금융기관 연계 강화
- 정책금융, 사회적금융 연계
-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연계
-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발굴

다양한 자원 연계
-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 전문인력, 기술, 인프라 연계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촉진

민관협력 기반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방정부·민간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정책·사업 간 연계와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기대 효과 (정책 방향)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원사업 간 연계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공·민간 협력 기반 지원 생태계 확대
-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과 사회적가치 확산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고용노동부

08 고용노동부 |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8/8

Ⅲ. 세부 추진과제 ❹ |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추진 방향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지원합니다.

1 법·제도적 기반 강화

사회적기업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공제사업 추진 기반 마련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당사자 법정단체 및 협의체 구축 추진
-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의 법정단체 신설 및 협의체 구축 추진
-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정책 협력 강화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추진
-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추진
- 정책의 유연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

2 인증 체계 합리화 검토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합니다.

인증 졸업 인정제도 도입 검토 검토
-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의 자립 촉진을 위한 인증 졸업제 도입 검토
-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 마련

인증 심사·갱신 절차 개선 검토 검토
- 인증 기준, 심사 절차의 효율화
- 현장 부담 완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



3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합니다.

대국민 홍보 강화 추진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교육 및 인력 양성 추진
- 사회적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민간 대상 인식 제고 교육 확대

연구 및 정보 제공 추진
- 사회적기업 정책·사례 연구 강화
-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4 자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강화 추진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 사회적경제 전반의 생태계 활성화 지원

정책 간 연계 및 통합 추진 추진
- 고용, 복지, 지역개발 등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 확대 지원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 추진
- 안정적 예산 운영과 다원적 재원 연계
- 민간지원 및 사회적 공유과의 연계 확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대 효과 (정책 방향)

- **제도적 안정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 촉진** — 인증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정비
- **사회적 신뢰 및 인식 제고** — 국민 이해와 지지 확대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연계 강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 9. 22.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더 큰 내일



성장성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을 확산합니다.

정책이 지향하는 변화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 지역문제 해결과 포용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가치의 확산** — 사람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02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Ⅰ. 추진배경 및 현황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큰 내일을 만듭니다.



1 추진배경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의 중요성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UN(2023)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지역문제 해결과 포용적 경제 성장에 기여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은 지역문제 해결,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
- 고용, 매출 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우수한 사례가 존재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각각 다른 조직유형과 성장단계로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기업 성장에 한계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역할을 넘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 현황 ('24년 기준)

▶ 기업 유형별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주요 분야	고용·노동·복지 등	지역자원·마을사업	자활·자립지원	공동사업·서비스	혁신기술·사회문제 해결
기업 수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 36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1개, 농업협동조합 6개, 수산업협동조합 4개, 산림조합 4개, 새마을금고 1개, 연합협동조합연합회 1개(별도 통계)

▶ 최근 3년간 성장 유형 분석

고속성장	성장유지	일반성장	저성장	기타
31.8%	21.6%	23.7%	16.8%	6.1%

고속성장 + 성장유지 53.4%

※ '21~'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기준

기업 유형별 고속성장 비중(업종별)



※ SMS 기준 '25.1월말 활동 중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최근 3년('21~'24년) 연평균 매출액 또는 고용 증가율

03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Ⅱ. 목표 및 추진과제

성장하는 기업, 더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갑니다.



정책 목표

성장성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을 확산합니다.



4대 추진과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부터 자금·판로, 네트워킹, 법·제도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 초기창업패키지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 신설('27년~)
- 사회연대경제기업 TIPS 10% 우선 할당('26년~)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운영(연례, 지속 추진)
-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②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 임팩트 펀드 조성 및 민간투자 확대('26년~)
-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 강화('26년~)
-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금융상품 개발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확대 ('27년 시범사업, '28년~ 제도 운영)
- 민간·공공 판로 연계 및 시장 진입 지원

③ 국내·외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 컴업(COMEUP) 연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국내·외 투자자, 소타트업, 기업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대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공동 R&D, 공동 브랜드 등 협력모델 발굴·지원

④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진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대상 추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 이관 및 통합지원 기반 구축('26년 11월 목표)
- 소셜벤처기업 법적 기반 강화 (개별법 제정 추진)
-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추진

정책이 지향하는 변화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 지역문제 해결과 포용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가치의 확산** — 사람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04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Ⅲ. 세부 추진 과제 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4/7

아이디어에서 사회적 가치와 성장으로!

1 기업 성장 단계별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합니다.

① 초기창업 단계 — 아이디어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 신설

- 2027년 신설 추진(예정)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 운영
- 사업화 자금,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사회적 목적과 시장성을 함께 검증하는 선발·평가

추진 시기: 2027년부터 추진(예정)

② 성장 단계 —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



사회적 가치 창출 ESG 분야 기업에 TIPS 10% 우선 할당

- 2026년부터 추진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 내 사회적 가치 창출 ESG 분야 기업 10% 우선 할당
- 기술개발(R&D), 사업화, 투자 연계 지원
- 역량 있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③ 도약 단계 — 사업 확장과 지속 가능성 강화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연례, 지속 추진)

-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 발굴·육성
- 투자 유치, 사업화 지원,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정부·민간·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경쟁·협력의 장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후속 지원 연계

추진 시기: 연례 개최(지속 추진)

④ 확산 단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장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연대 기반 성장모델 지원
- 지역·업종 간 공동사업, 공동브랜드, 공동판로 등 협업화 추진

추진 시기: 지속 추진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지속 추진)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경쟁·협력 프로그램

- 투자 유치 — 사업화 지원
- 멘토링 — 컨설팅
- 네트워킹 — 협력기회

협업 활성화 (지속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대 기반의 성장 모델을 지원

- 공동사업 — 공동브랜드
- 조합·기업 간 — 공동사업 지원
- 소상공인과의 — 연대·협업 촉진

※ 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22.

05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5/7

Ⅲ. 세부 추진 과제 ❷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든든한 금융, 더 넓은 시장으로 성장의 기회를!

2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시장진입을 위한 자금과 판로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공공·민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공공구매 등 다양한 수단을 지원**합니다.

① 임팩트 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모험자본 유입 확대



-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임팩트 펀드 조성('26년~)
- 민간 투자자와 공동 투자 구조 확대
-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초기 → 성장 → 도약)
- 지역 기반 임팩트 투자 생태계 조성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② 보증 및 융자 지원 강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 강화('26년~)
-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금융상품 개발
-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지원 강화
-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③ 공공구매 확대 및 우선구매 제도 강화

공공시장의 마중물을 통해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확대('27년 시범사업, '28년 제도 운영)
- 공공조달 지원 전설팅 및 역량 강화
- 공공구매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지방정부의 공공구매 확대 활동 지원

추진 시기: 2027년 시범사업 2028년부터 제도 운영

④ 민간·공공 판로 연계 및 시장진입 지원

공공·민간 시장으로의 진출과 지속 가능한 판로 확대



- 국내외 전시·박람회 및 판로 지원
- 온라인 판로 플랫폼 연계
- 대기업 및 유통사와의 협력 기회 확대
- 지역 기반 상생 유통망 구축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추진 시기: 지속 추진

기대 효과

-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임팩트 투자·보증·융자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공공시장의 마중물 확보** —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요 창출
- **판로 확대와 시장진입** — 공공·민간 시장 연계를 통한 매출 확대와 지속 가능성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기반 유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동시 창출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2027년 시범사업 추진, 2028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22.

06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6/7

Ⅲ. 세부 추진 과제 ❸ 국내·외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함께 만드는 더 큰 시장, 더 넓은 연대!

3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장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국내·외 다양한 주체와 연결되어 협력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상생협력**을 지원합니다.

① 컴업(COMEUP) 연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강화

국내·외 스타트업 및 투자자와의 교류를 통한 성장 기회 확대



- 컴업(COMEUP)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국내·외 투자자, 스타트업, 기업 동과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제 컨퍼런스, 전시·홍보 참여 지원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② 대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과 판로 확대



- 대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민간 협력사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공동 R&D,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등 협력모델 개발 지원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③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 기회 확대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 해외 전시·박람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 지원
-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컨설팅 지원
- 해외 임팩트 투자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계
- 해외 우수사례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시기: 2026년부터 추진

기대 효과

- **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자원 확보
- **협력 기반 생태계 강화** — 기업·대기업·투자자·국제기구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형성
- **사회적 가치의 확산** — 공동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임팩트 확대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형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위상 강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22.

07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7/7

Ⅲ. 세부 추진 과제 ④ 법·제도적 기반 정비 및 추진일정

더 튼튼한 제도, 더 넓은 기회,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1 법·제도적 기반 정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기업 간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진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대상 추가



- 마을기업·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 확대
-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책 연계 강화
- 성장단계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이관 및 통합지원 기반 구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이관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 협동조합 제도와의 연계, 교육·컨설팅·판로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추진 시기 2026년 11월(목표)

③ 소셜벤처기업 법적 기반 강화



- 소셜벤처기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동록 및 인증 동 제도적 기반 정비
- 투자·판로·인력 등 지원 근거 강화
- 개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추진

추진 시기 연구·검토(지속)

④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추진



-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 민간투자의 유입을 통한 자금조달 기반 확대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

2 주요 추진일정(안)

각 과제별 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	2026년	2027년 이후
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진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 추진 및 제도 정비	시행 및 후속 제도 개선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이관	이관 준비 및 지원체계 설계	이관 준비 및 통합지원체계 설계	소관 이관('26.11, 목표) 및 지원체계 구축	운영 안정화 및 지원 확대
3 소셜벤처기업 법적 기반 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검토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법 제정 추진 및 시행
4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대상 확대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법령·지침 정비	제도 시행 및 투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22.

2027 중앙부처

2027 POLICY INFOGRAPHIC | 3부작 시리즈

사회연대경제 예산과 현장의 준비

정부의 예산 요구 방향에서 협동조합의 실행과제까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연대경제

01 SERIES 01 / 03

사회연대경제 예산 요구 현황과 정책 방향

주요 부처별 예산 요구액과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어디에 투자하려는가?

02 SERIES 02 / 03

2027년 협동조합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협동조합 6대 주요 사업과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무엇을 지원하려는가?

03 SERIES 03 / 03

2027년 협동조합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대 사업별 현장 준비사항과 실행을 위한 체크포인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정책을 읽고, **기회**를 찾고, **실행**을 준비하다.


2027년 중앙부처
SERIES 01 / 03
사회연대경제 예산 요구 현황과 정책 방향
주요 부처별 예산 요구액과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지원을 넘어 성장·금융·인재·지역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 본 자료는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7년 예산 요구안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정 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행정안전부
2027년 요구액
838.8억 원
주요 사업 꼭지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생력 강화
청년 일경험
마을기업 육성
사회연대금융
AX 지원
예산 요구 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역 생태계 강화
기획예산처
2027년 요구액
818억 원
주요 사업 꼭지
협동조합 선도대학
이차보전
AX/DX 전환
공공서비스 협업실행
현장 전문가 양성
거점실행조직 육성
예산 요구 방향
협동조합의 성장·전환과 공공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2027년 요구액
1,243억 원
주요 사업 꼭지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문인력 지원
예산 요구 방향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과 민간투자·전문인력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요구액
171억 원
※ 정부안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주요 사업 꼭지
소셜벤처
소상공인협동조합
임팩트펀드
예산 요구 방향
기업 경쟁력과 민간투자 기반 유지·지원
2027년 예산 요구에서 읽히는 정책 흐름
1 생태계 기반 구축
• 제도·추진체계 정비
• 지역 기반 강화
2 협동조합 역량 강화
• 창업·성장 지원
• 디지털 전환(AX/DX)
3 사회적기업 성장
• 시장 진출·투자 연계
• 청년·전문인력 확대
4 민간시장·투자 연계
• 소셜벤처·협동조합
• 임팩트 투자 기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연대경제


2027년 협동조합 예산
SERIES 02 / 03
2027년 협동조합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협동조합의 성장·전환과 공공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7년 예산 요구안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정 예산과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예산 규모
818억 원
29억 원
2026년 (당초예산)
2027년 (요구안)
전년 대비 약 28배 확대
정책 방향의 변화
기존 교육·판로 중심 일회성 지원
2027년 성장·전환 금융·공공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지원
6대 주요 사업과 지원 방향
협동조합의 창업부터 성장,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전문역량, 지역 실행체계까지 종합 지원
1 협동조합 선도대학
창업·인재
• 대학 기반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인재 육성과 실전 교육
• 지역 기반 문제해결형 창업모델 발굴
2 협동조합 이차보전
금 융
• 협동조합 대상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부담 완화
• 안정적인 사업화와 지속성 강화
3 AX/DX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
• 협동조합의 업무·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 AI 등 신기술 활용 역량 강화
•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4 공공서비스 협업실행 지원
공공서비스
•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지원
• 공공기관·지자체와 공동실행 모델 발굴
5 현장 전문가 양성
전문역량
• 경영·회계·법무·디지털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연계
• 협동조합의 자립역량 강화
6 거점실행조직 육성
지역 협력
• 지역 거점형 협력 플랫폼 구축
• 연합회·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
• 공동사업 개발과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2027년 협동조합 예산에서 주목할 정책 변화
1 교육 중심에서 창업·성장 연계로
청년 인재 육성과 실전 창업모델 지원
2 일회성 지원에서 디지털 전환·금융 지원으로
AX/DX 전환과 이차보전으로 성장의 기반 강화
3 개별조합 지원에서 공동사업·공공서비스 협력으로
지역 수요와 연계한 협업실행 모델 확대
4 단편적 지원에서 전문인력·지역 실행체계 강화로
현장 전문가 양성과 거점실행조직 육성
협동조합의 성장과 전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7년 협동조합 현장 준비
SERIES 03 / 03
2027년 협동조합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을 우리 협동조합의 준비과제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7년 예산 요구안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정 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대상·조건·일정은 향후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RIES 01
예산 방향
정부는 어디에 투자하려는가?
SERIES 02
협동조합 지원사업
무엇을 지원하려는가?
SERIES 03
현장 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획예산처
2027년 협동조합 6대 주요 사업과 현장 준비사항
협동조합의 창업부터 성장,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전문역량, 지역 실행체계까지 종합 지원
1 협동조합 선도대학
창업·인재
주요 지원 방향
• 대학 기반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인재 육성과 실전 교육
• 지역 기반 문제해결형 창업모델 발굴
현장의 준비사항
청년·지역 인재와 함께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대학·지역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
실제 사업모델 구체화
2 협동조합 이차보전
금융
주요 지원 방향
• 협동조합 대상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부담 완화
• 안정적인 사업화와 지속성 강화
현장의 준비사항
자금 수요와 상환 계획 점검
사업성과와 재무관리 현황 정리
금융기관 연계 가능성 검토
3 AX/DX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
AI
주요 지원 방향
• 협동조합의 업무·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 AI 등 신기술 활용 역량 강화
•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현장의 준비사항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업무 파악 (회계·조합원·고객관리 등)
AI·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전환 계획과 실행역량 검점
4 공공서비스 협업실행 지원
공공서비스
주요 지원 방향
•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지원
• 공공기관·지자체와 공동실행 모델 발굴
현장의 준비사항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문제 분석
협력 가능한 기관·조직 발굴
공동사업 아이디어와 실행계획 구상
5 현장 전문가 양성
전문역량
주요 지원 방향
• 경영·회계·법무·디지털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연계
• 협동조합의 자립역량 강화
현장의 준비사항
우리 조합에 필요한 전문역량 진단(법률·회계·노무·경영 등)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컨설팅 계획 수립
내부 인재 양성 계획 마련
6 거점실행조직 육성
지역 협력
주요 지원 방향
• 지역 거점형 협력 플랫폼 구축
• 연합회·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
• 공동사업 개발과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현장의 준비사항
지역·업종별 연합회와 협력 검토
거점 실행조직 참여 가능성 탐색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4가지 질문
01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역의 수요와 해결과제
02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조합원·연합회·공공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
03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
자금·인력·디지털·경영·전문역량
04 어떤 성과를 만들 것인가?
사업성과와 사회적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업을 기다리기보다, 해결할 문제와 함께할 파트너부터 준비합시다.

사회연대경제 협업 성공사례 분석

정지영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2026.10.21.

사회연대경제 협업 성공 사례 분석

-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영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 Research Institute



목 차

01. 협업에 대한 이해 2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8
03. 협업 사례 분석 13
04. 우리 지역의 협업 설계 24

00 강의 안내

학습 목표와 90분 강의 흐름

▶ 지역 수요와 기존 자원을 연결해 생활서비스를 함께 공급할 방법 이해
▶ 운영·계획 사례를 구분하고 우리 지역의 주체·자원·비용을 구체화

학습 흐름

순서	핵심 내용	시간
도입	강의 목적과 사례를 읽는 관점	5분
협업 이해	개념·난이도·성공 조건과 위험 요인	15분
사업모델	4개 분야 16개 기본모델의 선택·결합	10분
사례 분석	9개 협업 사례와 운영·계획 단계 비교	40분
정리·질의응답	우리 지역 적용 10분 + 질의응답 10분	20분

02

01 협업에 대한 이해

농촌 협업의 범위 : 조직의 경계를 넘어 역할을 결합

▶ 협업은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과 역할을 결합하는 과정
▶ 이번 강의는 협업 가운데 주민 생활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며 자원·실무·비용·책임을 나누는 공동사업에 초점

참여주체	가져올 수 있는 자원	협업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
주민·주민조직	생활 경험·관계망·이용 수요	수요 발굴·주문 취합·주민 의견 조정
사회연대경제조직·소상공인	상품·서비스·현장 인력	판매·조리·배송·수리·돌봄의 실제 공급
농협·공공기관·행정	물류·공간·정책사업·공공수요	기반 제공·공동조달·안정적 수요 연계
중간지원·금융 주체	기획·중개·조정·자금	사업 연결·역할 협의·운영재원 설계

03

01 협업에 대한 이해

협업의 유형 : 목적에 맞는 공동 책임의 범위 선택

▶ 정보 교환·상호 연계·자원 공유·공동사업은 함께 맡는 업무와 책임이 다르므로 해결할 문제에 맞게 선택
▶ 공동사업이 모든 협업의 최종 단계는 아니며 실제 수요와 참여주체의 준비 수준에 맞춰 필요한 범위로 설계

협업 유형	함께 하는 일	시작 전에 정할 기준
정보 교환	수요·사업 일정·유휴자원 공유	담당 연락처와 정보 갱신 주기
상호 연계	이용자 의뢰·상품 소개·서비스 연결	의뢰·응답 절차와 책임 범위
자원 공동 활용	공간·차량·인력·구매·홍보 공유	이용 일정·운영비·관리 책임
공동사업 운영	공동판매·조리·배송·서비스 운영	대표 운영자·정산·품질·손익 분담

04

01 협업에 대한 이해

협업을 시작하는 조건 : 참여와 신뢰의 기반 만들기

▶ 협업은 공동 문제를 풀기 위해 관계와 역할을 연결하는 과정이며, 참여 이유와 함께 일할 기반을 먼저 확인
▶ 공동 목표·대화 방식·참여 여건을 맞추고 작은 공동 활동을 통해 다음 협업의 범위와 실현 가능성 판단

01	**왜 함께해야 하는가?** 참여 동기·여건	각 주체가 얻으려는 이익과 내놓을 수 있는 자원, 감당할 업무를 함께 확인
02	**무엇을 함께 바꿀 것인가?** 공동 문제·목표	주민의 어떤 불편을 해결할지 정하고, 서로 다른 기대를 하나의 공동 목표로 구체화
03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정할까?** 대화·조정 방식	정기적으로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방식과 이견을 조정할 담당자를 합의
04	**무엇부터 함께 해볼 것인가?** 작은 공동 경험	작은 활동을 함께 수행해 역할과 약속을 확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협업 범위 결정

정보 교환·상호 연계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 여부는 별도로 판단

05

01 협업에 대한 이해

공동사업의 지속 조건 : 수요·수입·책임·분담 설계

▶ 공동사업은 자원·실무·비용·책임을 나누어 운영하는 협업으로, 주민 수요와 운영비 충당방식을 함께 설계
▶ 함께 일할 의지가 있어도 지속적인 운영은 별도 과제이므로 수입원·실무 책임·손익 분담을 구체적으로 합의

01 실제 수요

누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필요한 품목·서비스와 이용 빈도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검토

02 반복수입

무슨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가?

반복수요를 확보할 핵심사업을 정하고, 판매수입·서비스 대가·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 검토

03 실무 책임

누가 일을 맡고 최종 책임지는가?

주문 접수·공급·배송·정산·민원 대응의 담당자를 정하고, 일정 조정과 공백 대응을 맡을 운영주체 지정

04 손익 분담

수입·비용·손실을 어떻게 나누는가?

각 조직의 투입 인력·자원과 공동운영비를 확인하고, 수입 배분·재고 부담·적자 발생 시 분담기준 합의

06

01 협업에 대한 이해

공동사업의 위험 관리 : 문제 발생 전에 운영 기준 합의

▶ 공동사업의 어려움은 수요 부족·업무 편중·정산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운영 기준을 합의
▶ 문제가 생긴 뒤 참여 의지를 탓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함께 점검하고 사업의 범위·역할·비용을 조정할 필요

위험 신호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시작 전에 합의할 기준
이용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 공간·인력·공급량부터 확대	이용은 적은데 고정비·재고가 쌓여 운영을 유지할 부담이 커짐	사전주문·소규모 운영으로 수요 확인 이용량에 맞춘 공급 범위·운영일 설정
핵심사업의 수입·인력이 불안정한데 부가 서비스를 계속 추가	새로운 업무가 기존 인력과 재원을 소진해 핵심사업의 운영까지 흔들림	핵심 수입·업무량을 먼저 확인 서비스 추가·축소를 판단할 기준 합의
접수·정산·조정 업무와 공동비용이 특정 사람이나 조직에 집중	드러나지 않는 노동과 비용이 누적되어 참여 피로·책임 공방이 발생	업무별 시간·인건비·공동비용을 확인 담당·대체 인력·비용 부담을 함께 배분
매출 정산·재고 손실·민원 처리와 참여 중단의 기준이 불명확	매출이 생겨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	정산 주기·손실 부담·분쟁 처리 합의 탈퇴 시 남은 업무와 비용의 정리 기준 마련

07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기본소득과 협업 : 구매력을 지역의 공급으로 연결

▶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구매력이 늘어나더라도 가까운 사용처와 공급체계가 부족하면 생활서비스 공백이 지속
▶ 협업은 분산된 수요를 모으고 지역의 생산·판매·서비스를 연결하여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어질 기반을 마련

주민 수요	공급주체 연결	공동 운영	반복 거래
주민에게 구매력이 생겨도 가까운 사용처·이동수단이 부족하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농가·상점·서비스 조직을 연결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공급할 기반 마련	공간·차량·인력을 함께 활용하고 접수·배송·정산 업무를 나누어 소규모 수요에 대응	주민 이용과 공공수요를 확인하고 수입·비용·품질을 함께 평가하여 운영방식을 조정
주문 취합·이용 안내	지역 조달·공급 연계	운영 역할·비용 분담	이용 확인·지속 개선

공급 기능을 연결한 뒤 실제 이용과 운영비를 확인하며 공동사업의 범위를 조정

08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먹거리·생활재 접근 : 4개 기본모델

▶ 주민이 자주 구매하는 먹거리·생필품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판매·배송하여 주민 소비와 지역 공급을 연결
▶ 생산·조달, 고정 판매거점, 이동·배송, 급식 기능을 나누고 지역 수요에 맞는 주체와 운영방식을 결합

기본모델	어떻게 공급하는가	핵심 운영·연계 주체	주체 간 협의할 사항
1. 지역먹거리 직매·공급	농산물을 집하·소분하여 직매장·꾸러미로 판매하고 음식점·급식기관에 납품	농협·로컬푸드센터(집하) 사회연대경제조직(판매·정산)	농가의 품목·물량·납품조건, 집하·판매의 역할과 비용, 구매기관의 정기수요를 협의
2. 마을점포·공동판매거점	마을점포의 생필품 판매에 전화주문·상품수령·배송을 함께 제공하는 거점 운영	주민조직(수요)·농협(조달) 사회연대경제조직(점포 운영)	필요한 품목·운영시간, 조달·점포운영의 역할과 판매수입·운영비를 함께 협의
3. 공동구매·이동장터·가정배송	주문을 모아 공동구매하고 이동판매·팝업장터와 거동불편가구 배송을 결합	마을조직(주문)·농협(상품) 자활센터(인력·차량 연계)	주문·배송주기와 담당, 상품·차량·인력의 역할, 원거리 배송비 분담을 협의
4. 공동급식·반찬·도시락	지역 식재료로 급식·반찬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가구 먹거리돌봄과 연계	먹거리재단(조달) 사회연대경제조직(조리) 경로당·복지시설(수요)	조리·배송의 역할을 나누고 이용료·공공급식 수입과 취약가구 지원 범위를 협의

09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이동·돌봄·건강 : 3개 기본모델

▶ 마을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동·돌봄·건강서비스로 연결하여 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이용하도록 구성
▶ 수요를 접수하고 연계하는 역할, 실제 운송·돌봄·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누고 후속 지원까지 함께 설계

기본모델	어떻게 공급하는가	핵심 운영·연계 주체	주체 간 협의할 사항
5. 생활이동·동행	예약·수요응답형 운행으로 장보기·진료·관공서 이동과 고령자의 승하차·동행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접수·동행) 택시·버스사업자(면허운송)	주민 수요에 맞는 노선·시간, 운송·동행의 역할과 위탁비·이용자 부담을 협의
6. 마을돌봄·안부확인·생활안전	파트너가 안부·생활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반찬·세탁·전문돌봄으로 연계	사회연대경제조직(파트너) 보건·복지기관·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전문돌봄)	파트너의 활동 범위·시간, 전문기관 연계기준·담당, 우선지원 원칙·재원을 협의
7. 찾아가는 건강관리·의료연계	순회 건강측정·상담과 병원 예약·이동을 연결하고 진료 이후 생활돌봄까지 지원	보건소·병원·약국(의료) 사회연대경제조직(이동·돌봄)	순회일정과 예약·이동 담당, 진료 이후 돌봄을 정하고 의료·생활지원 범위를 협의

10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가사·주거·생활편의 : 5개 기본모델

▶ 마을의 작은 생활불편을 공동으로 접수하고 지역 업체·기술자와 연결하여 분산된 수요를 실제 서비스로 전환
▶ 접수·수거·방문 일정을 함께 조정하고 전문작업, 공공지원, 시설 운영의 책임과 비용을 구분하여 사업을 설계

기본모델	어떻게 공급하는가	핵심 운영·연계 주체	주체 간 협의할 사항
8. 세탁·청소·가사지원	세탁물의 수거·세탁·배송과 주택청소·정리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안부확인을 결합	세탁·청소업체(전문작업) 자활센터(인력·차량) 마을거점(수거)	수거주기와 작업 범위, 업체·차량·마을거점의 역할, 이용료·공동수거비를 협의
9. 집수리·주거환경 개선	주택 상태를 진단한 뒤 작은 수리부터 전기·수도와 단열·창호의 개선까지 연계	건축·설비업체(공사) 자활센터(인력) 주거복지부서(대상·재원)	진단에 따른 공사 범위, 작업·품질관리의 책임과 취약가구 지원기준을 협의
10. 소형 생활수리·물품대여	공동신청을 모아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리하고 생활공구·보행기를 공동으로 대여	중간지원기관(접수·정산) 지역 기술자·마을조직 (수리·공동신청)	공동신청과 방문일정을 맞추고 장비 이용방식, 수리비와 원거리 접근비용을 협의
11. 이미용·목욕·위생	정기적인 방문 이미용과 목욕시설 이동을 연결하여 거동불편가구의 위생을 지원	미용업체·복지목욕탕 (서비스·시설 제공) 이동서비스 조직(교통)	공급자·시설·차량 일정, 우선지원 원칙·이용료 지원과 방문·이동비 부담을 협의
12. 빈집·유휴공간 활용 주거·생활서비스 거점	빈집·공공시설을 정비해 주택·공동생활공간과 세탁·돌봄·문화 거점으로 활용	지자체·공공기관(공간) 건축업체(정비) 사회연대경제조직(운영)	공간의 용도·운영주체, 조성비와 운영비의 구분, 임대료·서비스수입 등을 협의

11

02 농촌의 협업 사업모델

교육·문화·정보·생업 : 4개 기본모델

▶ 교육·문화·생활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와 농가의 생산·가공·판매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검토
▶ 학교·문화시설·전문인력·생산자조직을 연결하고 공동신청과 일정·비용·판로를 조정하여 운영

기본모델	어떻게 공급하는가	핵심 운영·연계 주체	주체 간 협의할 사항
13. 아동·가족돌봄 및 생활교육	공동육아·방과후 돌봄에 마을학교·가족지원·평생학습을 결합해 돌봄·교육을 제공	학교·가족센터(교육·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기획·운영)	기관별 프로그램·시간, 공간·운영인력의 역할과 이용료·공공사업비를 협의
14. 문화·여가 접근	이동도서관·순회공연과 문화강좌·동아리를 운영하며 필요한 교통지원도 함께 연계	문화시설·예술인(프로그램) 이동서비스 조직(교통지원)	주민 수요·공간·콘텐츠, 순회일정·교통지원 담당과 관람료·공공구매를 협의
15. 생활행정·디지털 이용지원	지역화폐·복지신청·기기 이용과 금융교육을 돕고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으로 연결	읍·면사무소·교육기관 (행정·디지털·금융교육) 세무·노무 전문가(상담)	기초안내·전문상담의 범위, 접수·기관연계의 담당과 공공교육·유료대행을 협의
16. 농작업·가공·포장·배송 지원	공동인력·장비로 수확·가공·포장·배송을 돕고 급식·로컬푸드 판로까지 연결	농가·생산자조직(공동작업) 농협·가공업체(장비·물류) 급식기관(판로)	농가의 작업시기·물량, 인력·장비 이용과 비용분담, 납품수요·공급일정을 협의

12

03 협업 사례 분석

사례를 읽는 기준 : 단계·역할·자원·지속 조건

▶ 운영 사례와 계획 사례를 구분하고 조사 당시 확인한 활동·주체·자원 흐름을 중심으로 협업의 작동 방식 분석
▶ 사례의 규모나 매출을 그대로 목표로 삼기보다 우리 지역에서 재현할 기반과 추가로 필요한 조건을 확인

사례 유형	자료에서 확인한 상태
운영 중인 사례	조사 당시 실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참여주체의 운영 활동이 확인된 사례
시범운영·추진 사례	일부 활동을 시도하거나 준비를 진행하며 제공 범위와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단계
계획 사례	참여주체의 역할·차량·인력·일정이 구상되어 있으나 아직 운영 전인 단계
외부 참고사례	기본소득 시범지역 밖에서 공개자료로 활동을 확인한 농촌 협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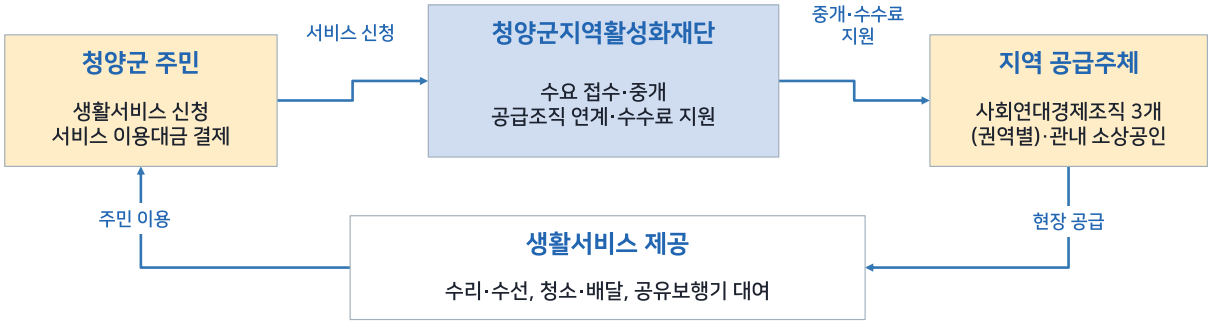
13

03 협업 사례 분석

청양 '부르면 달려가유' : 수요 접수와 공급 연계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면지역에 분산된 생활서비스 수요를 접수·중개하고 공급조직에 수수료를 지원
▶ 권역별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소상공인이 수리·수선·청소·배달을 제공하고 주민은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사례 유형: 조사 당시 운영 중인 사례
지속 조건: 접수·중개 인력과 공급조직 지원에 필요한 운영재원 확보



협업의 핵심 재단의 중개 기능과 공급조직의 현장서비스를 분담해 작은 개별 요청도 지역 공급체계에 연결하고, 주민의 이용대금과 공급조직 지원비를 구분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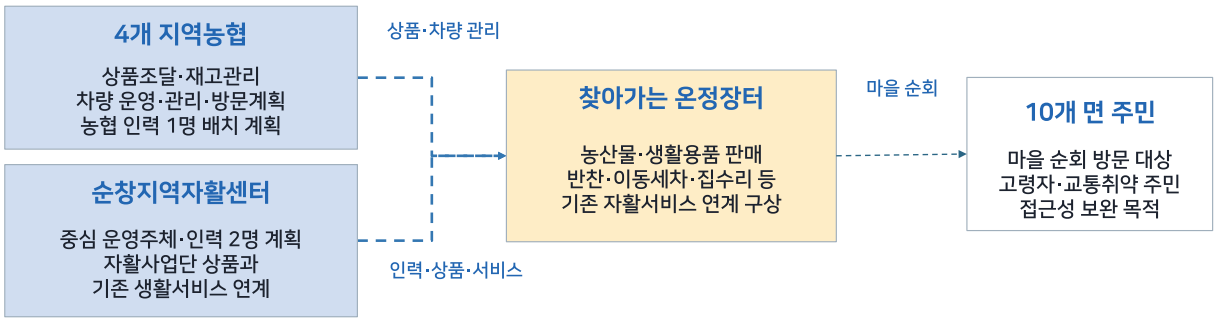
14

03 협업 사례 분석

순창 '온정장터' : 농협·자활의 자원 결합 구상

▶ 지역농협의 상품조달·차량 관리와 자활센터의 운영인력·기존 생활서비스를 결합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구상
▶ 10개 면의 마을을 순회하며 상품 판매와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령자·교통취약 주민의 접근성을 보완

사례 유형: 조사 당시 계획 사례(운영 전 단계)
운영 전 점검 과제: 차량 유지비·상품 정산·서비스 범위·역할 분담



주: 점선은 계획된 역할과 자원 흐름을 나타냄.

협업의 핵심 농협의 유통망과 자활센터의 인력·서비스를 함께 활용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이동장터가 상품 판매와 생활서비스를 잇는 전달거점이 되도록 계획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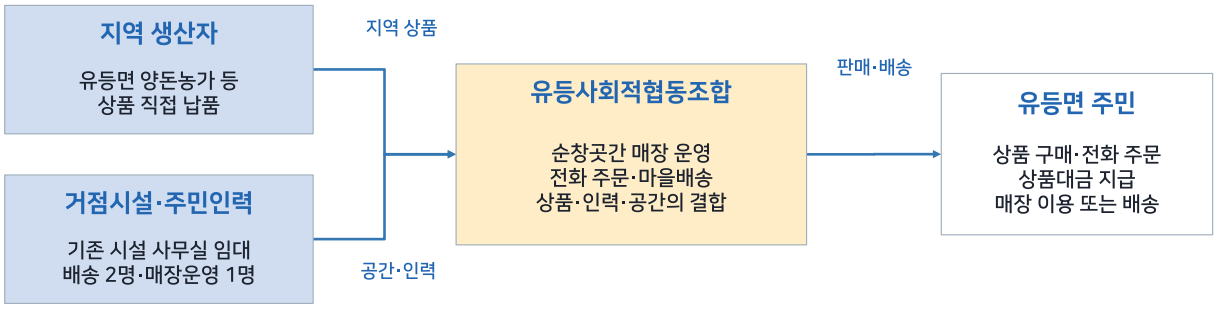
03 협업 사례 분석

순창 '순창곳간' : 지역 생산과 판매·배송의 연결

▶ 유등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해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생산자의 상품을 주민에게 판매·배송
▶ 전화 주문과 마을배송으로 장보기 접근성을 보완하면서 지역 농가의 판로와 주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

사례 유형: 조사 당시 운영 중인 사례

지속 조건: 반복 구매수요와 상품 마진으로 매장·배송 운영비를 충당



협업의 핵심 기존 시설을 매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가의 납품과 주민의 판매·배송 업무를 결합하여, 작은 면지역에서도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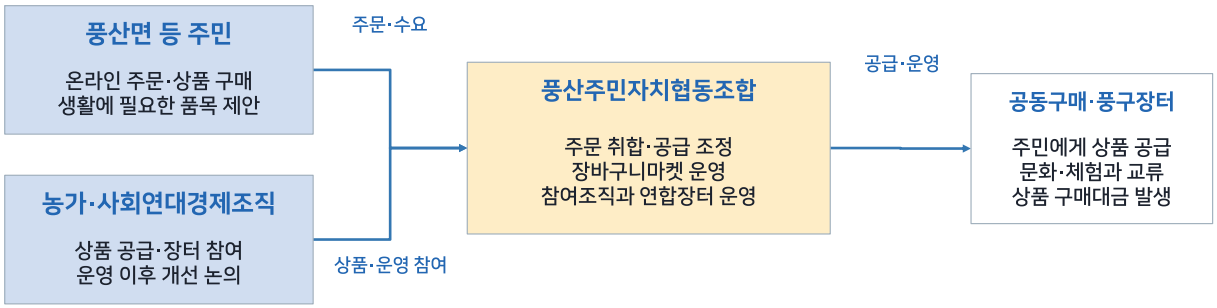
03 협업 사례 분석

순창 풍산 : 공동구매를 연합장터로 확장

▶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민 주문을 모아 상품을 공급하고 군내 사회연대경제조직·농가와 연합장터를 운영
▶ 주민자치의 관계망을 실제 구매수요로 연결하고 장터 참여자들이 운영 경험과 개선 과제를 함께 축적

사례 유형: 조사 당시 운영 중인 사례

지속 조건: 주문 취합·상품 공급·행사 운영의 실무와 비용을 분담



협업의 핵심 주민의 주문을 미리 모으는 공동구매에서 출발해 참여조직이 함께 여는 장터로 범위를 넓히고, 운영 후 문제점을 논의하며 공동사업 경험을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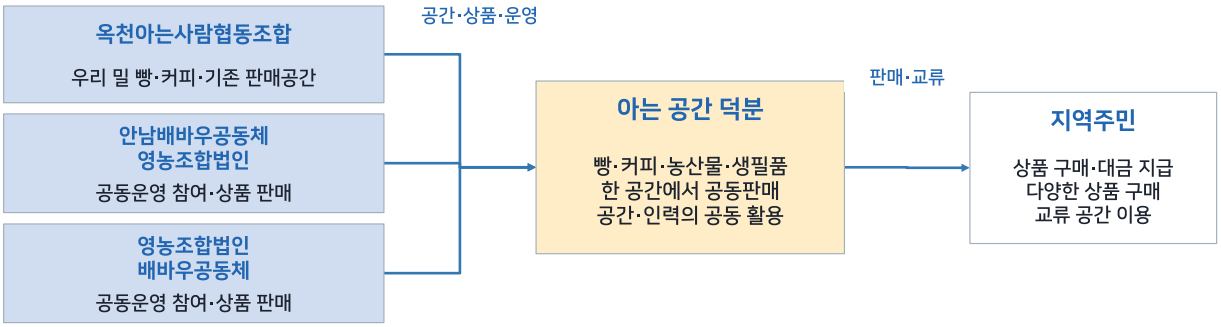
17

03 협업 사례 분석

옥천 '아는 공간 덕분' : 공동판매 공간의 운영

▶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하나의 판매공간에서 우리 밀 빵·지역 농산물·생필품을 함께 판매하는 협업
▶ 개별 매장과 인력을 따로 운영하는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구매 편의와 지역 상품의 판매기회를 함께 확대

사례 유형: 조사 당시 공동운영 중인 사례
지속 조건: 상품별 정산·공동운영비·재고 책임과 매장 실무를 명확히 합의



협업의 핵심 기존 빵·커피 매장에 다른 조직의 농산물·생필품을 더해 공동판매 공간으로 확대하고, 공간과 인력을 공유해 각 조직의 판매·유통 부담을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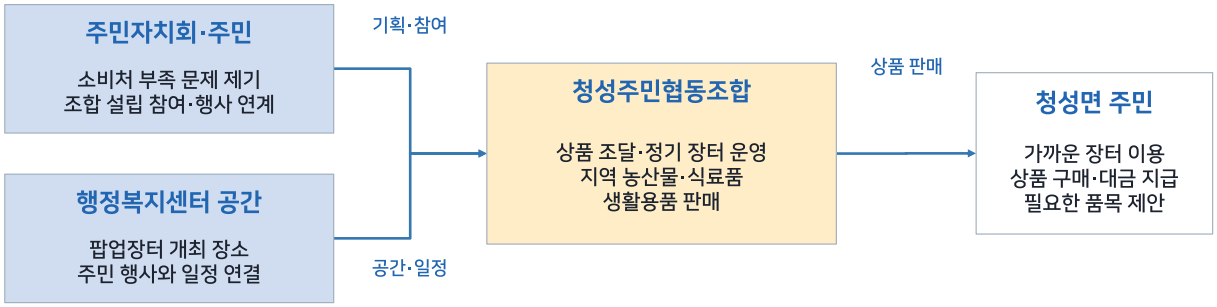
18

03 협업 사례 분석

옥천 청성 : 주민자치 활동과 팝업장터의 결합

▶ 주민자치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터 운영
▶ 주민자치 행사와 장터 일정을 연결하여 이용기회를 만들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상설 공급체계의 확대를 검토

사례 유형: 조사 당시 팝업장터 운영·상설매장 확대 계획
지속 조건: 정기 장터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상설화에 따른 고정비를 검토



주: 도식은 운영 중인 팝업장터의 구조이며, 상설매장·식당·카페는 향후 계획.

협업의 핵심 주민이 모이는 행사와 정기 장터를 연결하고 협동조합이 상품 조달·판매를 맡아, 소비처 부족이라는 생활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사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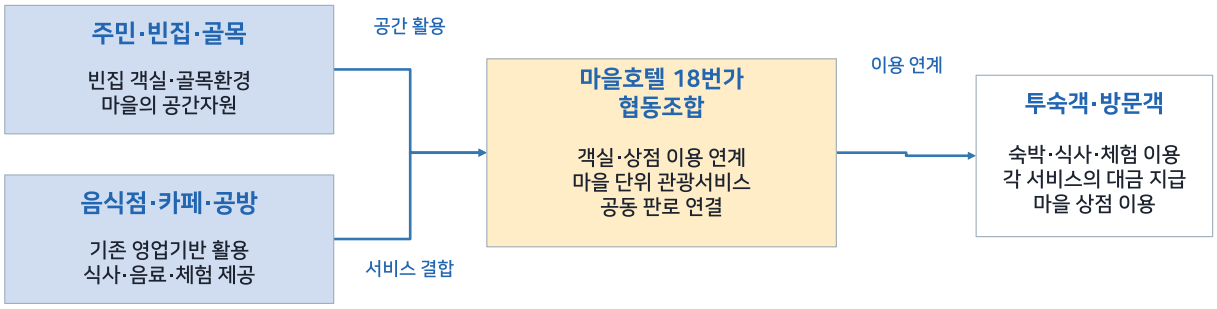
19

03 협업 사례 분석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 골목상권을 하나의 서비스로

▶ 협동조합이 빈집 객실과 음식점·카페·공방 등 기존 마을 자원을 연결하여 방문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
▶ 개별 상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이용과 판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산과 상권을 함께 활용

사례 유형: 조사 당시 운영 중인 사례(기본소득 이전 형성)
지속 조건: 참여 상점의 서비스 품질·이용 연계·공동 홍보와 운영 책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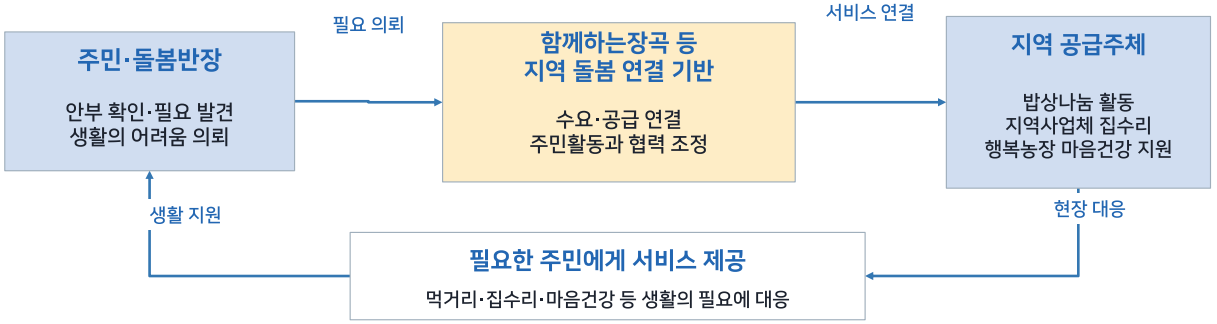
협업의 핵심 빈집 객실과 기존 식당·카페·공방을 하나의 관광서비스로 연결하여, 투숙객이 숙박과 식사·체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마을 상점을 찾도록 구성

03 협업 사례 분석

홍성 장곡 : 돌봄반장이 발견하고 지역이 함께 대응

▶ 돌봄반장이 주민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지역의 조직·사업체와 연결하여 필요한 돌봄과 생활서비스에 대응
▶ 주민의 관계망에 공급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되 수요를 연결하고 조정할 담당자와 활동기반을 함께 확보

사례 유형: 외부 참고사례: 공개자료에 운영 활동이 기록된 사례
지속 조건: 주민활동가의 활동 지원과 의뢰·응답·후속 확인의 조정체계 마련



주: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가 아닌 농촌 돌봄 협업 참고사례.

협업의 핵심 돌봄반장이 일상에서 발견한 어려움을 지역 조직에 의뢰하고, 밥상나눔·집수리·마음건강 등 필요한 기능을 연결하여 한 조직이 맡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

03 협업 사례 분석

영광 묘량 : 전문돌봄과 이동점빵을 잇는 공동체 기반

▶ 여민동락공동체가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해 노인복지센터와 동락점빵 형성을 지원하며 돌봄·장보기 기반 확장
▶ 주간보호·방문요양과 생활필수품 공급을 주민의 일상 안에서 연결하되 각 사업의 운영기반과 책임을 구분

사례 유형: 외부 참고사례: 공개자료에 운영 활동이 기록된 사례
지속 조건: 전문돌봄과 유통사업의 운영기반을 각각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유지



주: 공동체 기반과 서비스 관계를 표시하며, 기관 간 수익 이전·통합 배차는 가정하지 않음.

협업의 핵심 공동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조직의 형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센터의 전문돌봄과 동락점빵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각각 마련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장

22

03 협업 사례 분석

사례 비교 :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협업 기능 찾기

▶ 생활서비스 사례는 수요 중개·자원 결합·공동판매·주민조직·상권 연계 등 핵심 협업 기능에 차이
▶ 사례의 겉모습을 복제하기보다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기능과 이를 맡을 주체를 먼저 찾아 적용 조건을 검토

핵심 협업 기능	관련 사례와 작동 방식	우리 지역에서 먼저 확인할 조건
수요 발견·중개	청양은 재단이 서비스 요청을 중개하고, 장곡은 주민활동가의 발견을 지역 돌봄과 연결	요청 접수·의뢰·응답·후속 확인 담당자를 정하고 연결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활동재원을 확보
상품·차량·인력 결합	온정장터는 농협·자활의 자원 결합을 계획하고, 순창곳간은 지역상품 판매와 주민 배송을 운영	누가 상품을 조달하고 차량·인력을 제공할지 정하며 주민 수요와 배송에 드는 비용을 함께 검토
공동판매·주민수요 조직	아는 공간 덕분은 판매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풍산·청성은 주민의 수요와 장터 참여를 연결	공동매장·장터의 실제 구매수요를 확인하고 운영 실무·재고·정산·공간비의 분담을 합의
기존 사업·지역자원 연결	마을호텔은 객실과 상점을 관광서비스로 잇고, 여민동락은 돌봄·장보기의 공동체 기반을 형성	각 사업의 운영기반과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연결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홍보·책임을 구체화

23

04 우리 지역의 협업 설계

적용 ① 수요조사 :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이용을 구분

▶ 주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 빈도·시간·가격·이동 조건을 함께 확인
▶ 주민 설문과 공급자 면담을 연결하고 사전주문·소규모 운영으로 실제 이용수요와 공급 부담을 확인할 필요

확인 항목	주민에게 물을 질문	공급자와 대조하여 정할 운영 조건
필요와 현재 대안	지금 어떤 일이 불편하며 어디에서 해결하는가? 현재 이용하는 곳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서비스와 중복되는지 살피고 공동사업이 보완할 대상과 공급 범위를 정함
이용 빈도와 시간	얼마나 자주, 어느 시간에 이용하려 하는가? 매일 필요한지 특정 요일·계절에 몰리는가?	최소 주문량과 운영시간, 이동·배송 동선을 공급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대조함
비용과 지불주체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인가?	상품·서비스 원가와 이용료를 함께 계산하고 공공수요·지원재원으로 보완할 범위를 검토함
접근성과 이용 의사	방문·전화주문·배송 중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 이용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접수 방식·인력·차량을 구체화한 뒤 사전주문이나 작은 운영으로 실제 이용을 확인함

24

04 우리 지역의 협업 설계

적용 ② 자원 분석 : 보유 여부보다 실제 사용 조건 확인

▶ 지역의 조직·공간·차량·인력·정책사업을 목록화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권한을 확인
▶ 부족한 자원을 새로 확보하기 전에 기존 자원의 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리·유지 책임까지 함께 설계

자원	보유 여부와 함께 확인할 내용	공동 사용 전에 협의할 조건
조직·인력	현장 경험과 담당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업 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여력을 파악	맡을 업무와 시간을 구체화하고 인건비·교육비, 담당자 부재 시 업무를 이어받을 주체를 협의
공간·시설·차량	위치·설비·가동 시간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과 주민 접근에 적합한지 검토	실제 사용권한·예약 방식·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임차료·유지비·차량비의 부담 기준을 합의
상품·서비스·수요처	일정한 품질과 물량을 반복 공급할 수 있는지, 이미 거래하는 주민·기관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	최소 물량·품질·납기와 조달 방식을 맞추고 공급이 중단될 때의 대체 방법을 함께 검토
정책사업·운영재원	사업 목적·지원 항목·지속 기간을 살펴 공동사업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지 확인	초기 투자와 반복 운영비를 구분하고 지원 종료 후 남는 업무·비용의 부담을 협의

25

04 우리 지역의 협업 설계

적용 ③ 역할·수입·비용 : 공동사업의 운영 합의

▶ 서비스 접수부터 공급·정산·민원 대응까지 업무의 책임자를 정하고 각 주체의 투입과 보상을 함께 검토
▶ 상품 매출·이용료·공공수요 등 수입원을 구분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손익 분담기준 합의

접수	공급	정산	조정
주민의 주문·요청 확인 이용 조건과 일정 안내	상품·서비스의 실제 제공 배송 일정과 품질 관리	매출·비용·재고 기록 지급·배분 내역 확인	업무 공백과 민원 대응 참여주체 간 이견 조정

수입 구조: 운영비를 충당할 재원

상품 마진·이용료·공공수요 등 수입원을 구분하고, 지급 주체와 수입의 대가를 명확하게 정함.

비용 구조: 투입과 부담의 기준

인건비·임차료·차량비·재고 부담을 계산하고, 초기 투자와 반복 운영비를 구분하여 각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정함.

정산 주기, 수입 배분과 손실 부담, 품질·민원·탈퇴 처리 기준을 운영 합의문에 기록

26

04 우리 지역의 협업 설계

핵심 정리 : 필요한 기능을 연결하고 작게 검증

▶ 협업은 참여조직의 수보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역할과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
▶ 수요와 핵심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실행 경험을 통해 역할·비용·품질 기준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범위로 확대

01	**문제·수요 확인** 누구의 어떤 필요인가?	주민의 생활 불편과 반복 이용수요를 구체화하고, 우선 공급할 서비스와 이용자를 정함.
02	**자원·주체 연결** 누가 무엇을 맡을 것인가?	공급·접수·정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고, 실제 투입할 인력·공간·차량을 확인함.
03	**작은 공동 운영** 운영해 보니 무엇이 다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이용·업무량·수입·비용을 기록함.
04	**운영 조정·확대** 어떤 조건에서 계속할 것인가?	참여주체가 결과를 함께 평가하고 역할·비용·품질 기준을 보완한 뒤 유지·수정·확대를 결정함.

27

05 질의응답

질의응답 : 우리 지역에서 시작할 협업 한 가지

▶ 우리 지역의 시급한 생활서비스 공백을 하나 고르고 실제 이용자·공급주체·조정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설정
▶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수요와 자원을 바탕으로 첫 협의 안건을 정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조건을 함께 정리

논의할 질문	우리 지역에 적용하여 정리할 내용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누구의 어떤 불편을 해결할지 한 가지로 좁히고, 현재 이용하는 대안과 공동사업이 보완할 부분을 설명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공급자·주민조직·농협·행정·지원기관 중 필요한 기능을 맡을 주체를 찾고, 각 주체가 내놓을 수 있는 자원과 참여 이유를 확인
무엇부터 합의할 것인가?	실제 수요·자원 사용·운영 담당·비용 부담 중 가장 불확실한 항목을 고르고, 첫 협의에서 함께 확인할 자료와 결정할 내용을 정리
첫 행동은 무엇인가?	누구를 먼저 만나고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정하며, 작은 규모로 운영해 볼 범위와 결과를 확인할 방법을 구체화

부록 지역별 참고 및 실습

부록 1. 10개 시범지역의 협업 검토 지점 (1/2)

▶ 기존 자원과 제안된 연계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여 우리 지역에서 검토할 파트너와 기능을 찾는 참고자료로 활용

지역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연결	협업 검토 지점
연천	농협을 통한 농가·식당·숙박업체 연결	직거래·조달·생활권 공급조직
정선	지역상권·관광·창업·돌봄 서비스 연계	상인·협동조합·행정의 기능 분담
청양	SMART 청양·다-돌봄·주민조직 결합	재단의 중개·공급조직·주민자치
순창	생활서비스 실행조직·지역상품·공유부	주민조직·농협·자활·거점시설
신안	지역화폐 재사용·생활서비스 공동체	가맹점·생산자·공동체의 반복 거래

부록 지역별 참고 및 실습

부록 2. 10개 시범지역의 협업 검토 지점 (2/2)

▶ 이동형 서비스·활동가·공동체 거점 등 유사한 방향도 지역의 기반과 실행주체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짐
▶ 공급조직 육성과 기존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운영인력·조정 기능·지속재원 확보 여부를 점검

지역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연결	협업 검토 지점
영양	창농·창업·지산지소·농촌서비스 공동체	읍·면 수요와 서비스 공급주체
남해	이동판매·사회서비스·지역 간 소비 균형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전문인력
옥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공동구매·공동배송	기존 기업·주민조직·농촌협약
장수	면 거점·이동마켓·생활서비스·재투자	행복나눔터·청년·자활·공동체
곡성	이동형 생활서비스·기존 마을공동체 활용	주민·활동가·공급조직의 연계

부록 2

부록 지역별 참고 및 실습

부록 3. 우리 지역 협업 구상표

▶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요·참여주체·자원 흐름·수입과 비용을 같은 표에 적어 협의할 사항을 구체화
▶ 확인한 사실과 앞으로 확인할 가정을 구분하고 첫 협의에서 결론을 내릴 항목과 추가 조사할 항목을 정리

작성 항목	구체화할 질문	우리 지역 메모
문제·이용자	누구의 어떤 필요와 반복 이용수요인가?	
참여주체·역할	누가 접수·공급·정산·조정을 맡는가?	
자원·흐름	상품·서비스·공간·인력·대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수입·비용	반복수입과 운영비, 손익 분담기준은 무엇인가?	
확인 과제·첫 행동	가장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와 먼저 협의할 것인가?	

부록 3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라서현 대표
(주식회사 라인교육연구소)

2026 농촌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업교육

지역수요에서 실행까지
협력모델 디자인 워크숍

2026. 10. 22.(목)

라인교육연구소
Local education & Consulting

진행내용

시 간	교육내용	결과물
10:00~12:00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①** 지역 생활수요·소비흐름 진단 및 사업기회 발굴	모둠별 핵심의제
13:00~15:00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②**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협력모델 구체화	협력모델 캔버스
15:00~17:00	**부서 간 칸막이 넘기** 민관 협업구조 및 실행체계 설계	협업체계 · 실행계획

02

PART 1 · 10:00~12:00

지역의 필요에서 사업기회 찾기

01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①지역 생활수요·소비흐름 진단 및 사업기회 발굴

01 사회연대경제란 무엇인가요?

어제 배운 내용 다시 보기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주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제를 풀어 가는 경제입니다.

대표적인 조직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농촌공동체회사
- 자활기업

농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필요한 이유

- 민간 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운 생활서비스가 늘어남
-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은 이용자가 적어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음
- 지역 안에서 돈과 일자리가 돌아 지역에 남는 몫이 커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2026년 현재 17개 군(전북 순창·장수·진안·무주 포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서비스 공동체·사회적기업을 사용처로 등록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려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강의자료

04

02 주민의 돈은 지역 안에서 몇 번 돌까요?

[새는 양동이 이론] 지역에 돈이 들어와도 지역 밖 업체에서 쓰이면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지역 승수효과] 같은 돈이 지역 안 가게와 조직에서 여러 번 다시 쓰일수록 지역에 남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돈이 새는 모습

기본소득을 받아도 면에는 상점이 없어 읍내나 다른 지역에서 씀

돈이 다시 도는 모습

'아는 공간 덕분'에서 생필품과 지역 농산물을 함께 팔아 면 안에서 쓰임

주민의 생활수요를 살펴 볼 영역

먹거리 반찬·식사·공동급식 | 돌봄 아동·노인·가사 | 이동 장보기·병원 | 건강 운동·건강관리 | 주거 집수리·빈집관리
문화·여가 취미·주민모임 | 교육 아이 교육·평생학습 | 농업 농작업·가공·유통 | 관계 교류·공동체활동

LM3 · 돈이 도는 세 단계

① 기본소득이 주민에게 지급됨 → ② 주민이 지역 가맹점에서 씀 → ③ 가맹점이 지역 고용·지역 업체 구매로 다시 씀

출처: New Economics Foundation(2002) 「Plugging the Leaks」, 한국농정신문(2026.8.23),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05

03 서비스 공백 찾기

서비스 공백은 주민의 필요가 있는데도 지역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장도 행정도 손이 닿기 어려운 이 지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할 일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는 여섯 가지 경우

1.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 아예 없음
2. 서비스는 있지만 이용하기 어려움
3. 가격이나 거리가 부담됨
4. 이용자가 적어 민간 업체가 들어오지 않음
   인구 3천 명 이하 읍·면
   2000년 32% → 2025년 52%
5. 행정서비스만으로 다 채우기 어려움
6. 여러 기관이 관련되지만 맡은 곳이 분명하지 않음

1일차 사례 · 청양 '부르면 달려가유'

주민의 필요	작은 수리·청소·배달 요청
서비스 공백	작고 흩어진 요청을 맡을 곳 없음
해결한 방법	재단이 요청을 받아 연결
함께 한 곳	사회연대경제조직 3곳·소상공인
결제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강의자료 재인용)

06

04 생활 속 불편을 사업기회로 바꾸기

우리가 발견한 불편사항을 곧바로 사업으로 만들면 주민에게 맞지 않는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단계별로 질문을 이어 가면서, 불편사항을 지역의 공동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봅시다.

1 · 문제	2 · 필요	3 · 지역자원	4 · 사업기회
무엇이 불편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	함께 무엇을 할까?
(예시) 고령의 주민이 매 끼니를 챙기기 어려움	(예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예시) 지역 농산물, 주민조직, 마을 공유주방, 돌봄기관	(예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령자 식사 지원

좋은 의제를 고르는 기준

① 필요성	② 사회적 가치	③ 지역자원	④ 협업 필요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나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나	사람·공간·상품을 쓸 수 있나	함께할 때 더 잘 되나

고르는 순서 ① 필수 지출 지키기(먹거리·생필품) ② 서비스 지역화(돌봄·이동) ③ 지역 자산화(에너지·문화)

07

워크시트 1 생활수요와 서비스 공백 찾기

사업 아이디어부터 내면 익숙한 프로그램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함께 모아야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주민 ☐ 농업인 ☐ 고령자 ☐ 청년 ☐ 아동·청소년 ☐ 육아가정 ☐ 귀농·귀촌인 ☐ 1인가구 ☐ 기타 _____

생활 영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	지역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일
예) 먹거리	면에서 생필품 살 곳	읍내까지 나가서 구매	이동이 어렵고 시간이 듦	마을협동조합 공동슈퍼

08

워크시트 2 사업기회 고르고 핵심의제 정하기

이후 시간에서 내내 다룰 의제 한 가지를 고릅니다.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면 목소리 큰 의견에 쏠리지 않고 모두가 납득하는 의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1에서 나온 사업기회	필요성	사회적 가치	지역자원	협업 필요성	합계
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②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③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우리 모둠의 핵심의제

우리는 _____ 을/를 위해

_____ 을/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른 이유와 활용할 지역자원

09

PART 2 · 13:00~15:00

아이디어에서 협력모델 만들기

02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 구성 ② ·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협력모델 구체화

05 협업사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여러 주체가 함께해야 가능한 사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 조직이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함께할 주체를 더 찾아봅니다.

한 조직이 혼자 하는 사업

- 재원 하나에 기대는 경우가 많음
- 담당자가 바뀌면 멈추기 쉬움
- 한 조직의 성과로 남음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사업

-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 맡음
- 재원과 자원을 함께 모음
- 지역의 공동 성과로 남음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대상을 좁게 정할수록 필요한 서비스가 분명해지고, 함께할 주체도 쉽게 떠오릅니다.

[누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 읍내에서 먼 마을에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은 차가 없어 병원과 장보기를 가족이 오는 날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생활이동 지원이 필요하다.

11

06 캔버스로 다시 보는 1일차 사례 · 순창곳간

유등사회적협동조합이 면 지역에서 생필품 매장과 마을배송을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1일차 강의 내용을 협력모델 캔버스 8칸에 옮겨 보았습니다.

1 · 대상	2 · 문제	3 · 서비스	4 · 참여 주체
군내 인구가 가장 적은 유등면 주민 (1,016명)	작은 면 지역이라 생활필수품을 사기 어려움	지역 상품을 파는 매장, 전화 주문과 마을배송	유등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생산자(양돈농가 등), 주민 인력
5 · 역할	**6 · 재원·자원**	**7 · 운영**	**8 · 성과**
협동조합 – 매장·배송 운영 생산자 – 상품 직접 납품 주민 – 배송 2명·매장 1명	상품 판매 마진, 기존 거점시설 공간 활용	매장을 열고, 전화 주문을 받아 마을로 배송	2026.3.9. 개업, 일 매출 약 300만 원, 복흥면 2호점 개점

오래 가는 조건 · 반복해서 사는 주민이 있고, 판매 마진으로 매장·배송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1일차 정지영 소장·황영모 선임연구위원 강의자료

12

워크시트 3 협력모델 캔버스 작성

협력모델 캔버스는 사업 전체를 한 장에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기업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Osterwalder & Pigneur, 2010)를 참고해 지역 협업사업에 맞게 8칸으로 줄였습니다.

1 · 대상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나이, 사는 곳, 생활 형편까지 좁혀서 기록해 주세요.	**2 · 문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3 ·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나? 언제, 얼마나 자주, 어디서 제공하는지까지	**4 · 참여 주체** 누가 함께해야 하나? 행정, 조직, 주민, 기관을 모두 떠올려 주세요.
5 · 역할 누가 무엇을 맡나? 참여 주체마다 맡아야 할 일들을 적어 주세요.	**6 · 재원·자원** 돈과 자원은 어디서 오나? 이용료, 지원사업, 공간, 인력으로 나눠서 기록해 주세요.	**7 · 운영** 어떻게 운영하나? 제공 주기, 회의 일정, 연락 창구 등 운영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8 · 성과** 무엇이 달라지면 성공인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2개를 기록해 주세요.

13

PART 3 · 15:00~17:00

부서 간 칸막이 넘기

03

민관 협업구조 및 실행체계 설계

07 칸막이는 왜 생기고, 어떻게 넘을까요?

칸막이가 생기는 이유

- 부서마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름
- 예산이 사업별로 나뉘어 있음
- 담당자가 자주 바뀜
- 서로의 사정과 쓰는 말을 잘 모름

그래서 필요한 것

칸막이는 대부분 제도와 관행에서 생깁니다.
의지만으로는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정한 약속과 운영 규칙이 있어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협업이 이어집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자라는 다섯 단계

1	2	3	4	5
마주 앉은 대화	신뢰 쌓기	함께하겠다는 약속	같은 이해	작은 성과
얼굴을 보고 사정을 나눔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임	각자 맡을 몫을 받아들임	문제와 목표를 같게 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시 신뢰를 키움

출처: Ansell, 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

08 함께 성과를 내는 다섯 가지 조건

컬렉티브 임팩트는 여러 조직이 한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풀 때 성과를 내는 조건을 정리한 이론입니다.
오늘 작성한 워크시트가 각 조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보세요.

조 건	의 미	우리의 결과물
1. 공동의 의제	모두가 같은 문제와 목표에 합의함	워크시트 2 · 핵심의제
2. 공동의 성과 측정	같은 지표로 성과를 확인함	워크시트 3 협력모델 캔버스 · 성과
3. 서로 보완하는 활동	각자 잘하는 일을 맡아 서로 이어 줌	워크시트 5 · 역할 나누기
4. 꾸준한 소통	정기적으로 만나고 정보를 나눔	워크시트 4 · 운영 규칙
5. 중심 지원 조직	연락, 조정, 기록을 맡는 곳이 있음	워크시트 4 · 간사 조직

출처: Kania, J. & Kramer, M.(2011),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16

09 행정과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

행정, 사회연대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은 잘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각자의 강점을 알고 있으면 워크시트 5에서 역할을 나누기 쉬워집니다.

행정 · 지자체 담당 부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 지역기관
• 제도·예산 연계 • 관련 부서 간 조정 • 대상자 정보·공공시설 연계 • 사업의 공신력과 지속성	• 주민 가까이에서 필요 발견 • 주민과의 신뢰관계 • 상황에 맞춘 서비스 운영 • 지역 자원과 사람 연결	• 교육·컨설팅 지원 • 조직 사이의 연결과 조정 • 정보·사례 공유 • 성과 정리와 확산
단위별		
• 마을 · 나눔과 작은 돌봄	· 읍면 통합 돌봄, 이동권, 창업 지원	• 군 · 광역 연계, 모니터링, 기금 운영

단위별 역할 출처: 1일차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강의자료

17

워크시트 4 협업을 위한 운영 규칙

왜 하나요? 함께 지킬 운영 규칙을 미리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협업이 이어집니다.

운영 규칙	세부내용
결정은 누가	
회의 주기	
정보 공유	
예산·자원	
간사 조직	
성과 점검	

18

워크시트 5 역할 나누기와 30일 실행계획

왜 하나요? 누가 무엇을 맡고 언제 처음 모일지 정해야 교육장에서 만든 계획이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참여 주체 (조직·부서)	내놓을 수 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	맡을 일

교육 후 30일 안에 할 일

① 가장 먼저 할 일	② 만나야 할 사람	③ 확인할 제도·예산	④ 첫 모임 날짜 장소 참석

19

MEMO

MEMO